

정대협·정의연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

연대로 함께 한 30년

평화의 희망이 될 정의연

프로그램

등록 및 인사말

사회: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인사말-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1부 정대협, 정의연 30주년 심포지엄(10:10~17:30)

세션 I 정대협 운동 30주년의 역사와 의미: 우리가 만들어 온 길, 걸어온 길(10:10~12:10)

사회: 정진성(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발표 1. 정대협 운동의 태동과 결성, 피해자들과 함께 걸어온 30년의 의미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표 2. 피해자와 함께 한 사람들

국내 - 안이정선(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 대표),

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김대월(나눔의집

역사관 학예실장)

해외 - 양징자(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이정실(미국 워싱턴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이사장), 박은덕(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추진위원회 전 공동대표)

세션 II. 포스트-피해자 시대와 책임(13:30~16:00)

사회: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포스트-피해자 시대의 법적 책임-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2. 포스트-피해자 시대의 정치적 책임-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발표 3. 포스트-피해자 시대의 역사적 책임-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주제 토론: 이상희(변호사), 강정숙(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세션 III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30년, 미래세대 토론(16:20~17:30)

사회: 강성현(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교수)

- 30주년 설문조사 발표
- 각 세대가 경험한 일본군'위안부'문제 인터뷰 영상
- 2~3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라운드 테이블

- 김태정(두레방), 최나현(한베평화재단), 최성용(성공회대), 최예린(서울대)

2부 정대협 30주년 기념식(17:30~18:00)

사회: 협이와 연이

세션 I .

정대협 운동 30주년의 역사와 의미

- 우리가 만들어 온 길, 걸어온 길

사회: 정진성(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정대협’ 운동

3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의 역사

정대협/정의연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0.11.1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1

1. 오랜 침묵을 깨다!

2

1 | 오랜 침묵의 얼음을 깨다!

배경

- 1) 윤정옥 교수: 동시대 여성들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
- 2) 이효재 교수: 한국여성학, 분단사회학의 창시자
- 3)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여성들
- 4)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함께 한 한국여성운동의 성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3

1 | 오랜 침묵의 얼음을 깨다!

“1943년, 내 기억에 11월이었던 것 같아. 대학 1학년, 열일곱 살이었을 것 같아, 고등학생 때부터 선생님이 간호원으로 나가라고 자꾸 그랬어. 정신대로 가라는 거지. 대학 갔을 때는 굉장히 심했어. 일반 남자들은 강제 징용으로 막 그냥 잡아 갈 때지. 학도병 나가라고 하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나가라 그러고... 여름 방학 지나고 둘째 학기부터는 더 심해졌어. 어느 날 우리 1학년을 본관 1층 지하실에 다 집어넣어.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한 거지. 군복 입은 사람하고 누군가가 외선 말이지, 네모반듯한 종이를 나눠 줘. 인쇄 글자가 뻑뻑하게 들어있는데, 우리한테 읽을 시간도 안 주고 인주를 나눠 주더니 지문을 찍으래.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고 그거 찍어선 싹 걷어 가지고 나가.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몰라”

(구술자: 윤정옥, 출처: 20년간의 수요일, 110쪽).



배경

- 1) 윤정옥 교수: 동시대 여성들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

4

1 | 오랜 침묵의 얼음을 깨다!

배경

2) 이효재 교수: 1세대 한국여성운동가, 한국여성학과 분단사회학의 창시자

1987~1990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회장

1987~1998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사,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이사장

1990~1992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199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여성의 인간적 주권확립은 우리가 속한 민족의 주권회복 및 확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통찰하고, “여성인권과 민족자주를 회복하려는 시대적 과제”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주목. 선생님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식민지배 당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이자 그에 대한 “책임이 청산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가장 상징적 문제”로 보고, 일본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5

1 | 오랜 침묵의 얼음을 깨다!

배경

3)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여성들

1970년대부터 기생관광반대, 원폭피해자 지원, 최루탄 반대운동, 민주화 운동
유신체제 하 축적된 국내외 연대 경험과 운동성

최초로 ‘위안부’ 문제 공론화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 즈음, 성명서 발표, 정신대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사죄를 최초로 언급

“[한일]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으려면 조속히 타결해야 할 문제로 여자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사죄해야 한다....일제 말기 한민족에게 가해진 수탈정책 중의 하나가 ‘정신대’ 동원이었다.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여자들을 동원하여 군위안부로 보냈으며, 성도구로 비참하게 짓밟았다...이대로 묵과 할 수는 없다. 꼭 사과를 받아야 한다”(교회연 제 16회 정기총회 보고서).

6

1 | 오랜 침묵의 얼음을 깨다!

배경

〈여성과 관광문화〉 국제세미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1988년 4월 21일~23일, 제주도에서 개최

- “정신대 발자취를 따라” 일본 답사팀
(윤정옥, 김신실, 김혜원)의 결과 발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제기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산하 정신대연구위원회 설치
- * 정신대연구위원회는 1990년 7월 10일 정신대연구회
(現 한국정신대연구소)로 독립



“정신대 발자취를 따라” 일본 답사팀
(윤정옥, 김신실, 김혜원)/김혜원 기증

〈여성과 관광문화〉 국제세미나/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7

1 | 오랜 침묵의 얼음을 깨다!

배경

4) 1980년대 한국여성운동의 성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을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외세에 의한 분단,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기본적 자유의 억압과 민중억압적 경제정책으로 인식”

8. 여성을 상품화하는 기생 관광 정책을 중단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선언문(1987년 3월 8일, 출처: 한국여성
단체연합 홈페이지)



8

2. 결성과 성장

9

2 | 결성과 성장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하다!

- 1)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모토오카 쇼지 의원의 강제 연행과 '중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요청

→ '국가동원령은 중군위안부와 관계없다',
'중군위안부는 민간업자가 데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시미즈 쓰타오의 발언.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다."

- 1990년 6월 6일 일본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 2) 정신대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문건(공개서한) 작성
- 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37개의 여성단체가 연대해 일본 정부의 망언에 대한 공개서한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개최(1990년 10월 17일)



일본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일본 대사관에 <공개서한> 전달, 1990.10.17/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10

2 | 결성과 성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현판식,
1992.11.16/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 1) <공개서한> 전달 이후 37개의 여성단체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 2) 37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1990년 11월 16일)
- : 일본군 '위안부' 실태 파악, 여론화, <공개서한>의 6가지 요구 항목 이행 촉구, 비극적 역사의 반복 방지

11

2 | 결성과 성장

피해 생존자의 등장

- 1)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金學順)의 기자회견
(1991년 8월 14일)
- 2) <정신대 신고전화> 개설(1991년 9월 18일)
- 3) 관련 사료(史料)의 발굴
: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일
본 육군성 문서 발굴, 미군 보고서 등
- 4) 피해자 증언집 발간
- 5) 진실규명을 통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본격화



피해생존자의 등장

<정신대 신고전화> 개통식, 1991.9.18/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12

2 | 결성과 성장

정기 수요시위

- 1)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2) 일본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의 망언에 항의하며 시작

피해자 지원 활동

- 1) 피해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목적
- 2)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 모금운동 전개
-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1993년 6월) 제정



제1차 정기 수요시위, 1992.1.8/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성금전달식, 1993.7.26/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13

2 | 결성과 성장

초국적 연대를 통한 글로벌 여성인권운동 주도

- 아시아연대회의
(1992년 8월 시작, 20년 간 15차 회의 개최)
- UN 활동 (유엔인권소위원회 참가, 1992년 8월, 황금주 참석)
- 비엔나 인권대회 참석(1993년 6월, 김복동 참석, 북한 장수월과 만남)
- 북경 여성대회 참석 (1995년 9월)
유엔인권위원회의 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와 유엔인권소위원회의 '게이 맥두걸 보고서(1998)'
- 국제노동기구(ILO)에서의 활동
- 남북연대
- '2000년 법정' (2000년 12월 7일-12일, 도쿄)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 1992.8/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UN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참가 1992.8/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비엔나세계인권회의의 참석, 1993.6/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14

3. 변화와 확장

15

3 | 변화와 확장

희망과 연대, 책임계승과 교육의 장(場)
으로 확장된 수요시위

- : 슬픔과 애도를 넘어 희망과 연대의 장
- : 피해자와 다양한 세계 시민들이 만나는 공간
- :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열린 공간
- ✓ ‘나비’ 이미지: 해방, 재생과 새로운 삶
- ✓ 노랑과 보라의 의미: 희망과 연대, 고귀함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수요시위

제1,400차 정기 수요시위, 2019.8.14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16

3 | 변화와 확장

평화의 소녀상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

피해자들의 분노, 슬픔, 고통, 희망이 복합적으로
엮혀 있는 상

“만약 나왔다면,” “내 딸이었다면”이라는 상상(김서경)

: 기념이나 단순 추모가 아니라, 기억과 계승 강조

: 피해자성을 넘어 주체성 강조

: 시민들이 “역사를 상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의사소통 가능”한 형태 (interactive)



17

3 | 변화와 확장

기억과 교육의 터전 마련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개관 (2012년 5월 5일)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 일본군‘위안부’문제 및 여성인권, 평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관리

: 전시와 연구, 교육을 통한 기억과 전승의 공간



박물관 건립위원회 박죽식, 2004.12.16/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박물관 〈희망의 터 다시기〉 행사, 2009.3.8/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18

3 | 변화와 확장

기지촌여성인권연대 (2012년)

두레방과 햇살사회복지회 등 기지촌 여성인권 단체들, 변호사, 연구자 등 결합

- 2009년 5월, 길원옥 할머니 기지촌 안정리 방문
- 유사한 아픔을 겪은 여성들 간의 연대, 상호성장, 구조적 유사성과 연속성 인식: 식민지와 전쟁, 여성에 대한 폭력의 교차, 제국주의와 군사주의, 지역 가부장 문화의 교차, 젠더와 계층, 인종차별의 교차

→ 여성평화인권 연대, 탈식민 여성연대



19

3 | 변화와 확장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나비기금> (2012년 3.8여성대회)

: 김복동과 길원옥

“우리과 같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써 달라”

: 콩고, 우간다, 베트남 등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의 생존과 자활 지원

: 첫 수혜자는 콩고의 레베카 마사카 카추바 (Rebecca Masika Katsuva)

- ✓ 피해생존자가 다른 피해생존자에게, 서발턴이 서발턴에게, 우리 내부의 타자들에게까지 → 한 차원 더 승화된 운동



나비기금 설립 기자회견, 2012.3.8/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나비기금 첫 수혜자 레베카 마사카 카추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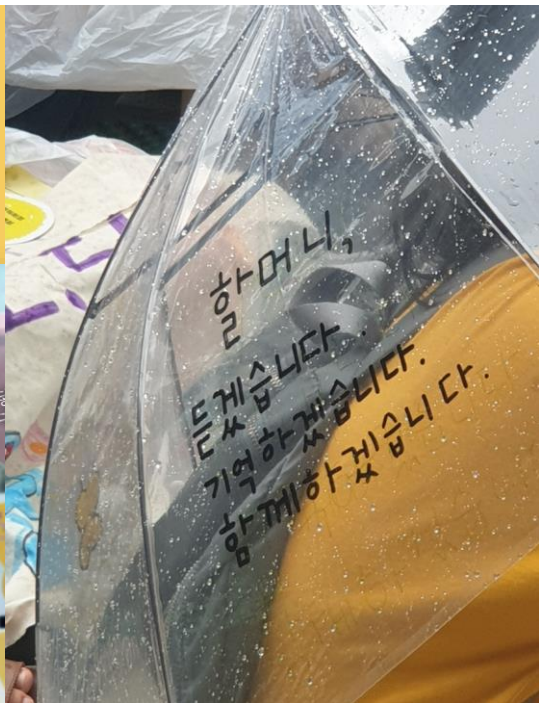
20

4. 나가며

21

4 | 나가며

2020년,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며!



22

대구경북의 피해자들과 ‘함께’해 온 해결운동

안이정선((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대표)

I. 여성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로

1987년 6월 이후 민주화운동의 큰 물결이 시작되면서 보수적인 가부장제의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던 대구에도 여성운동단체가 생겨났으니 “주체적인 여성, 평등한 사회”를 외치며 출범한 대구여성회가 그것이었다.

1995년 2월 대구여성회는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를 결성하고 지역에 계신 피해자분들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과 함께 일본의 국민기금 반대운동을 벌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할머니댁을 방문할 때 같이 가고 싶다는 요청이 정대위로 오기도 하고, 정대위의 행사에 다양한 단체의 회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 새로운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동안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1997년 12월 29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을 창립하게 되었다.

II. 정신대시민모임의 활동들

1. 생존자 복지 지원

전쟁이 끝났으나 귀국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캄보디아에서 살아오다 우연히 발견된 훈 할머니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어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던 훈춘의 ‘위안부’ 피해자 조윤옥 할머니의 고국방문 추진운동을 진행하였다.

할머니들은 해마다 연초에 1995년 8월 이후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의료지원을 담당해 주고 있는 광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필요시 감기약 타고 주사맞기부터 수술과 입원치료 등 모든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할머니들의 생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봄나들이, 가을나들이, 평화인권캠프 등이 있었고 생신 챙겨드리기, 추석과 설 명절 챙겨드리기, 월 1회 할머니택 정기방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홍보활동과 해결운동

① 생존자들의 일대기 발간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훈 할머니, 2004년)

〈버마전선 일본군‘위안부’문옥주〉(문옥주 할머니, 2005년)

〈가고싶은 고향을 내 발로 걸어 못 가고〉(조윤옥 할머니, 2007년)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카이〉(김순악 할머니, 2008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무이 가슴에 못 박을라꼬〉(김옥선 할머니, 2009년)

② 압화 화보 발간

〈할매 사랑에 빠지다〉 1, 2

③ 그리고 그 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과거사청산활동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 활동- 서명전, 국회의원 면담, 제정추구를 위한 국토순례, 8·15기념 집회 등
- 전 일본 병사 쿠보타씨 초청, 증언 강연회
- 한일협정문서 공개소송 승소 판결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 의회 결의안 채택(2009.7)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2011년 승소 판결)
-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구시민 걷기대회(2010년부터 2016년까지 7회 실시)
- 일본군‘위안부’해원 진혼굿
- 일본군 ‘위안부’문제 시민강좌
- 보임의 독립다큐 ‘숨결’ 상영회
- 할머니와 함께하는 지리산 문화기행
- 세계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 공동행동 행사

- 희움 대학생 써포터즈 모집, 활동
- 대구경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6월 6일) - 할머니들 산소 방문
-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 대구행동 결성 및 서명 운동
- 희움여름콘서트
-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초청 공개강좌
- 일본군‘위안부’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한 국위원회 및 국제연대위원회 회의와 행사 참석

3. 국내외 연대활동

지역의 여성인권단체들과 국내외의 일본군‘위안부’관련단체들과의 교류와 연대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참석
-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후쿠야마 연락회와 연대-
- 히로시마고등재판소 관부재판 항소심 방청 및 보고대회 참가
- 일본역사교과서 불채택·재검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발족 및 활동, 히로시마 항의방문
- 히로시마 교직원 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초청, 천안 망향의 동산 고보댐 징용피해자 위령제 및 사죄비 건립식 참석
-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 참가(17명)
-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공동 세미나
- 이라크 파병반대 촛불 한마당 공동 진행
- 일본 후소샤판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규탄 및 채택저지를 위한 대구 시민단체 활동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평양대회, 필리핀 대회 참석
- 동북아평화를 위한 2004 한일평화 공동행동 실시
- 한일동시다발 증언집회 히로시마 강연회

- 한일청년 평화인권캠프, 히로시마
- 동티모르 피해자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및 방문
- 제1회 일본군‘위안부’박물관 회의 참석

4.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의 건립

1)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참여
- ② 그림책 〈꽃할머니〉 권윤덕 작가의 인세 기부
- ③ 일반 기부금 및 전시회, 공연 수익금
- ④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캠페인
- ⑤ 브랜드 희움의 상품판매 수익금

2) 건립 과정

2010년 1월 작고하신 김순악 할머니께서 유산의 절반 5400여 만원을 역사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하시어 건립기금 마련의 귀중한 마중물이 되었고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하시며 역사관 건립에 선뜻 동참해 주신 할머니의 뜻을 이어 다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도 동참을 해주셨다.

부지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알아보니 단체 대표 명의로는 안 되고 법인이름으로 가하다고 하여 법인등록까지 마치게 되었으나, 때맞추어 가동되기 시작한 브랜드 희움의 수익창출에 힘입어 2013년 7월 1차 역사관부지 매입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역사관 건립 예산지원이 결정되었고 2차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식 2층 목조건물이 남아있는 214.45㎡(65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실행위원회를 발족하여 산하에 자문위원단, 건축팀, 콘텐츠팀, 아카이브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준비와 논의에 들어갔다. 그해 8월 역사관 건물의 터잡기 행사로 “반갑다 역사관”을 진행하였고, 12월 5일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5. 희망을 모아 꽃을 피우다 - 희움(Heeum)

고려대 경영대의 블루밍 프로젝트 팀을 만나 우리가 함께 만들게 된 것이 희움(Heeum)이라는 브랜드였다. ‘희망을 모아 꽃피움’에서 첫글자와 끝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그 뜻을 영어로 옮겨서 Blooming their hopes with you 라는 문구도 만들었다. 첫 작품은 할머니들의 압화 작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실리콘 팔찌였다. 영어 문구와 함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명예와 인권을”이라는 한글문구가 들어갔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압화 작품이 인쇄된 에코백과 손수건, 파우치, 티셔츠 등의 일상제품들이 뒤이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희움의 상품들은 고 김순악, 심달연 두 분의 압화작품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여 어둡고 무거운 주제인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소비하는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로부터 몇 년, 브랜드 희움은 일본군‘위안부’이슈의 효과적인 확산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대시민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역사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재건축하는 데 크나큰 공헌을 하였고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으로 그 이름이 길이 남게 되었다. 2015년 12월 개관 당시에 헤아려 보니 희움 제품을 구매해 준 국내외의 희우머가 15만 명에 달하였다.

6.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의 기획전시들

그 동안 2층의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어 온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기억하는 당신 #1, 옥주씨(2016년 11월 26일~11월 30일)
- 아시아의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 동티모르(2017년 8월 10일~11월 4일)
- 그리는 마음(2018년 5월 23일~8월 11일)
- 그녀들의 용기, 우리들의 #WITH_YOU:(2018년 8월 14일~11월 30일)
- 우리가 기억하는 당신 #2 김순악(2019년 8월 14일~)

그리고 2018년에 압화 체험 프로그램 <꽃마중>을 정기(54명 참여)와 비정기(165명 참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대구광역시 역사기록 기념사업 지방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연극 “할매의 방”을 지역의 극단과 함께 제작하여 공연하였고, 김순악 할머니의 다큐멘터리 “보드랍게”를 제작하여 위안부 기림일인 8월 14일에 시사회를 가진 바 있다.

박문철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창원지역의 일본군‘위안부’운동 돌아보기

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I. 창원지역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어제와 오늘

1. 마산,창원,진해 지역 일본군‘위안부’운동 단체와 활동

▶ 1998 ~ 2003 : 경남정대연(경남정신대문제대책시민연대)

- 1998년 경남, 창원지역에서 '훈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으로 구성
- 토론회, 문화공연(연극, 무용 등)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알려내는 역할
- 중국에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조사와 귀국지원, 국적회복 지원 등의 활동 (이옥선, 고지돌이 할머니 등)
- 피해자들의 증언을 채록 하는 활동

▶ 2004 ~ 2006 :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위안부사업팀 활동

-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피해자 지원활동
- 6 분의 피해자 지원: 임*자, 김*전, 이*순, 김*주, 김*순, 김*선
- 3명의 자원활동가 팀 구성
- 방문 및 말벗과 근황파악, 나들이 동행, 병원출입 동행, 어버이날, 생신, 명절 등의 위로방문 활동, 장례지원



▶ 2007 ~ 현 :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 주요활동

- 피해자지원 활동 : 방문, 정서안정과 심신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장례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목욕수발, 나들이, 심리 치료, 생활불편지원 활동 등)
- 고김○순, 고임○자, 고이○순, 고김○전, 고이○순, 고박○자,고강○아 김○선, 김○주, 김○애
- 홍보 및 지역사회 공유 : 강연, 연극, 영화, 전시회, 거리토크쇼 등
- 캠페인, 서명운동 등 : 지방의회 결의안 촉구 서명운동, 일본의회의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민엽서 운동, “12.28 한일합의 무효화경남행동” 등
- 교육 : 청소년여성인권역사탐방, ‘할머니명예회복청소년실천단’, 작가와 함께 읽는 ‘꽃할머니’이야기, 위안부문제청소년골든벨, 청소년 위안부주제 청소년 미술작품공모전, 청소년 위안부주제 공연컨테스트, 할머니와함께하는대학생캠프
- 기록 및 증언활동 : 피해자 동행 일본방문 증언, 피해자증언 촬영 등
- 기념사업: 피해자추모제, 피해자추모조형물건립(인권자주평화다짐비) 및 다짐비 지키기 시민모임 활동

II. 마창진시민모임 활동의 한계와 특성

1. 근거리에서의 일상적 피해자 지원과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내에서 근접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문제나 불편, 심신의 건강문제, 간병인력이나 가족갈등의 중재 등 피해생존자들의 일상에 필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관, 시민단체, 학교 등

2. 위안부이슈의 지역사회 공유와 공동주체화

- 피해자 지원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의 관련기관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홍보의 대상이 아닌 공동의 주체로서의 협력관계 형성
- 지역과 함께한 활동사례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제 (해마다): 지역의 30여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협력 형식,
 - 일본군위안부추모조형물건립(2013~2015) : 70여 단체의 공동참여, 공동추진
 -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여성인권탐방 및 창작전시회(2014년) : 민미협경남지부, 경남도립미술관,
 - 청소년미술작품컨테스트(공동시상)(2014) : 지역언론, 민변, 창원대학교 등
 - ‘인권자주평화다짐비’ 지키기시민모임(2015~) :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20여명으로 구성
 - 청소년 사업(2013~ 현) : 각급 학교 교사 들과 공동협력방식
 - 해외 피해자지원 (2016,이수단) : 지역시민공동모금으로 중국거주 피해자지원(방문지원 및 기저귀 보내기)

3. Glocalization : 지역에서 세계로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국만의 역사가 아닌 아시아 및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역사 문제이자 과제
- 전시성폭력(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소망) 주제의 행위예술 파리공연(2018)
- 청소년국제대회(2017~2020)
- 청년국제포럼 (2018~2020)

III. 고민과 과제

1. 자료와 정보의 공유부재

- 그 동안 지역에서 10분의 피해자 할머니를 밀착하여 지원해 왔으나 이 피해자들에 대한 초기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음.

2. 당사자 조직없음과 피해자가족 협조의 어려움

- 피해당사자들 자체조직의 부재로 인한 의사대표성 불가능
- 피해자들과의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가, 소통불능 및 가족의 접근거부
- 피해자들의 심신건강과 안정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주변 가족, 유족들의 고충과 갈등, 인식을 위한 활동의 어려움과 미흡

3. 2020년 5월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 국내/외 역사부정 세력들의 공세에 대한 국내 단체들 간의 공동대응전략 필요
- 상황과 자료의 공유

4. '피해자중심주의'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즉,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당당한 여성인권 운동가로 활동 하는,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피해자상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피해자들을 소외, 배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운동의 자세와 방안은 무엇일까?

5. 지속가능한 운동

- 사라지고 있는 1세대, 노령화되고 있는 2세대, 양적으로 부족한 3세대, 향후 지도력을 발굴과 생산의 문제

6. 운동단체에 대한 관심 부재와 연구의 빈곤

- 위안부운동 단체의 운영과 조직, 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재와 연구의 빈곤
- 스스로를 연구할 수 밖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 거제 시민모임 해결 운동과 과제

송도자



1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 거제 시민모임

● 걸어온 길

- 2002.08.15. 창립
- 2002~2018 피해생존자 복지, 심리치유 및 정서적 안정 지원사업 실시
- 2003~2017 일본군'위안부' 정의 실현 평화인권문화제 매년 개최
- 2009~2010 경상남도 지방의회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운동
- 2010~2016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위한 범시민 탄원엽서보내기운동
- 2011, 2015 1000차 수요시위 맞이 1000 범시민 정의의 인간띠잇기
- 2012~2013 전국 최초 피해생존자일대기 초중교 역사교육교재 공동제작
- 2013.4.6. 공공역사 일본군'위안부' 명예 인권을 위한 "정의비" 건립
- 2015~2016 국내 최초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료 전수조사 사업 실시 (통영, 거제, 고성, 진주, 사천), 조사보고서 발간

2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걸어온 길

- 2015~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위안부의 목소리 Voices of The Comfort Wome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 2016~ 일본군'위안부'기림일 시민기억행동 매년 개최
- 2017.3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자료 중국 조사 (우한,난징,상하이)
- 2017~ 일본군'위안부' 전문가 초청 시민강좌 매년 개최
- 2018~2019 한일 지역공동체 기록기억 잇기-일본순회전시, 심포지엄, 다큐투어 개최
- 2018~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 준비활동 공동 전개
- 2019~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및 건립운동 공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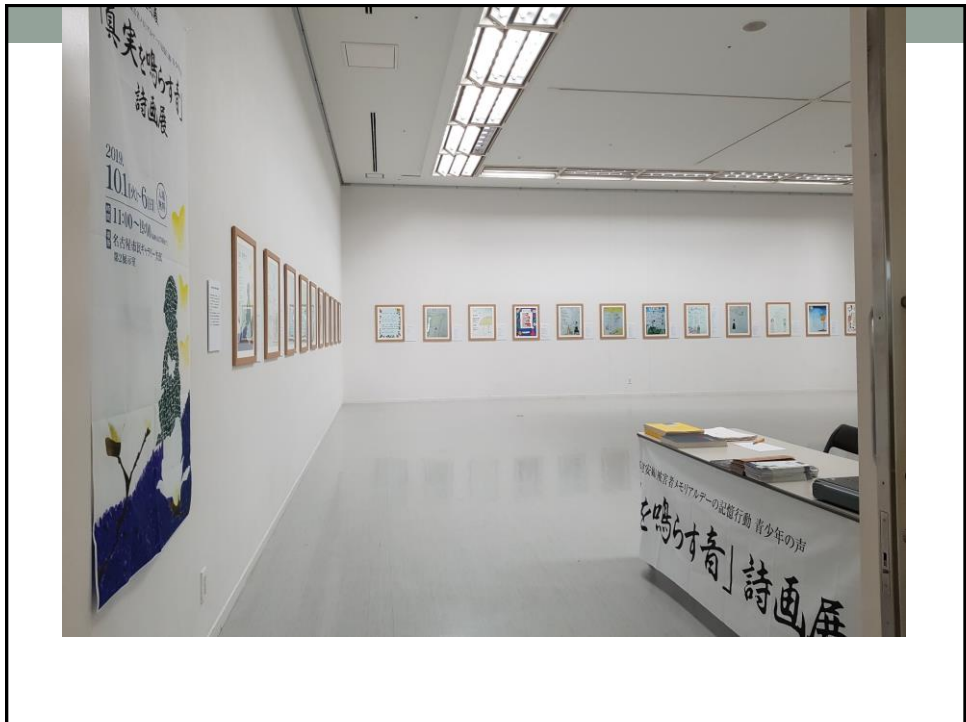
3



4



5



6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 통영, 경남 지역에서 운동이 가능했던 이유

“ 피해자가 많았다 ”

- 1900년대 초 통영항 개항, 세계3대 황금어장기지, 뱃길 발달
⇒ 한일 해상 교통 일찍 발달(어선, 상선)
- 일본인 집단거류민지역 일찍 형성 ⇒ 유곽도입으로 소개소 발달
- 1938년 전시 총동원 체제로 편입 ⇒ '위안부' 동원 조기 작동
- 집결지인 부산으로 이동 용이 ⇒ 일본과 중국, 동남아등지로 동원

7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 기록기억운동

● 기림조형물(기림비) 건립운동

- 2007 하동 '평화의 탑'
- 2013 통영 '정의비'
- 2014 거제 '평화의 소녀상'
- 2015 남해 '평화의 소녀상'
- 2015 창원 '인권자주평화 다짐비'
- 2016 산청 '봄이'
- 2017 김해 '평화의 소녀상'
- 2017 진주 '평화기림상'
- 2018 창원 '기억과 소망'(경남도교육청)
- 2018 김해 '평화의 소녀상'
- 2019 함안 '평화의 소녀상'
- 2020 산청 '평화비 '

8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 포스트 할머니 시대의 과제

- 피해자 목소리 기록
- 지역피해역사 조사, 연구, 기록
-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기록
- 피해자 목소리 계승, 확장
- 한·일 역사수정주의 대항, 흔들리는 정의 굳건히



중단 없는 기록, 기억의 정치 ⇒ 공적 역사를 공공 역사로



인권, 평등, 평화 교육의 허브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

기록, 기억의 정치를 이어감으로써 정의, 성평등, 평화 가치 실현

나눔의 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김대월

1

소개

김대월

-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박사 수료
- 전 북악사학회 교육편집부장
- 전 국민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 현 나눔의 집 운영위원
- 현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학예실장

2

목차



나눔의 집

1. 나눔의 집은...

2. 나눔의 집의 어제와 오늘

- 나눔의 집의 활동
- 피해자 수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이익 창출
-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문성 결여

3. 나눔의 집의 내일

- 오롯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 할머니의 삶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전시
- 나눔의 집을 국민의 품으로

3

1. 나눔의 집은...

4

1. 나눔의 집은...



나눔의 집

- 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평안한 생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992년 설립.
- 1992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을 시작으로, 1996년에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 정착.
- 1998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

5

2. 나눔의 집의 어제와 오늘

6

나눔의 집의 활동



재가 방문



7

나눔의 집의 활동



전시



8

나눔의 집의 활동



9


2. 나눔의 집의 어제와 오늘

10




11


피해자 수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이익 창출



- '편안한 안식처'라 홍보한 나눔의 집은 일반 무료양로시설에 불과함.
- 무료양로시설의 기준에서도 전국 하위 20%.



- 국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으로.
- 최근 5년 간 모금된 약 88억 원의 후원금 중 할머니가 계신 시설에 돌아간 돈은 2억 원에 불과함.
- 2억 원 중 할머니에 쓰인 직접비는 5년 간 약 800만원에 불과함.



- 나눔의 집 이사진 및 운영진은 할머니를 개인 및 종단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함.
- 이사진들은 이사회에서 이렇게 모아온 후원금으로 할머니 사후 호텔식 요양원 건립을 추진함.

12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 초기에는 할머니들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외출이나 활동이 자유로웠음.

이후, 할머니들의 활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통제가 시작되었고 외출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지자 **통제는 더 노골적으로 변함.**

열 분이 넘는 할머니가 계실 때에도 **간호인력
은 언제나 한 명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
지 못함.

한 해 백 차례가 넘는 증언과 조계종 행사에는
참석하였지만, **개인적인 외출은 불가능 하였음.**



13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 신상공개를 거부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노출
하여 홍보수단으로 이용함.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할머니의 물건을 훼손**시킴.

운영진들은 할머니가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말을 직원 및 봉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함.

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문성 결여



- 지금까지 나눔의 집을 거쳐간 할머니들의 기록조차 없음.
- 할머니의 유품 및 물품을 방치함.
- 국가지정기록물을 분실 및 훼손함.



15

IN ? OUT

국가인권위원회

인간침해
후원금 유용

나눔의 집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16

3. 나눔의 집의 내일

17

오롯이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으로...

할머니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18

할머니의 삶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전시

1 문제의식

-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위안부' 문제는 운동에 집중됨.
- 할머니들은 피해자로 대상화 됨.

2 연구방향

- 나눔의 집은 종전 직후 피해자의 삶.
- 한국정부의 부작위.
- 한국사회가 바라 본 할머니.

3 연구목표

-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할머니의 삶에 주목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화

19

나눔의 집을 국민의 품으로

“ 누구나 쉽고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나눔의 집 ”

Peace Road(인권캠프)



게스트 하우스



지역사회와의 연계



20



21



22



23



24



25



26

감사합니다.

전국행동 활동보고

양징자(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약칭 '전국행동')은 2010년 2월에 결성되었다. 따라서 전국행동 자체는 아직 10년 밖에 안 되는 단체이지만, 약 30개의 참가 단체 중에는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와 개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은 1980년대 말에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의 부름에 답한 교풍회 등 기독교 여성들의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1990년11월의 정대협 결성, 그 다음 달 12월 윤정옥 선생님이 일본에서 하신 강연을 계기로 여성운동으로 확산되었다. 1991년 12월에 김학순 할머니를 원고로 포함한 재판이 일본 법원에 제소되고 필리핀, 일본, 중국, 대만, 네덜란드 등 일본 법원에서 총 10건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각 재판을 지원하는 단체가 차례로 일본에서 결성되었다. 이 재판들은 결국 모두 패소하였지만 재판이 끝난 뒤에도 현재까지 단체는 계속 존속하며 각국 피해자 지원을 계속한다. 가해국이기 때문에 각 피해국에 대하여 피해자 지원 단체가 결성되고 오늘날까지 활동을 계속해 온 것이 일본 운동의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재판 지원 단체도 당연히 전국행동에 참가하고 있다.

1990년대 운동 중 하나의 축이 각국 피해자의 재판을 지원하는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1990년대 말, 또 하나의 축은 2000년여성 국제전범 법정의 개최였다. 이 법정을 제안한 VAWW-NET재판의 후계단체인 VAWW RAC도 전국행동에 참가하고 있다. 재판 지원 운동이 법원이 있는 도쿄를 중심으로 전후보상 운동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측면이 있는데 대하여 2000년법정 운동은 보다 광범위한 여성들이 참가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의 저변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말에는 주민운동으로서 의견서 채택 운동이 일본 전국에 확산되었다. 2007

년 미국 하원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 연합으로 확산되어 간 결의안 채택 운동에 촉발되어 2008년 3월 일본 다카라즈카시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며 2013년까지 43개의 지자체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전국행동 결성에는 이와 같이 일본 전국에서 의견서 채택 운동을 한 단체와 90년대부터 각국의 피해자 지원, 재판 지원을 해 온 단체, 2000년법정을 주최한 단체 등 시민 단체가 폭넓게 결집했다. 그 계기는 2009년 민주당 정권 수립이었다. 2000년 이후, ‘전시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결촉진법안)’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발의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을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입법 해결 기회로 보고 전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결성한 것이 전국행동이었다.

전국행동은 참가단체가 전국에 퍼져 있는 것을 강점으로 각지에서 지역 선출 국회의원들에게 유권자로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내 집회를 열고, 각지에서 시민 집회를 개최해 입법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2010년 11월에는 정대협이 모아 온 국제시민 서명 61만 832필, 한국 국회의원 서명 177필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활동을 정대협과 함께 행했다. 이때의 원내 집회에는 약 400명의 시민이 모였다.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일본에서도 해결 기운이 높아졌다. 그러던 중인 2011년 12월 14일, 수요 시위가 100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국행동은 정대협의 수요 시위에 연대하여 일본에서도 ‘한국 수요시위 1000차 액션’을 할 것을 일본 전국에 호소했다. 이 부름에 응하여 홋카이도에서는 혹독한 추위에도 150명이 모여 1시간의 시위행진을 하고, 오사카에서는 500명이 캔들 나이트 콘서트에 모여 캔들로 1000이라는 숫자를 밝혔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1300명이 모여 우익 단체의 반대 시위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아 ‘인간의 띠’를 만들어 외무부를 포위했다. 여기에는 송신도 할머니도 참가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해결 촉구를 호소했다. 그 외에도 나고야, 토야마, 가와사키, 교토, 히로시마, 하마마츠, 오카야마, 후쿠오카, 후쿠야마, 야마구치, 기타큐슈, 오키나와 등 전국 15개의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전국행동은 민주당 내에 구성된 전후보상 의원연맹에 대해 학습회와 설명회를 거듭하며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정권 여당은 실현 가능한 법안만 제안할 수 있다’며 야당 시대에 몇 번이나 국회에 발의한 ‘해결촉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일본에서 입법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법적 해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대협과 함께 검토를 개시했다. 이것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TF팀이다. TF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모여 2012년~13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상호 방문하며 회의를 열어 법적 해결이란 무엇인가, 피해자가 바라는 해결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사이 2012년 12월 민주당 정권이 막을 내려 아베 정권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정권에 직접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2014년 6월, 제12차 아시아 연대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어, 이 자리에서 한일TF팀이 검토해 온 해결안을 8개국 피해자와 지원자들에게 제시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정리했다. 전국행동은 이 제언에 따른 해결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일본 외무부에 대한 요청 등을 거듭하였으나, 2015년 12월에 발표된 한일 정부 간 합의는 이 제언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2016년~2017년, 전국행동은 ‘한일 합의는 해결이 아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진정한 해결이란 무엇인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한일합의 후, 점점 악화되는 일본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 특히 차세대에게 한일 합의의 부당성과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알리는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홋카이도, 도쿄,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에서는 한국의 수요 시위에 연대하는 수요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누구인지, 무엇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기술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1군데에서만 기술되고 있는 상황이며, 역사수정

주의 교과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언론도 혐한을 부추기는 왜곡보도를 하는 곳이 많아 언론 보도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두에 서서 한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운동, 젊은이 한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 그러한 활동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치열한 공격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본에서도 그와 관련된 왜곡보도가 나오게 되었다. 전국행동은 이러한 보도들이 사실무근의 공격이며, 피해자의 곁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헌신적인 투쟁을 해 온 활동가들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금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3차가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초조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와 시민은 인식해야 한다. 정대협/정의연의 30년은 누구도 경청하려 하지 않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한 선구적인 운동이며, 이에 의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헌신적인 운동이었으며,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사회 이념을 제시한 운동이었다. 그 누구도 이 운동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해결 운동: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의 28년 운동

정대협, 정의연 30주년 심포지엄
2020년 11월 14일

이정실 박사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이사장
메릴랜드 예술대학교 미술사학과 겸임교수
wccwcontact@gmail.com / jlee38@mica.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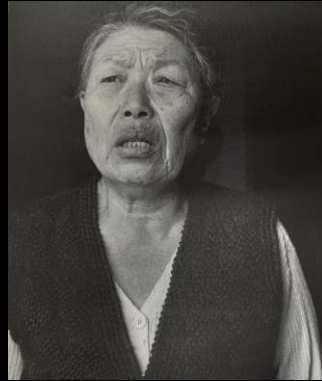


1

미국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 활동의 다양한 측면 및 방향

1. 인권과 여성인권: 풀뿌리 운동과 법안 통과
2. 교육 / 출판
3. 아카이브 및 예술 작품 전시
4. 위안부 기림비
5. 아카이빙 및 연구 프로젝트

2



황금주 할머니 미국 방문:

할머니는 13세였던 1939년 강제로 끌려가 만주와 여러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1992년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증언하셨고, 이는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의 설립을 촉발했습니다.

3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 미션 (2020년 8월 8일 수정)

미 연방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재단 501 (c) (3)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동원된 소위 '위안부'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옹호 단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 사죄와 배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삶을 바탕으로 여성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합니다. 또한, 성노예제와 인신매매에 대한 연구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과서의 심각한 왜곡 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는 1992년 12월 워싱턴 DC에서 설립된 독립적, 비당파적, 비영리 단체로 모든 성별, 인종, 및 국적의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4



1. 여성인권: 활동-법안

백악관 앞 시위 1993, 1994

미국 의회 앞 집회
2015.4. 27-28



5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연대하여 정대협에서 일본 정부에 요구한 사항과 같은 사항들을 기반으로 1992년부터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1. 성노예 동원에 대한 **책임 인정**
2. **공식사죄**
3. **진상규명**
4. **추모비와 박물관 건립**
5. **법적배상**
6. **역사교과서에 기록**
7. 책임자 **처벌**

6



미국 신문 더 힐(The Hill),
2006년 9월 27일
레인 에반스 (Lane Evans) &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

위안부란 이름으로 나온 모든 법안

- H. Con. Res. 176 (1996)
- H. Con. Res. 126 (1997)
- Cal. Assembly Joint Res. 27 (1999)
- H. Con. Res. 357 (2000) - 에반스
- H. Con. Res. 195 (2001)
- H. Con. Res. 226 (2003)
- H. Con. Res. 68 (2005)
- H. Res. 759 (2006)
- : 하원의원 국제관계위원회 통과
- H. Res. 121 (2007): 마이크 혼다
- H. Res. 952 (2016)

7



미국 의회 청문회:
Eni Faleomavaega (민주당 아메리칸 사모아)
하원결의안 121, 2007년 2월 15일



김군자, 이용수, 안 루프 오헤른
할머니



미국 하원의원 청문회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과 세 할머니의
모습 2007년 2월

8

“하원의원 결의안 121호 – 일본 정부가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식민지배 및 전시 점령하며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제**로 동원한, ‘위안부’로도 세상에 알려진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 하원 의원의 생각을 표현한 결의안 (2007년 제 110차 의회 결의안 121호 요약)”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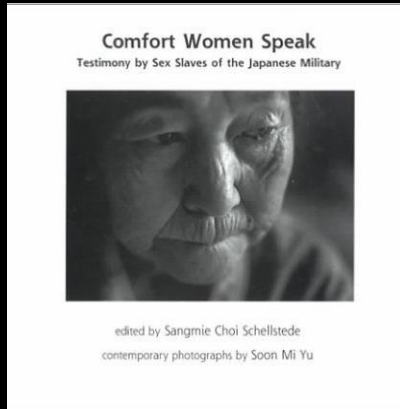
전 세계 의회들의 연대

1999년 8월	캘리포니아주 의회 결의안
<u>2007년 7월</u>	<u>미국 하원의원 결의안 121호</u>
2007년 11월	캐나다 의회 결의 네덜란드 의회 결의
2007년 12월	유럽 의회 결의안 RC-B6-0525/2007
2008년 3월	필리핀 의회 외교위원회 결의안 124호 통과
2013년 1월	뉴욕주 의회 결의안 J304
<u>2015년 3월</u>	<u>메릴랜드주 의회 결의안 SJR3</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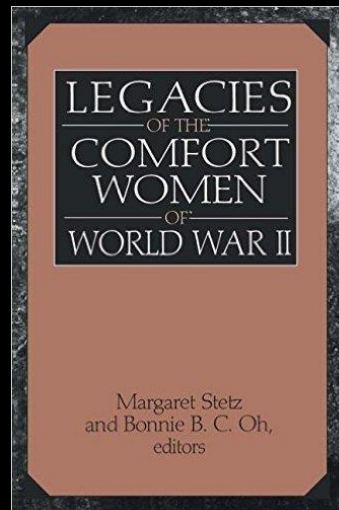
10

2. 교육 /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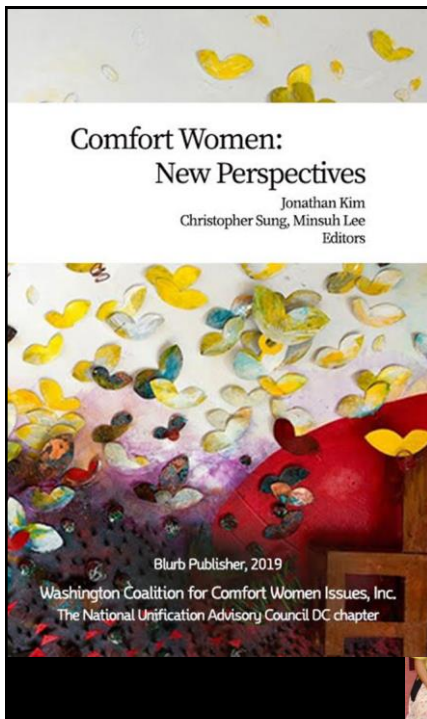
Comfort Women Speak (2000):
Testimony by Sex Slaves of the
Japanese Military : Includes New
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port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2001)*



11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
인턴십 & 펠로우



12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인권학과**
2016

* 컨퍼런스, 포럼, 강연, 영화
상영회, 전시 (학술 기관들과
협업)

*Collateral Damage:
Wartime Atrocity
and Trauma*

심포지엄, 존 제이
형사행정대학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2016
인권센터



13



"The Sorrow and Hope
Of Comfort Women"
카톨릭 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국제 사회
개발 (CISD)**,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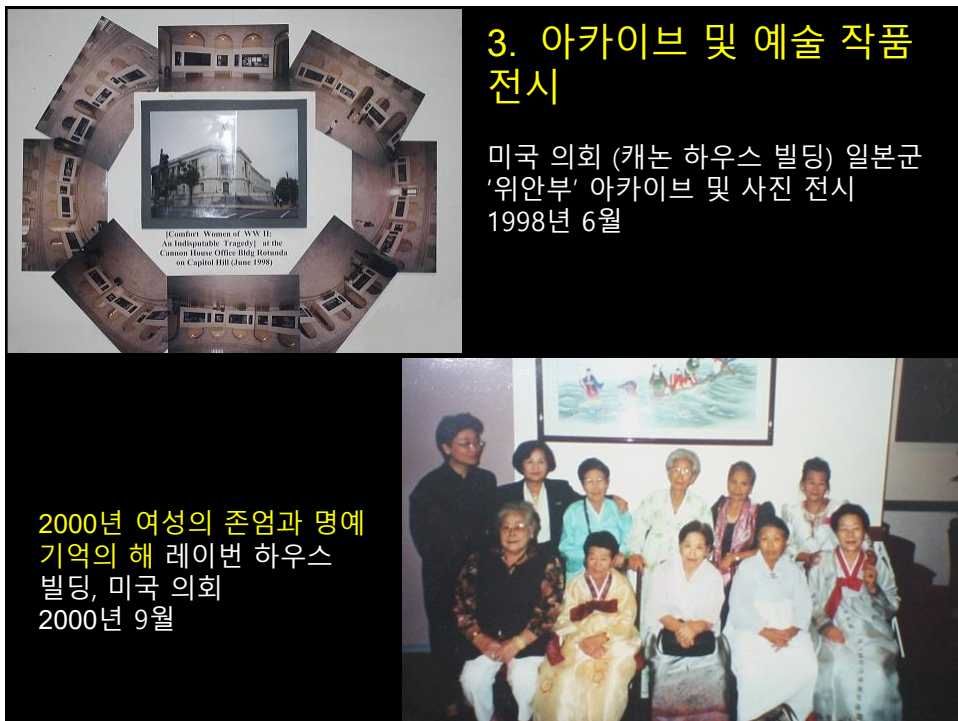
"History Writing
For Justice and
Reconciliation
Of Comfort Women"
조지 워싱턴 대학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아시아학과 센터 및
역사학과.**
2016



14



15



16

*Unveiling the Truth:
The Sorrow and Hope of "Comfort Women"*



Exhibition: November 26 – December 14, 2012

Opening Reception: November 30, Friday, 6-8 pm
(7 pm Artist Talk and Film Screening)

Mason Hall Artview Gallery, George Mason University
4400 University Drive, Fairfax, VA 22030
Gallery Hours: Monday to Friday, 9 am – 5 pm

Presented by ArTrio &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Sponsored by WCCW, ArTrio, Korean Studies Center, George Mason University Gallery,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 (한국학 중앙 연구원)

조지 메이슨 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 2014

Collateral Damage

The Anya and Andrew Shiva Gallery
John Jay Gallery of Criminal Justic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eptember 8 - October 21, 2016



Sponsored by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Inc. (WCCW)

존 제이 형사행정대학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20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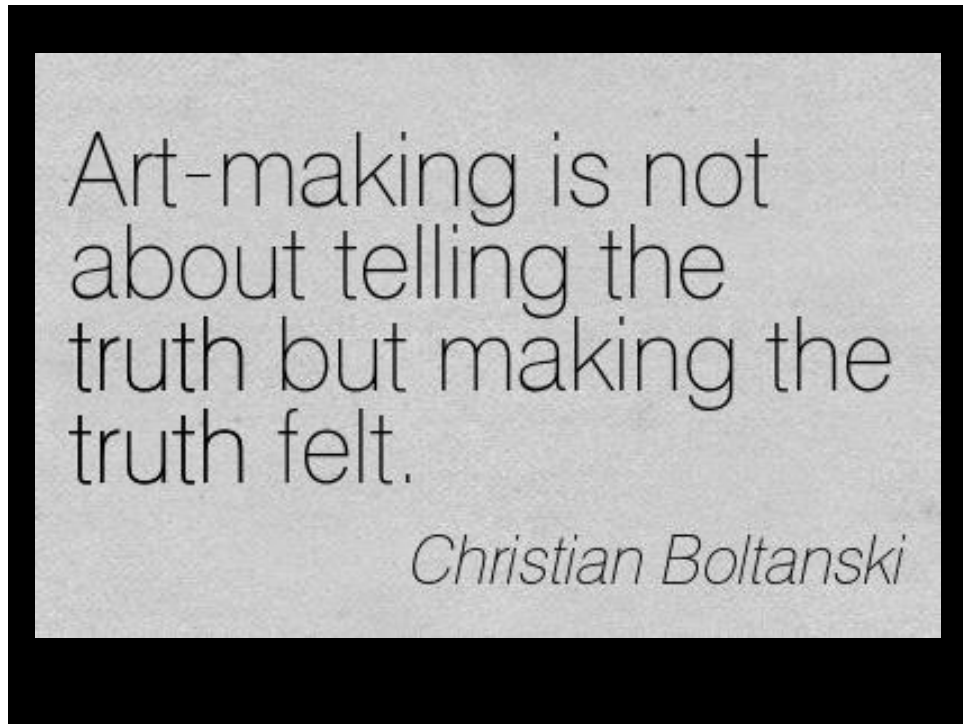
나눔의 집 미술치료 세션에서
배춘희 할머니, 2011년 9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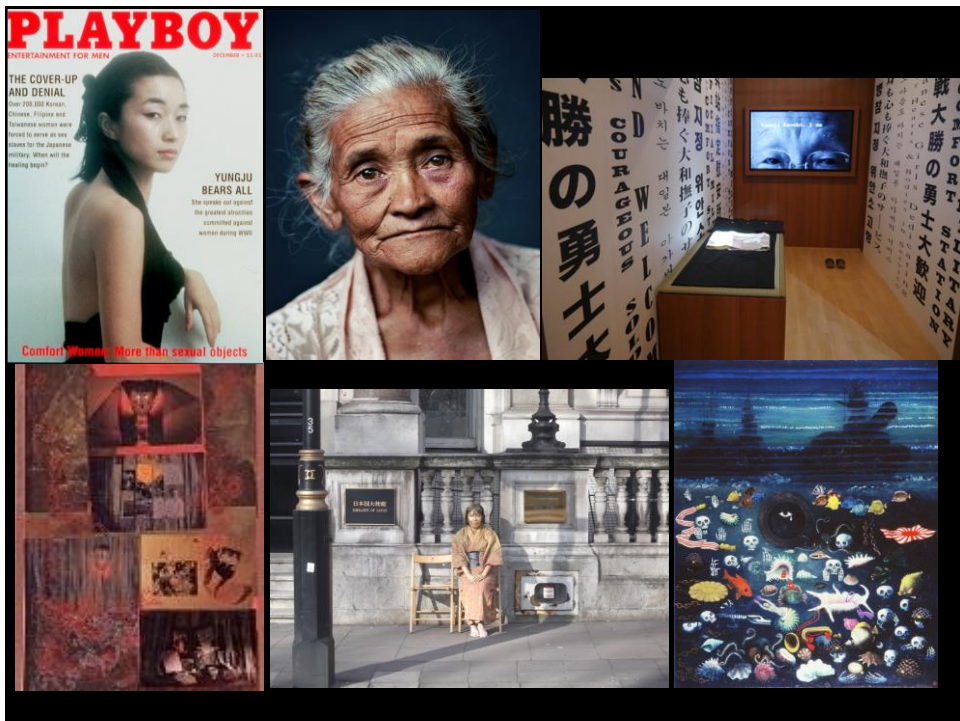
강덕경, *빼앗긴 순정*

강일출, *태워지는 처녀들*, 2004

18



19



20

The Sorrow and Hope of
COMFORT WOMEN



SEMINAR & EXHIBITION
Hosted by National Catholic School of Social Service
Center for International Social Development (CISD)
Co-organized by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WCCWI)

Dates: **November 25, 2014 (Tuesday)**, 2:00 - 4:00 pm, followed by reception
Exhibition continues to January 12, 2015

Venue: The May Gallery of Mullen Library,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ontact: Frederick Ahearn, Organizer: ahearn@cu.edu
Julie Jungsil Lee, Curator: artriblee@gmail.com



Steve Cavallo, *Lamentation*

가톨릭 대학교(Catholic University), 2015

21



"If the film is finished,
it will be one of few movies about comfort women"
by New York Times 27/03/15

Director **Cho Junglae**



Trampled flowers,
sought to return but could not,
are finally coming home



Spirits' Homecoming
Guihyang

1차 귀향 영화상영 2015년 1월 29일 오후 7시
메시아 장로교 교회 (Messiah Presbyterian Church)
12월 16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 (GWU)와 UM 2차 귀향 영화상영

22



WCCW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8

SEXUAL VIOLENCE IN WARFARE: THE FILMS OF UNHEALED WOUNDS

I CAN SPEAK * FIFTY YEARS OF SILENCE * AE EUM GIL
BECAUSE WE WERE BEAUTIFUL * FOR HER * THE APOLOGY
DAILY BREAD * SPIRITS' HOMECOMING * TWENTY TWO

NOV 09-11

NOV 09 (FRI) 6 PM
NOV 10 (SAT) 10 AM
NOV 11 (SUN) 10 AM

VENUE: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COMMUNICATION
McKINLEY BUILDING
440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16

TICKETS & MORE INFO WWW.COMFORT-WOMEN.ORG



COMFORT WOMEN
A NEW MUSICAL

OPENS JULY 31, 2015

Book by: CHIKER AGUTRE, JOANN MIESES
Music by: BRYAN MICHAELS
Lyrics by: BRYAN MICHAELS
Produced by: MATTHEW THOMAS BURDA
Directed by: DIMO HYUN JUN KIM

THEATRE AT SAINT CLEMENT'S
423 W. 46th Street, New York, NY 10036
212. 246. 7277

www.ComfortWomenMusical.com

위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국제 영화제**, 아메리칸 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201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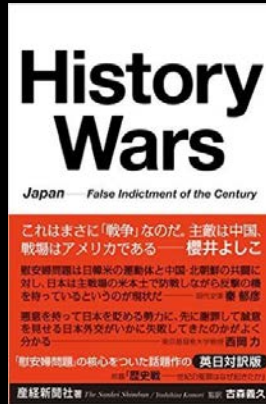
4. 미국의 위안부 기림비



뉴저지 버건 카운티 팰리사이드 공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1 **미국에서의 첫 기림비**, 2010년 10월 23일

24

산케이 신문, “History Wars”



“이 책은 일본에 대항하여 벌어지고 있는 본격적인 정보전쟁에 대한 것으로, 중국이 주요 적국이고 미국이 핵심 전쟁터이다...”
언론인 요시코 사쿠라이(Yoshiko Sakurai)

25



2010년 10월 23일 - 뉴저지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공원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1 미국 내 첫 기림비.



2012년 6월 18일 - 뉴욕 낫소 카운티
웨스트버리 아이젠하워 공원
베테란스메모리얼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2 두번째 기림비.



2014년 1월 - 2012년 세워진
아이젠하워 공원 기림비 옆에 세워진
#5 미국 내 다섯번째 기림비.



2013년 3월 8일 - 버겐 카운티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3 세번째
기림비

26



첫 평화의 소녀상, 대한민국 서울, 2011년,
일본군 대사관 앞 1000번째 수요시위를
기념하여 건립, 정대협



2013년 7월 30일 -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글렌데일 시립 공원 평화의
소녀상 #4 네번째 기림비,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근처

27



2014년 5월 30일 - 페어팩스 정부 청사 내 가든, 일본군 “위안부”
기념 평화 가든,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 워싱턴DC 근처
#6 여섯번째 기림비

28



2014년 8월 4일 - 미국 뉴저지주 유니온시티, 리버티플라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7 미국 내 일곱번째 기림비. 뉴욕시 근처.



2014년 8월 16일 -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시 한인문화회관 평화의 소녀상.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근처. #8 미국 내 여덟번째 기림비.

29



2017년 6월 28일 -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블레어 서클 근처 블랙번 공원 II #9 미국 내 아홉번째 기림비



2017년 7월 19일 -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클리프사이드 공원 #10 미국 내 열번째 기림비

30



31



32

5. 아카이빙: 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

“강제” 징용이 없었는가?

(강제 징용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

일본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게 전쟁 당시 정부와 군에서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했다는 기록을 문서에서 찾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리포트를 보냈다. 2015 한일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31일 일요일에 한국의 연합뉴스가 위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던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과 이송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요시미 요시아키 (Yoshimi Yoshiaki)

우리는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진실이 아닌 “진실” 선전

이와 같은 위안부 관련 거짓 사이트를 만드는데 일본 정부가 주력하므로 이에 맞서서 고증 자료로 증명해야 함.

33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최종적 목표

□ 역사적 진실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1차 자료 및 2차 자료를 통해 다양한 역사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 소프트 파워 자료, 기념물,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의 재생산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 및 물품 자료 수집

□ 성범죄를 예방하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각인시킴으로써 할머니들의 평화와 존엄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34



Comfort Women

A Movement for Justice and
Wom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Edited by Jung-Sil Lee and Dennis P. Halpin

축하드립니다.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

www.comfort-women.org



35

정대협/정의연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피해자와 함께한 사람들 | 호주

발제 : 박은덕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전 대표)



피해자와 함께 한 사람들

| 호주

I. 들어가며 |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특수성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1. 제1기 (2006 ~ 2010) 국제연대 및 호주 연방의회 결의안 상정
2. 제2기 (2016)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3. 제3기 (2017 ~ 현재)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을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III. 나가며 |

포스트 피해자 시대의 호주에서의 활동 방향

I. 들어가며 |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특수성

- 지역적으로 아시아 각 지역의 피해자들과 떨어져 있음
-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의 우호국이자 일본과 매우 친밀한 관계 → 주 정부 및 정치세력들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2차 세계대전 중 호주의 영토였던 뉴기니의 '위안소'에서 약 3,000여 명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있었음
- 호주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서명국으로써,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 하길 기대함



2017년 11월 13일, ASEAN 정상회담에서 함께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콤 턴불 총리 호주 전 총리의 모습 (출처: JIM WATSON/AFP/Getty Images)

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특수성 (cont.)



1. 피해자 얀 러프 오헌 (Jan Ruff O'Herne 1923-2019)의 실존

- 네덜란드계 호주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 1944년, 네덜란드령 동인도 (Dutch East Indies, 현 인도네시아)에서 21살의 나이에 일본군 성노예로 약 3개월 간 심한 고초를 당함
- 1992년부터 20여년 간 쉼 없이 증언활동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세계에 알림
 - 1992년 12월, 일본 도쿄 전후보상 국제공청회,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 2007년 미하원 '위안부'결의안 채택을 위한 청문회

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특수성 (cont.)

- 호주 사회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각인
 - 2007년 2월 15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한 경소위 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문회에 당시 이용수 할머니, 김군자 할머니와 함께 안 할머니가 증언자로 참여한 사실이 호주 사회에 크게 알려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일본의 아시아 지배에 대한 민족적 갈등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
 - 호주국영방송 ABC의 TV 다큐멘터리 '오스트레일리안 스토리 - 잊혀진 사람들' (Australian Story: Forgotten Ones) 에 2001년과 2007년(미 청문회 이후 시청자들의 요구로 재방)에 안 러프 오현의 이야기가 소개 됨



"나는 계속해서 싸울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모두 죽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죽지 않을것이다"

Australian Story 인터뷰 중

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특수성 (cont.)

- 세대를 이은 스토리텔링
 - 안 할머니의 손녀 루비 감독의 영화제작 지원과 연대
 - 안 러프 오현의 손녀이자 영화감독 루비 챌린저 (Ruby Challenger)는 2018년 단편영화 'Daily Bread'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화화 함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
 - 현재 루비 감독은 인도네시아 일본군 위안소 상황을 다룬 장편 영화 'Handkerchief' 제작준비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영화화 한 단편영화 "Daily Bread"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점령한 인도네시아의 네델란드인 수용소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사진출처: Challenger Productions

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특수성 (cont.)

2.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과 시드니 거리의 아버지 빌 크루스 목사

- 빌 크루스 목사(Rev. Bill Crews)는 2016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이 불발된 것을 알고 평화의 소녀상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인권운동가이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시드니 유명인사
- 현지 일본 사회의 극심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
- 피해자들의 아픔을 호주에서 가장 먼저 “응답”



“평화의 소녀상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박과 학대, 특히 전시 성폭력의 상징물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사회정치의 문제이다.”

- 2016년 8월 1일 빌 크루스 목사의 기자회견 중 -

II |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제1기 (2006-2010)

국제연대 및 호주 연방의회 결의안 채택 활동

-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하는 호주 친구들 (Friends of “Comfort Women” in Australia) 결성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 순회 강연회 개최 (2006년 8월)
-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호주 지부의 초청으로 호주를 방문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점돌 할머니(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 동행)는 호주 시드니, 멜번, 애들레이드, 호바트 에서 강연



2006년 8월 4일, 안 할머니와 만난 장점돌 할머니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1. 제1기 (2006~2010)

국제연대 및 호주 연방의회 결의안 채택 활동

1.1. 호주 연방의회 '위안부' 결의안 채택 촉구활동

- a. 2006년 8월, '위안부' 결의안 최초 발의(부결)
 - b. 2007년 2월, 2차 발의(2표 차로 부결)
 - c. 2007년 9월, 3차 발의 (세 당의 공동 발, 1표 차로 부결)
 - d. 2008 8월, 4차 발의(부결)
- 결의안 채택을 위한 시민 청원활동, 국회의원 개별 면담 및 간담회 개최
 - 2007 ~ 2008년 호주연방의회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친 결의안 상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결됨



존 하워드 (John Howard) 前 호주 총리의 소신발언

- 존 하워드 총리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소신 발언
- 2007년 3월 12일 호주-일본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호주 국적의 "안 러프 오현씨가 대표적인 증인"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 관련 "구차스런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제동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호주 일간 에이지(AGE) 보도



THE *Age*

As firm on Japan sex slave war history

PRIME Minister John Howard has set himself on a collision course with his Japanese counterpart, Shinzo Abe, by declaring there should be no "quibbling" over the degree of coercion used to force thousands of women to act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On the eve of their talks in Tokyo today, Mr Howard has made it clear he will not tolerate an attempt by Japan to rewrite history. He is expected to raise the issue with Mr Abe this afternoon.

Mr Abe enraged surviving so-called "comfort women" two weeks ago when — after the US Congress called on Japan to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sex slave practice — he suggested there wa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or army had coerced women to work in

Tokyo, and Penelope
side
— 11.00am

Share A A A

Y'S TOP STORIES

J CARD
ederal government rejected
requests for PPE from
hundreds of thousands of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1. 제1기 (2006-2010)

국제연대 및 호주 연방의회 결의안 채택 행동

1.2. 광역/지자체 의회에서 논의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 a. 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정부
 - 2010년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에서 버지니아 저지 (스트라스필드 지역구) 의원, 2016년 조디메케이(현 야당 당수)가 의회 개별 신상발언(Private Member's Statement Session)을 통해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강도 높게 촉구
- b. 2009년 3월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라이드 시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채택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1. 제1기 (2006-2010)

국제연대 및 호주 연방의회 결의안 채택 행동

1.3. 미 의회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 (2006년-2007년)

- 안 할머니의 미 의회 청문회 증언(2007년 2월)
- 호주인이자 유일한 백인 유럽계 여성으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용기있게 증언하여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 침해 문제가 아시아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해결 과제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1. 제1기 (2006-2010)

국제연대 및 호주 연방의회 결의안 채택 행동

1.4. 시드니 일본총영사관 앞 첫 수요시위(2007년 3월 7일)

- 2007년 세계여성의 날 거리 행진 참여
- 시드니 최초로 열렸던 751회 수요시위에서 한국의 길원옥 할머니, 대만의 우이시우메이 할머니, 호주의 안 러프 오헌 할머니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내는 항의 성명서를 마나베 히로시 시드니 주재 일본 부총영사에게 전달



호주의 첫 수요시위에 참여한 한국의 길원옥, 호주의 안 러프 오헌, 대만의 우이시우메이 할머니들
2007년 3월 7일, 시드니 일본총영사관 앞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1. 제1기 (2006-2010)

국제연대 및 호주 연방의회 결의안 채택 행동

1.5. 2010년 국제연대회의 'Beyond 2010 for the "Comfort Women" Issue - Dialogue on Justice, Compensation & Education' 개최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호주내 양심적 학자들과의 교류
- 호주국립대(ANU)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
- 호주, 대만, 일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에서 활동해 온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 및 활동가, 호주 시민들이 참여해
각국의 최신 활동 내용과 연구 성과를 교환하고 향후 활동
계획인 '2010 Action Plan'을 참가자들과 결의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1. 제1기 (2006-2010)

국제연대 및 호주 연방의회 결의안 채택 행동

1.6.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알리기 문화활동

- 전쟁과 여성 인권 사진전 개최 (2010)
 - :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대만 등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세계의 전시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사진전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헌정 전시회 개최 (2010)
 - : 호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작가 20여명 참여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2. 제2기 (2016)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2.1.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시소추) 결성

- 2015년 한일합의 전면철폐 요구
- 시드니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수요시위 진행(2016년 1월 6일)
- 만화전, 사진전 야외 전시회 개최(2016년 7월)



만화전 "지지 않는 꽃" (2016년 7월)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2. 제2기 (2016)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2.2.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시소추) 결성

-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2016년 8월 6일)
: 해외지역 네 번째, 호주의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드니 애쉬필드)

정대협, 성남시청 지원, 시드니 한인 동포들, 현지인들의
관심과 도움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3. 제3기 (2017- 현재)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을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3.1.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

- 주에 몇차례씩 (동포사회, 현지인들, 해외 방문객 등)
소녀상 방문객이 이어짐
- 시소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소녀상 유지 및 관리,
활동에 필요한 모금활동 전개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3. 제3기 (2017- 현재)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을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3.2.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알리기

- 지역사회에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전개
- 매년 8월 6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일, 8월 14일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주간 문화활동 전개
- 바자회 및 평화콘서트(2017년 8월, 소녀상 건립1주년 기념)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 일본군'위안부' 야외 사진전(2018년)
- 영화 상영회 '어폴로지' (2017년, 2019년),
'I Can Speak' (2017년). 단편영화 'Daily Bread' (2019년),
'김복동' (2019년)



얀 할머니의 손녀 루비 감독의 단편영화 'Daily Bread' 상영회 모습(2019년 8월 12일)

II. 호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시민활동 전개과정 (시드니 중심) *Cont.*

3. 제3기 (2017- 현재)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을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3.3. 여성인권 및 평화 국제연대 활동

- 2016년부터 매년 세계 여성의 날 시드니 행진 참가
- 호주의 여성, 인권, 평화 단체와 한반도 전쟁 반대 및 비핵화,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등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 한반도 평화집회 주최(2017년 10월, 12월)
-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평화손잡기' 운동 참가 (2019년 4월 27일)



평화손잡기 운동 참가(2019년 4월 27일)



한반도 평화 촉구 시드니 집회(2017년 12월 8일, 시드니 미국총영사관 앞 광장)

나가며 | 포스트 피해자 시대의 호주에서의 활동 방향

1. 호주에서 활동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양심적인 학자들, 인권 및 평화 활동가들과 네트워크 강화

- 대중강연 및 워크숍, 학술 심포지움 개최
- 연구자료 및 기사 수집 및 대중적 홍보 필요
: Caroline Norma, RMIT University 교수는 2015년
한일협정이 발표된 후 시드니 모닝 헤럴드 일간지에 한일협정의
모순과 문제점 지적 Australia must face up to its role in
the lack of justice for "Comfort women" 기고

- 과거 호주 관할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본군'위안부' 문제 재조명
: 2차 세계대전 중 호주의 영토였던 뉴기니의 20여 개 '위안소'에서
약 3,000여 명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있었음.
호주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당위성 강조.
- 호주 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로비활동 모색
: 과거 4차례 부결된 호주 의회에서의 '위안부'결의안 채택활동 재점검
호주의 인권, 평화단체, 연구자, 언론인 연대 필요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나가며 | 포스트 피해자 시대의 호주에서의 활동 방향

2. 호주내 동포 운동 역량 강화 - 차세대 한인 활동가 양성 및 국제연대 활성화

- 호주 여성, 인권, 평화 관련 NGO 외의 교류 확대
- 호주의 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Australia Activists
Zoom Meeting 계획(12월 초)
-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홍보, 미래세대 교육활동 실시
- 한국 방문 추진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국/호주 연구자,
활동가,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나가며 | 포스트 피해자 시대의 호주에서의 활동 방향

3. 호주의 피해자이자 여성인권활동가 얀 러프 오헌 알리기

얀 러프 오헌 1주기 온라인 추모식 진행 (2020년 8월 15일)

- 멜번 위안부 소녀상 건립 위원회(멜소위) 공동주최
- 얀 할머니 가족 및 7개국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활동가, 관련 연구자, 정치인, 종교인, 예술가, 시민 100여 명이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과 유튜브로 추모식 참석
- 비키 채프만(Vickie Chapman) 남호주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 노동당 예비 내각 여성부 장관 트리쉬 도일, 녹색당 제니 레웅 등 정계 인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음
- 매년 얀 러프 오헌 추모식 추진 예정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나가며 | 포스트 피해자 시대의 호주에서의 활동 방향

얀 러프 오헌 기념일 제정 추진(2020년 8월~현재)

- 지난 8월 6일 NSW 주의회에서 얀 할머니의 기일인 8월 19일을 '얀 러프 오헌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결의안을 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3당이 공동으로 결의안 상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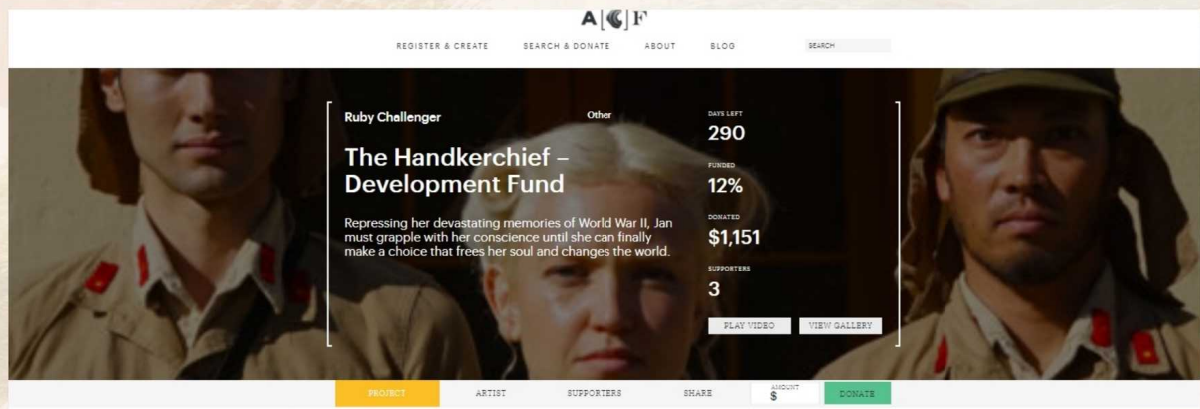




지난 8월 6일, NSW 주 의회에 '안 러프 오현 기념일' 제정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녹색당 제니 레웅, 노동당 트리쉬 도일, 자유당 빅터 도미넬로 의원

©Office of Shadow Minister for Women NSW Trish Doyle MP



안 할머니 손녀 루비 감독의 영화 'The Handkerchief' 제작 지원 및 홍보

- 루비 감독은 현재 2차 세계당시 인도네시아의 일본군'위안소'를 배경으로 한 안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장편영화 'The Handkerchief' 제작 준비중
- 영화 제작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제작비 모금과 홍보에 함께할 예정

현재 진행중인 루비 감독의 차기 영화 'The Handkerchief' 클라우드펀딩
<https://australianculturalfund.org.au/projects/the-handkerchief-development-fund>

나가며 | 포스트 피해자 시대의 호주에서의 활동 방향

4. 호주전쟁기억관 세자매 평화의 소녀상(Three Sisters Statue of Peace) 건립 추진

2007년 3월 7일, 시드니 최초 수요시위 기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한국의 김원옥 할머니, 대만의 우이시우메이 할머니, 호주의 안 할머니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항의 성명서를 시드니 주재 일본 부총영사에게 전달한 날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넘어 평화와 인권 활동가로 살아오신 세 분이 나란히 손을 잡고 당당히 정의를 위해 행명한 역사적 순간을 기림
- 호주전쟁기억관 2차 세계대전 전시실에 안 할머니의 손수건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가 전시되어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기반으로 세 자매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호주 전쟁기억관(Australian War Memorial) 2차세계대전 전시관에 전시된 안 할머니의 손수건

호주 그리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전세계 전쟁 난민들의 쉼터이자

정착지인 호주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외칩니다.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STAY CONNECTED

sysochu.com
facebook.com/sysochu

instagram.com/sysochu_au
twitter.com/sysochu_au

세션Ⅱ.

포스트-피해자 시대의 책임

사회: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스트-피해자 시대의 법적 책임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 2020년 8월 30일에 또 한 명의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등록된 240명의 피해자 중 생존자는 16명이 되었다.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은 90세를 훌쩍 넘겨 자유롭게 거동하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생존자는 극소수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직접 피해자들에게 남은 자연의 시간은 길지 않다. 하여 피해자들의 생전에 최대한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포스트-피해자 시대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난 30년의 역사에 대한 점검에서 출발해야 할 터이다.

○ 이 발표에서는, ‘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30년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것을 토대로 포스트-피해자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다만 30년간의 수 많은 장면들을 하나의 발표에 담아 내는 것은 불가능한 까닭에, 발표자 나름으로 주목하는 큰 흐름과 핵심적인 지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법적 책임’의 제기와 확립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은, 1990년 10월 17일 정신대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37개 여성단체의 공동명의로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공개서한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형태로는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 1. 조선인 여성들을 중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2.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3. 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힐 것 4. 희생자들을 위해 위령비를 세울 것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할 것 6.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을 통해 이 사실을 가르칠 것.

○ 다만 위의 공개서한에서는 ‘법적 책임’이 특별히 강조된 것은 아니며 ‘책임자 처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대협은 1993년에 들어서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4년 2월 7일에는 한국인 피해자 27명이 고소장을 토오쿄오(東京) 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동시에 정대협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일본의 검찰당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고소장·고발장의 수리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일본에 의한 책임자 처벌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 정대협에 의해 7개 항목으로 확장된 ‘법적 책임’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거듭 확인되고 구체화되었다.

-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보고서 (Comfort Women - an unfinished ordeal)
-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전시성노예제 특별보고자’ 게이 맥두갈(Gay J. McDougall)의 보고서(An Analysis of the Legal Liability of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mfort Women Stations" Established during the Second War)
- 2001년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의 판결
-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또한 ‘법적 책임’은, 1995년 7월 19일에 발족한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

화 국민기금'이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맥락에서 '도의적 책임'을 거듭 내세운 데 대응하여 특별히 강조되었다.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기되고 확립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제도 전반의 기획, '위안소'의 설치 및 운영, '위안부'의 연행, 감금, 성착취, 유기, 1945년 이후의 은폐, 부인, 불처벌 등을 포함한다.
-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그 전체로서 인도에 대한 죄, 노예제 금지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이다.
-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일본인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등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III. '법적 책임'에 대한 반동

○ 위와 같은 흐름에 대해 1997년 무렵부터 일본의 반동이 본격화되었다.

- '일본의 전도(前途)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결성
-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 '일본회의' 발족

○ 2007년 3월 16일 제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각의 결정 : 「고노담화」 발표일인 1993년 8월 3일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서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내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

- 위의 내용은,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응」에도 포함되어 있다.
- 그런데, 위의 “이른바 강제연행”은 2007년 3월 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가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 즉 이른바 ‘협박의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따라서 위의 각의 결정은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갔

다는 기술이 1993년 8월 3일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없다는 의미이다.

-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제도 전반이 범죄이므로, 그 일부인 이른바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기술이 없다는 주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고노담화」에서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위안소’의 설치·운영과 ‘위안부’의 이송·모집 중, 적어도 한국인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모집’의 경우만 그것을 입증하는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증언만 있다는 지점을 파고 들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 전체의 토대를 허물어보고자 기도하는 것이다.
- 즉, 반복적인 주장을 통해, ‘협회의 강제성은 입증되지 않는다’ ⇒ ‘강제성이 없었다’ ⇒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퍼뜨리기 위한 기도인 것이다.
- 참으로 어렵게 과거의 상처를 헤집으며 쏟아낸 피해자의 증언을 모욕하는 사악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 :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이 내용 또한 일본 정부에 의해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응」에도 포함되어 있다.
- ‘법적 책임’의 이행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수식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 게다가, 애당초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의 요구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며, 거기에서 ‘불가역적’일 것을 요구받은 것은 ‘사죄’이다.
- ‘불가역적 사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2014년 6월 2일의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에, 일본 정부가 명확한 사실과 책임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반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 하나로서,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아시아연대회의가 ‘번복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킨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일단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후 곧이어 그것을 뒤집는 망언이 거듭되어 온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

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사죄와 반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공인은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고, 공인 이외의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그때마다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였다.

- 그런데 ‘2015년 합의’에서는 ‘불가역적 사죄’를 ‘불가역적 해결’로 둔갑시켜 버렸다.
- ‘불가역적 해결’은, 아베 총리가 ‘외무대신의 대독사과가 아니라 당신 입으로 직접 사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요구에 대해 ‘사죄하면 합의 위반이다’라고 맞서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낼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털 끝 만큼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맞서는 빌미로 동원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을 축소·삭제하도록 하고, 전 세계 각지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거나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체의 언급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국제기구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편성되어 있던 관련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로 이용되었다.
- ‘불가역적 해결’이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해결을 방해하고 나아가 문제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한 저열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IV. ‘법적 책임’의 재확인

○ 2020년 9월말 부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설치 - 미테구의 철거 명령 -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미테구의 철거 보류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일본에 의한 반동이 얼마나 생뚱맞은 것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보이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 주독 일본대사관·영사관은 물론이고 외무대신까지 내세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응」에 담긴 주장들을 거듭 제기했을 것이다. 즉, ‘평화의 소녀상’을 “한일간의 커다란 외교문제”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서, 2007년 각의 결정

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 ‘2015 합의’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소거한 국민기금의 활동상을 들이밀며 독일 측을 압박했을 것이다. 실체를 덮어가리는 현란한 말장난으로 독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철거 명령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 하지만 평화를 지향하는 소녀의 동상이라는 실체를 마주한 독일의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철거하라는 주장이 생뚱맞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미테구에서도 철거 보류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베를린 소녀상 사태는, 지난 30년간 지대한 노력을 통해 ‘법적 책임’을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확립한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의 역사를, 베를린 시민들의 상식을 통해 재확인한 사건이다. 정의를 외치는 과정은 지난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의가 스스로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며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이다.

○ 그 거대한 상식 앞에 일본 정부의 억지는 그저 초라해 보일 따름이다. 일본 정부가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초라함은 더 커지게 될 터이다.

V. 맺음말 - 포스트-피해자 시대의 출발점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은 지난 30년간 매 국면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만들어낸 소중한 역사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포스트-피해자 시대의 출발점이다.

○ ‘법적 책임’의 지속적인 확인과 더 많은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일본 정부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게 하고, 불가역적으로 사죄하게 하고, 범죄에 대한 속죄로서의 배상을 하게 하고,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통한 진상규명을 하게 하고, 전 세계의 후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 나서게 하고, 진심을 담은 위령을 하게 하고,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남아있다’고 선언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게 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대의 피해국인 동시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앞장서 추궁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한 국가로서, 그에 걸맞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확립한 역사가 다른 아닌 시민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국가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이 이 역사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지난 30년의 장대한 역사의 맨 앞에 서서 실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할머니들’과 정대협·정의연에 깊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생존자 없는 시대의 피해/생존자 중심주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책무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 ‘생존자 없는 시대’를 바라보며

이 글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30년을 맞이하여, 피해자 없는 시대를 준비할 정치의 책무를 규명할 필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중심은 ‘사실인정, 사죄반성, 법적배상’에서 ‘진상규명, 기억계승, 역사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위안부 운동 30년의 성과와 생존자 없는 시대의 남겨진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합의의 처리를 둘러싼 운동과 정치가 핵심 쟁점이다. 이는 ‘지난 30년’과 ‘다가올 30년’의 결절점의 의미를 지닌다.

한 국가와 개인에게 과거사 해법의 최종 목적은 원상회복이고, 그 구체적 수단은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이다. 이때, 한 국가의 상실된 국권과 파괴된 경제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한 개인의 파괴된 삶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문제가 있다. 생명의 박탈이나 전통의 파괴 등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않는 한’ 현실의 대체물로 복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금전적 수단 이외에 원상복구의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있었다. 또한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는 사죄가 상징적 의미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가시화’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여기에 정치적 현실주의의 개입 여지가 생긴다. ‘바람직한 것’보다 ‘달성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답하는 것이 정치적 현실주의라고 할 때, 불가능한 이상보다는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해서 문제 해결을 가시화하려는 노력이 국가배상이라고 불리는 행위이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류는 전쟁이 끝나면, 토지와 물품, 때로는 인간을 공물로 바치는 것으로 전쟁으로 훼손된 질서를 복구해 왔다. 국가 간의 근대적 질서가 확립된 이후로는 물적 수단을 통한 손해의 보상이 전후처리라는 명목으로 실시되

어 왔으며, 이를 국가배상이라는 개념으로 제도화해 왔다.

그것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노력이었기에 피해자 이후(post-survivor)의 노력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생존 피해자들의 문제제기로 피해자 중심주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생존자들이 사라지면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피해자 이후의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의 개입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제(배상)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로 전개되는 계기와 배경이 되었다. 여기에서 인권과 외교가 양립 또는 보완의 관계가 아니라 분리와 배제의 관계가 되었다.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 외교적 해결이 난망하고, 외교의 문제로 접근하면 인권이 침해되는 이율배반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를 양립하고 상호보완되는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II. 정치적 현실주의가 시도하는 화해 정책의 문제

정치적 현실주의에 대한 논의는 한스 J. 모젠소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교섭 과정과 관련하여 모젠소가 제시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여섯 가지 원칙 가운데 제5 및 제6의 원칙이 문제가 된다. 모젠소는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도덕과는 구분되는 영역을 규율하는 원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특정 국가의 도덕적 열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법칙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하며, 국제정치에서 ‘법적 도덕적 접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그러한 접근과의 ‘실제적이고도 뚜렷한 차이’를 인식한다.(모젠소, 국가 간의 정치 1, 81-108)

모젠소는 국가보다 상위의 행위자, 즉 세계국가의 창출을 통한 평화가 현재의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 아래에서 달성될 수 없다면, 국가 간 ‘조정을 통한 평화’가 현실적인 방법이며, 그 도구로서 외교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의 마지막 장이 외교에 관한 고찰인 것에 모젠소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모젠소에 따르면 외교가 의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제로,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힘을 감안하여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가 기능하기 위한 아홉 가지 규칙은 ‘십자군 정신을 벗어날 것’이라는 권고로 시작해서 ‘정부는 여론의 지도자이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으로 끝난다.(모젠소, 국가 간의 정치2, 434-447)

구체적으로 독일과 이스라엘의 화해가 정치적 현실주의에 이끌린 성공사례라는 분석과 평가가 있다. 즉 정치적 현실주의가 시도하는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 즉 정치적 및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국가 대 국가의 사이에서 시도될 때 이는 안전보장의 제공과 경제적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독일의 화해 정책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라는 ‘바람직하기 보다는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서 성공했다는 평가다.(武井彩佳, 255)

그러나 독일과 이스라엘의 화해가 현실정치의 결과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독일이 긴 시간에 걸쳐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당대의 도덕적 기준에 대응하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武井彩佳, 253) 그것은 독일이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보인 정치적 겸허함에서 나타난다. 즉 보상에 대한 해석은, 보상을 실시하는 쪽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쪽이 결정한다는 것, 가해자 측은 그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는 정치적 겸허함(武井彩佳, 31-37)이 독일이 정치적 현실주의의 화해 정책을 펴는 가운데 채택한 최소한의 피해자 중심주의였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 현실주의의 성공이면서도, 이상주의와의 대화를 시도한 결과로 이해된다. E. H 카는 정치학이 ‘정치적 현실(what is)’에 대한 학문인 동시에 ‘정치적 당위(what ought to be)’에 관한 학문으로, 과학인 동시에 철학이라고 규정했다. 카의 문제의식은 이상주의의 실패를 실패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카는 홉하우스가 미개인들의 특징으로 좋은 일은 ‘좋다’는 사실만으로 ‘옳다’고 믿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 것을 들어, 이상주의적 정치학은 분석의 산물이 아니라 의욕의 산물이라고 보았다.(카, 20년의 위기 23-28).

카에 따르면, 현실주의가 종종 현실추수주의로 흐르면서 사상을 무력화하고 행동을 부정하여, 비관적 냉소적 측면을 지니기도 하지만, “현실주의는 유토피아주의의 지나침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는 “이상주의가 현실주의의 모자람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같다”. “미성숙한 사상은 압도적으로 목적론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목적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고는 과거시대의 상상이다. 성숙한 사상은 목적에 관찰과 분석을 겸비한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은 정치학의 두 얼굴”이며, “모든 건전한 인간의 행동과 사상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사이의 균형 위에 서야 한다.”(카, 20년의 위

기, 29-32)

정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은 이론과 실천의 갈등을 매개로 지식인과 관료의 갈등으로 전개된다. 나아가 이는 또한 보혁 갈등, 좌우 갈등으로 나타난다.(카, 20년의 위기, 34-42) 선형적으로 사고하는 지식인과 경험적으로 대응하는 관료 사이의 갈등이 2015년 합의를 낳았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또한 지식인과 관료의 갈등, 나아가 보혁/좌우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피해자 없는 시대의 피해자 중심주의의 과제이다.

III. 다시,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

‘피해자 중심주의(victim-centered justice, victim-centered approach)’는 개념언어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말은 아니다. 권김현영에 의하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강간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역사적 산물이다. 여성주의적 전략으로서 유용성 논의에 열린 개념으로서, 성폭력 개념이 확장되고 판단 기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가해자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수용하는 현실에서 ‘피해자의 말을 들으라’는 요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산되어 정착했다.(권김현영)

피해자 중심주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게 증언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위의 100인 위원회는 ‘객관적 증거나 증인이 부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게 진술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규정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성폭력 사건의 의미 구성과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주관적 경험에 진실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100인위; 이미경 외 2011, 65; 박경신), ‘피해자의 피해 경험에 집중하고, 그 경험을 가부장적 남성적 태도가 아닌 온전히 피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민주노총)으로 파악하는 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했던 피해자 중심주의가 점차 성폭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피해자에게 일임하자는 의미로 변화했으며, ‘피해자 중심’과 ‘주의’가 붙여져 새로운 권위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권

김현영) 운동의 언어에서 절차의 언어로 변했다는 지적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진희경) ‘피해자 중심주의’가 여성주의적 언어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 피해자에게 객관성의 지위를 독점하도록 해서는 남성 중심적 사회를 해체하지도, 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을 전개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은 피해 여성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존중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정희진)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되기’ 경쟁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의 내용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권김현영)

이 모두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운동의 언어에서 정치의 언어로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정치성 때문에, 즉 그것이 권력 관계를 내포한 용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피해자 중심주의는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권력관계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범죄에서 등장하는 용어다.(박경신), 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 피해자 중심주의는 ‘권력관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범죄 등에 있어서 가해자의 처벌을 맹목적으로 중심에 두면 그 권력관계 하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피해자의 사후 회복 및 권력관계로부터의 해방이 도리어 저해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욕구와 관심을 중심에 두고 사법 절차 및 모든 사건 해결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향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다.(New Jersey Attorney General, 2004 ; Konradi ; Koss and Achilles)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를 사법제도의 1차 고객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안전, 권리 및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가해자 관리 전략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것”(Bumby)이라고 할 때, 1차 고객의 부재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존립근거의 부재 상태를 야기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이 중심이 아닌, 권력관계의 해체를 목적으로 할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추구되어야 할 전략이자 목표가 된다. 이때 피해자 중심주의는 법적 도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된다. 이것이 피해자 없는 시대의 피해자 중심주의가 정치적 책무로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 과제는 기억 이후 세계의 피해자 기억의 구성과 계승이다. 피해자 없는 시대의 홀로코스트 기억 계승의 문제에 직면하여, 니콜라스 체어(Nicholas Chare)는 “Holocaust Memory in a Post-Survivor World: Bearing Lasting Witness”에서 증언을 하기 위한 철학적, 시각적, 세대간 노력에서 스토리텔링의 시학(poetics)을 탐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그는 "상호텍스트적으로 생성되는 기억(intertextual generative memory)"이라고 할 만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홀로코스트 기억에 관계되는 사람들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의미가 있는 연결이 만들어지도록 문학, 사진, 철학과 함께, 기념관 방문의 경험 등을 한 자리에 생산적으로 합류시키는 것을 지적하는 말로 제시되었다.(Gigliotti and Earl, Introduction) 피해자 없는 시대 위안부 문제의 전략을 구상하는 데 출발점으로 삼을 만한 제언이다.

IV. 다시, 정치적 책무란 무엇인가?

정치란 ‘본질적으로 논쟁적 개념’이다. 교과서적 의미에서 ‘정치’란(헤이우드, 27-42), 가장 넓게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규칙을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하는 활동’이며, 갈등과 협력이라는 현상과 관련된 행위/활동의 일종이다. 그 어원이 폴리스(polis)라는 점에서 갈등과 협력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정치 공동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정치는 폴리스에 관계되는 일로서 그것은 국가에 관련되는 일. 국가의 통치 및 권위 행사와 관련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 ‘타협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을 의미하기도하며, 따라서 ‘가능성의 기술(예술)’로 불리기도 한다. 그것은 ‘권력 할당을 통해 갈등하는 세력 사이에 화해를 이끌어가는 활동’이며, ‘폭력이나 강제보다는 조정을 선택함으로써 질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크릭)으로서, 가해-피해의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 또한 정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가해진 가해 책임을 바로잡는 행위가 정치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렌트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책임이 한 국가 안의 공통 성원(common membership)과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영, 143-144). 아렌트는 ‘집단적 책임’이라는 논문에서, 정치적 책임과 죄를 구분하고, 집단에게는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유했다. 아렌트는 ‘내가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국가나 정부의 이름으로 특수한 행위자들이 저지른 행동이나 일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아이리스 매리언 영의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이다. 영은 아렌트

의 분석이 ‘관념의 단순성’을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독해하여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행위자가 연루되는 방식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이 구분을 통해 영은, “광범위한 국민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조치나 사건에 관해 공적인 자세를 취하고 거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하고자 노력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를 촉진해야 할 의무가 개인에게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정치적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영, 144) 영은 특히 “모두가 유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도 유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명제에 집중했다. “모두가 유죄인 곳에 서는, 결국 누구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영, 145, 각주5)

영에 따르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이후의 정치적 책무가 되는 것은 모두가 유죄(아렌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세계의 질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며, 세계의 질서가 개인을 떠나 정치 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시간을 소급하거나 미래지향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영, 147-148) 또한 그것은 공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영, 165)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없는 시대의 정치적 책무로 자리 잡게 된다.

그로부터 영은 책임에 관한 사회적 연결 모델을 제시한다. 부정의와 관련된 책임은 개인이 공동의 헌법 아래 생활한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구조적 부정의를 생산하는 다양한 제도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영 189) 법적 책임 모델이, 불법행위법에 따라 책임을 부여하고 제재, 처벌, 보상 강요, 배상 등의 목적으로 책임 당사자를 확인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그런 모든 실천들을 포함하며, 이런 책임 개념은 목적상 과거지향적인 개념인데 반해, 정치적 책임은 미래지향적이다. 나아가 정치적 책임은 도덕적 행위자의 의미를 의식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에 부과된다. 도덕적 행위자란, 타인의 운명에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이며 국가나 다른 조직화된 기구가 종종 일부 사람들에게 가할 수 있는 이해에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영 169-190)

영이 제시한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의 결정적 차이는 사회적 연결 모델이 가해자를 격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책임 부여의 주된 목적은 미래지향적이며 책임은 본질적으로 공유되어, 정치적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면제될 수 있다.(영 189-190) 피해자 중심주의를 법적 책임에 한정할 때, 그 책임의 대상은 생존 피해자에 한정되어 어느 시점엔가 과거형으로 완결될 수 있으나, 사회적 연결 속에서 구현해야 할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사회적 연결이 의식되는 정치적 공동체가 지속하는 한, 피해자의 생존 유무에 무관하게 추구되어야 할 미래지향적 과제가 된다.

나아가 영은 구조적 부정의가 개인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구조적인 지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 책임보다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전해정, 180). 구조에 대한 규범적 판단의 관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기존의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논의는 정의 회복의 책임을 피해자-구조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영은 법적 책임 모델에 대신해서 사회적 연결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들이 부정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논의는 피해자 이후 피해자 중심주의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는 한편 개인과 정치적 공동체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체를 주체로 한 책임론은 성립하기 어렵다. 즉 이른바 국가가 행위주체가 되는 책임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상호 연결된 ‘개인의 정치적 책임’이 강조된다.

V. ‘화해의 국제정치’와 피해자 중심주의

‘화해의 국제정치’는 국제정치의 ‘네 가지 이론’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국가 간 화해란 ‘국가 간 적대행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국제정치적 과정’이다.(천자현, 2012, 1-29) 국제정치 현실에서 존재했던 국가 간 화해의 사례들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방식을 따랐다. 첫째, 국익(특히 안보이익)의 조정과 공유가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현실주의적 접근. 둘째, 안정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속에서 화해가 가능하다는 제도주의적(자유주의적) 접근. 셋째, 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상호인식의 침투 속에서 화해가 가능하다는 구성주의적 접근. 넷째, 가해자의 처벌/피해자의 용서를 통한 징벌/회복으로 화해가 가능하다는 정의론적 접근 등이다.

한일간에는 위의 첫 번째 방식의 화해를 시도했던 것이 ‘1965년 체제’와 ‘2015년 합의’라는 실패를 초래했다. 두 번째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 성과들이 1990년대에서 2010년까지 나온 선언과 담화들이다. 즉 1993년의 고노담화에서 시작되어 1995년의 무라야마담화,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 2002년의 북일공동선언, 2010년의 간담화(菅談話) 등의 성과들이다. 세 번째 과정은 아직 시작되지 못했으나, 그 맹아들이 발아하고 있는 상황이며, 네 번째 과정은 가해자/가해국, 피해자/피해국의 구분과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바, 처벌 또는 용서의 (불)가능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국제정치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화해의 국제정치’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식의 현실주의적 접근은 행위주체로서 ‘국가’가 상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영역은 협소하다. 둘째 방식의 제도주의적 접근은 다양한 행위주체의 참가가 상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단체)의 참여 가능성이 열린다. 셋째 방식의 구성주의적 접근은 피해자 정체성을 양국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으며, 넷째 방식의 정의론적 접근에서 비로소 ‘피해자 중심주의’는 실현되어야 할 핵심 가치가 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한일간의 과거사 해법은 제1 방식의 현실주의의 유산을 극복하는 한편, 제2 방식의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한 해결 과정을 재개하여 제3 방식이 자리잡을 공간을 열어주고, 최종적으로 제4의 회복적 정의를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제1 방식의 한계 극복, 제2 방식의 재개, 제3 방식의 시도 등이 제4의 목표를 구현하는 전단계(前段階) 실천과제이며, 최소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과제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우선 ‘2015년 합의’의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제2의 방식의 재개와 제3 방식의 시도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4의 ‘회복적 정의’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VI. 한일관계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등장과 전개

위안부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2015년 12월 9일,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연구자 활동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이명원 경희대 교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뉴시스, 2015.12.10.) 이후 2015년, ‘12.28 합의’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의 중심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법으로 강조했던 ‘피해자 중심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그 중심이었다.(한겨레, 2015.12.30.) “피해자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피해가 일어나게 한 모든 정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가 그 피해 이외의 어떤 추가적 피해도 입지 않도록 그 곁에 서는 것”,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자 중심주의로 잘 버려진 분노”와 같은 언급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조익상, 주간경향 1159호, 2016.1.12.)

문재인 정부 들어 ‘피해자 중심주의’는 대일 외교의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강경화 외교

부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 나가며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천명했다. 나아가 “(위안부 출연금)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고,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라는 표현도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 비판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도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피해자 중심주의를 언급했다.

위안부 합의 검토 TF 출범(2017.7.31.)에 즈음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2017.11.23.)하여,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세운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증 TF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고수하되 한일간 입장 평행선 속 관계발전 추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2017.12.31.)

정의기억재단은 검증 TF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여(2017.12.18.). “(검증 TF) 발표를 알리는 그 과정에서조차 피해자와 지원단체에게 그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양해조차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내용을 통보한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향한 무형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합의 직후에 실시된 윤미향 대표 인터뷰(2017.12.29., 통일뉴스)에서도, 윤미향 대표는 “피해자 중심은 과정보도 내용에도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 합의가 이뤄지는가. 동기도, 과정보도, 내용도, 결과도 모든 게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협의를 하는 게 피해자 중심이다”고 주장했다.(통일뉴스)

여가부는 2018.11.21.에 화치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 밟을 예정이라 발표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18.12.28.에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하여, “2015년 한일합의 완전 무효”를 주장하며, “2015년 한일합의 발표 이후 유엔인권기구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한일 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했다고 하여,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후속조치가 이뤄

지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범죄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행위는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2019년 7월 7일, 정의기억연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확인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국제인권 기준인 피해자중심주의 접근 원칙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 해법의 원칙으로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확고히 자리잡아갔다. 2019.11월에서 12월에 걸쳐 ‘문희상 안’을 둘러싸고 피해자 중심주의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다. 문희상 의장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운 데 대해 비판자들은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선택적으로 접촉하시고 제한된 의견 수렴 채널을 가동해 법안을 추진하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점 또한 놀랍”다고 비판했다.(이나영, 지연된 정의는 무엇을 남기는가, 경향신문, 2019.12.15.)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 청구 각하를 결정하면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헌재 결정은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완전하고 효과적인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2020.2.11.)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이라는 생각을 피력하며, 이것이 한일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변호사 시절 피해자를 대리했던 경험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윤미향 후보도 기자회견(통일뉴스, 2020.4.5.)을 갖고, 우리 내부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거사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하며, 그것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주장했다. 즉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차원, 입법부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입법을 통한 진실규명과 자료수집, 기록과 체계화를 통한 진실규명 작업의 촉구가 1차적인 과제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정부에 책임을 촉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2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외교를 벌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0년 4월 15일 정의기억연대는 1435차 온라인 수요집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국회의원은 할머니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한 해결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근거 기반을 갖추 수 있는 뜻 있는 국회의원들을 20대 국회에서 (기대했는데) 논의조차 못했다. 우리가 30년 동안 외치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했던 간절함을 담아 법안이 통과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한발짝 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용수 기자회견’과, ‘박원순 사건’ 이후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 중심주의’가 혼란을 겪으며 재구축되고 있다. 여기에서 참고할 것은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1985년 채택된 국제연합(UN) 공식 문서인 '범죄피해자와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이하 피해자 인권선언)은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제적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 피해자 인권선언은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개별 국가의 형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관련 규범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적 권리의 실질적 손상 등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를 존중하고 옹호하는 데서 나아가 공동체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오마이뉴스, 2020.6.10.)

지난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림의 날’ 축사를 통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이며,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피해자가 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튿날인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하여,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위안부 문제 등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 중심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징용’ 문제에서, “대화가 중요하다면 한국이 구체적 해결안을 제시하라”고 하여 일본 정부가 책임론에서 비켜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 2020.8.16.) 이는 물론 일본 정부의 2015년 합의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해석 프레임을 깨는 것이 1차적 과제다.

VII. ‘2015년 합의’의 재검토: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을 열기 위해

‘2015년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 해법에 세 가지 수준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2015년 합의’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가 제공하여 한국 정부가 일부 사용한 10억엔의 처리를 확정하는 것이다. 셋째, 2015년 합의에 입각해 한국 정부 또는 일본 정부의 추후조치(필요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 등이다.

2015년 합의 검증 TF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현, 예산조치의 실시 등 ‘3대 핵심사항’에서 진전이 있으나, 소녀상 문제,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 자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등 세 가지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발표하는 가운데 검증 TF 위원장은 향후 파기 무효화, 합의 유지, 제3의 방안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이성의 비판에도, 의지의 낙관을 믿으며’, “문제가 있고 치열한 해결 노력이 있으면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제3의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통령도 입장 표명(12.28.)을 통해 2015년 합의가 절차적 내용적 흠결이 확인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었으며,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피해자 중심해결과 국민이 함께 하는 외교 원칙 하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교부는 후속조치를 발표(2018. 1.9.)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조치를 모색하고, 10억 엔 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기금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재단 운영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를 발표하면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위안부 문제와 같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우려와 의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미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2018.1.16.)를 통해, “국가간 정부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약속 파기나 재협상 추가 요구는 없다”면서, 문제 해결에서 확인되어야 할 세 가지 기준으로 “역사적 진실, 보편적 정의, 피해자 입장” 등을 제시했다.

물론 이에 대해 아베의 일본 정부는 “1 밀리미터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고 하여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일체 대답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검증 TF 보고에 대해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위안부연구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2015년 합의에 드러난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의 부재를 비판하고, 재단 해산, 10억엔 반환, 파기 무효화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제구기구 권고에 따른 인권회복 조치의 이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공식사죄,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더불어, 검증 TF 보고서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는데, 책임통감과 정부예산 조치를 법적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반박했다. 피해자 및 지원 단체가 주장해 온 법적 책임 인정은 ‘가해 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책임 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한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문제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의 복원과 대외관계 전반을 고려한 외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해법은 대통령이 천명하고 외교부장관이 언명한 바의 두 가지 입장에 입각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즉 ‘2015합의가 정부간 공식 합의임을 고려하여 파기와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2015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 사이에 존재했다. 한국정부는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형식은 유효하나, 내용이 문제라는 인식에 서서 그 형식과 내용 사이의 간극이 ‘일본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조치’로 내용이 채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국제사회는 2015년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영하여 ‘개정(revise)’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피해자 중심주의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합의 가운데 피해자들이 반발했던 ‘소녀상’ 문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 자제’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의 설립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한 기억계승 활동의 제도적 실행이 현실적 과제이자 해법으로 등장했다.

VIII. 현실적 해법의 출발점으로서 ‘2015년 합의’와 그 이행의 조건들

2015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이행에서 한국의 이행은 일본의 이행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명은 일본군 관여 사실을 인정한 위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한 데 따른 것이며, 일본 정부의 금전적 조치는 이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합의 직후,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이 합의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2015년 합의’가 ‘사문화’되고 있는 일차적 원인이다.

합의의 일본 발표 내용 가운데 중심은,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거출하고, 일본과 한국 양국이 협력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의 사업을 행하기로 한 것이다. 즉 10억엔 거출과 전달로 일본의 책임 이행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즉 2015년 합의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합의 내용에 입각해 일본 정부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문화’된 합의의 ‘소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즉 일본 정부의 이행 의무가 10억 엔을 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 사업의 실시에 있다는 점이 합의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분명히 공유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10억엔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그 사용을 위해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억엔의 의미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예산 조치가 일본 정부의 가해 사실 및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일 때, 피해자들은 이를 수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합의 직후 일본 정부는 이 금전적 조치가 ‘배상이 아니라’ 못 박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여, 위의 방식을 일본 스스로 부인한 바 있다. 따라서 2015년 합의 사문화의 책임은 일본에 귀착된다. 10억엔의 정부 충당이라는 것은 61억원의 미집행 분을 동결하고, 46억원의 집행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여, 즉 예산 조치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 일본 정부

의 설명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성의있는 자발적 조치가 있다면, 46억원 집행분을 추인하고, 일본과 협력하여 61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상처 치유를 위한 제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행동’은 ‘진실 인정, 진심을 다한 사죄, 재발 방지 노력’이다. 그런데 이는 ‘추가조치’가 아니라 ‘필요조치’로서, 합의의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장의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5년 협정이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과 되어 있는 것과 대비해, 2015합의는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고 되어 있다. 이는 2015합의가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5합의는 로드맵의 의미를 지닌다. 즉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언젠가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실시할 조치란,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10억엔의 전달 만으로 일본이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해결될’의 주어가 ‘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기시다 외상이 밝힌 제1항에서 언급한 ‘위안부 문제’이며, 이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에는 소녀상의 문제와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 자체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 두 문제는 2015합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1밀리미터도 옮길 수 없다’는 것은 합의에 대한 몰이해(또는 자의적 해석)에 더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몰이해가 확인되는 말이며, 이것이 만일 일본이 취해야 할 ‘필요조치’에 대한 거부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합의 위반이다. 반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합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 또한 합의에 대한 자의적 해석(또는 과잉해석)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참고할 것은, 2018년 1월 9일,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추가 조치’ 수용 거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일본의 합의 이행은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도 이행할 것이며, 한국 측에게도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추가 조치’가 아닌, ‘필요 조치’는 진행중

이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은 한국 측의 ‘합의 이행’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도 할 일이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자민당 정치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일본이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최종적으로 사문화될 것이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일본 외교사에서는 일본의 행위로 조약/협정이 사문화된 허다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음. 1956년의 소일공동선언, 2006년의 후텐마 기지 이전에 관한 미일합의, 2002년의 북일평양선언 등이 일본 측의 약속 위반,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사문화된 사례들이다.

IX. 포스트-피해자 시대, 2015년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합의에서 확인된 일본의 가해 사실 인정과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법적 책임의 완수 만이 사문화된 합의를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공은 일본에 있다’.

일본의 책임있는 사람(스가 총리, 또는 도미타 대사)이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하여, 고노담화에서 확인한 바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2015년 합의에 입각해 일본 총리대신의 사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베 내각에 이어, 2015년 합의를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계승한다는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 즉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과한다는 문구를 스가 총리의 육성으로 확인해야 한다. 2015년 합의는 아베 내각총리대신이 주어로 되어 있어, 개인의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 즉 “아베 내각총리대신은(=>나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이라는 부분이다.

나아가 2015년 합의에서 확인한 10억엔은, 고노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대로 일본군에 의한 전시 여성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마음의 징표로서 일본의 예산 조치로 거출하여 전달하는 ‘사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10억엔이 합의에서 확인한 대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피해자 없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10억엔의 잔여금과 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 설

립 요구를 반영하여, ‘진상규명과 연구교육, 기억계승’을 위한 시설을 라키비움의 형태로 설립하여, 국제사회와 미래로 열린 해결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상의 일본 측 노력을 전제로, 2015년 합의가 보완되어 그 한계가 극복되었음이 확인될 때, ‘평화의 소녀상’은 위에 언급한 라키비움 형태의 시설/기구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수요집회의 상징이었다는 점이 계승된다. 이후 수요집회는 위의 시설/기구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수요행사(이용수 학교, 세미나, 간담회, 증언 낭독회 등)로 전환되어 실시될 수 있다.

이 시설/기구는 일본의 연구자, 활동가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재단을 국제사회에 ‘전시 성폭력’의 ‘기억계승’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여, 전시 성폭력과 관련한 아시아의 여성 관련 국제레짐을 주도하는 기구로 발전시킨다.

정대협 운동 30년인 2020년, ‘피해자 없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한 조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아베 시대가 마감되고,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붕괴하고 있다. 어쩌면 현재 우리는 세계사 문명사의 전환점에서 그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의 무한확장으로서 지구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시 국제정치의 전면에 다시 나서고 있는 ‘국가’들이 정치적 현실주의를 복원시키고 있는 한편, 그 동안 쓰레기통에 쳐 박혀 있던 국제적 도의도 희망의 얼굴을 슬며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대화를 개시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데 더 이상 없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정치적 책무는 정부만의 책무가 아니다.

포스트 피해자 시대의 역사적 책임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I. 들어가며

‘포스트 피해자 시대’보다는 ‘포스트 생존자 시대’라고 말해야할 것 같다. 우리가 알아가야 할 피해자의 이야기는 사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존자든, 사망자든, 행방불명자를 막론하고 말이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포스트 생존자 시대’가 어째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었는지 질문하고 싶다. 김학순이 등장한 이후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 생존자는 어떤 의미였나. 역사적 책임에 대한 ‘각성’과 운동의 ‘동참’ 계기,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의 ‘동력’이 되어주었다는 점에서 생존자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어떤 분야에서는 ‘성역’이라는 비유가 나올 만큼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된 측면도 있다.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향을 도모하는 데 생존자의 말과 행보를 좇았던 흐름에는 식민지와 전쟁, 성폭력을 겪고 생존해낸 여성을 위로하고 존중하고 싶은 ‘선한 의지’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책임 주체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위안부’문제가 각 세력의 정쟁의 명분으로 동원되기도 하면서 생존자가 전면에 내세워지기도 하였다. 운동을 무력화하고 폭력의 시대를 정당화하고 싶은 세력들은 생존자의 기억을 주요 공격 표적으로 삼았다. ‘포스트 생존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생존자를 대변한 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존재 또는 세력들도 출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기도 전에, ‘안다’고 말해버리거나, ‘알고 싶지 않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간간히 보이는 것은 무척 우려스럽다. 폭력의 시대를 지속하고 싶은 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반 지성’의 역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는 ‘위안부’ 문제를 알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모르겠다는 기분과 싸우며 공부하고 있는, 한국에 사는 40대 여자 역사 연구자 한 명일 따름이다. 지금도 ‘역사적 책임’이라는 거창한 주제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씨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일

상 속에 존재하는 여성혐오,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보다는 더욱 확장되어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위안부’ 피해역사상을 이해하고 역사쓰기를 해오는 과정에서 생존자에게 많이 기대면서 짐을 짊어지게 했다는 성찰도 있다. 이 때문에 몇 가지를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며 피해자 관점을 지키되 피해자를 내세워 변명하지 않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역사쓰기의 중심을 찾고 싶었다.

II. 일본군‘위안부’제도의 피해실태에 대한 접근

두루 알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15년 동안, 일본이 전쟁을 치렀던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그 피해 양상은 시기별, 지역별, 정치상황별에 따라 다르다. 일정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아니라 일본 공권력의 ‘통첩’에 의해서 그때 그때 ‘위안부’ 제도의 정책방향과 내용이 정해졌다는 것은, 제도의 은폐성과 전시 상황에 따른 가변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실태 연구는 개인 연구자의 전문연구와 관계 분야 연구자들의 공동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 전쟁의 성격과 부대 이동의 흐름, 해당 부대 및 장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총동원체제가 일본의 전시정책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 본국, 식민지, 위임통치지역, 만주 지역, 점령지 등의 정치상황과 현지 ‘일본인 신분인 자’ 및 친일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본과 국제사회가 서로 갈등하고 대응하고 타협했던 관계도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1870년대부터 일본 공권력의 성매매 관리 제도가 노예제도, 인신매매 제도라고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응해온 일본정부의 맥락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가 등장했다.

일본과 국제사회의 대립이 노골화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투지나 점령지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관계 자료를 상대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중일전쟁 이전 시기나 20세기 초반부터 일본이 정치적 지배를 했던 식민지, 태평양 섬들, 만주 지역 등지에서는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검색 키워드로 자료들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전 시기 위 지역들에 끌려갔다는 피해생존자는 상당수 존재했다.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유괴나 취업사기를 당해 끌려갔고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으며, 군인과 경찰이 드나드는 곳에서 일상적 폭력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이

유곽 또는 위안소였는지 의심하고 위안소임을 입증하라고 질문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는 자와 지켜보는 자들은 그 질문이 왜 중요한지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식민지 범죄, 전쟁 범죄, 여성혐오 범죄로 제기된 지 30년이 된 현 시점에서도 진상규명 차원의 피해실태 연구는 갈 길이 아직 멀다. 각각의 피해양상과 원인을 규명해야 가해주체는 사죄든, 성찰이든 하고 시민사회는 시공간을 가로질러 연루되어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돌아보고 재발방지에 힘쓸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 피해 실태 연구의 어려움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자료집도 여러 권 발간되었다. 이제는 따로 또 같이, 각각의 연구에 집중하고 또 머리를 맞대면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던 매트릭스의 전모를 드러내고 또 해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주변연구에 대한 충실한 검토, 그리고 체계적이고 꾸준한 연구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III.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안부’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내 생각을 들은 몇몇 일본인 연구자들은 “누가 위안부인지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전시 성폭력 시스템의 가해구조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다.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찾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일본 공문서에 군 관련 ‘작부’, ‘특 요원’, ‘위안소 종업부’, ‘예창기’로 분류된 여성들의 리스트를 작성했고, 군인 및 위안소 관리인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업소명과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챙겼으며, 관계 명부 등에 기입된 ‘위안부’ 피해 추정자를 리스트에 추가했다.

피해자 리스트 작성에 집착하게 된 배경에는 2005년부터 만 4년간 근무했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때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이미 작고한 자나 행방불명된 자인 전시 성폭력 피해(추정)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던 사람들은 좀 복잡한 상태였다. 피해자를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충분히 보살피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세월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동체 안의 ‘수치스런 존재’ 시각에 가족 모두 영향을 받아야 했던 세월을 떠올렸다. 이들은 피해자 위로와 가족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국가가 공인하는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징병, 징용 피해와 달리, 당사자가 직접 기록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위안부’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결국 피해신고자의 대부분이 ‘판정불능’ 상태로 남게 되었다.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모순적이고도 기이한 상황들, 피해자는 피해를 숨기고자 했으나 공동체는 눈치 채고 2차 가해를 하고,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는 한편 피해를 입기도 하며, 가해주체는 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당대 공창제 하의 인신매매 매커니즘과 총동원체제, 그리고 민간인을 활용하였으나 피해자 차원에서 그 연루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사실 확인을 못하는 상황에 크게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의 시점에서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는 일을 ‘ 명예회복’으로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판정불능’으로 응답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 리스트 작성에 몰두하게 됐다.

그러나 강제동원 진상규명 위원회도 해체됐고, 동원 전후의 피해자를 직접 본 가족들도 작고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생존자의 ‘말’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생긴 상황에서 피해자 파악이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피해자/가족 보다는 모집업자 네트워크나 총동원체제 하 동원자들을 조사하는 것이, 그 보다는 위안소 업자를 조사하는 것이, 그 보다는 업자를 선정한 군이나 현지 영사관 경찰/헌병을 조사하는 것이, 그리고 ‘위안부’ 이동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를 내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라는 명분 앞에서 주요 인물들의 인적사항이 먹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타인의 조사나 연구 내용을 끌어들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나의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체계적인 조사 시스템이 없고 역사적 책임 차원의 공공성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조사나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니, 주요 정보는 익명화되고 성과물은 비공개화되며 자료는 권력화된다. 따라서 누군가의 연구나 조사를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서 서로의 성과를 교차검토하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행적을 낱알이 공유할 수 있는 조사-연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걷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라는 명분 뒤로 연루자의 행적을 숨겨버려서도 안 된다. 이는 비난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연루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재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IV.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본군‘위안부’ 역사쓰기

포스트 생존자 시대에 대한 우려는 역설적으로 그간‘위안부’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자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해왔음을 말해준다. 피해자가‘위안부’로 동원되고 위안소 생활을 강요당하고 전후 방치되는 과정에서 정보에서 배제되고 주변인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해자에게‘피해내용’을 물어보고 때로는‘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진상규명은 그러한 전시 성폭력 시스템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주체와 관계자의 몫이며, 문헌 자료는 피해자를 타자화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위안부’역사쓰기의 의미는 피해자가 자율적인 일상을 꾸려갈 수 없게 해왔던 권력, 사회, 관계를 반복해서 만들지 않는 데 있다. 역사쓰기의 방법과 방향은 피해자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한다. 피해자의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정한 말을 반복 또는 거부하기도 하며, 관계 속에서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 선 생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기억, 공간의 흔적, 자료의 비판적인 독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포스트 생존자 시대에도 성폭력 가해구조와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이 지속되는 한 ‘위안부’피해자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릴 것이다.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쓰기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데서 가능하다.

〈전체 토론〉

책임 규명 -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

이상희(변호사)

I. 책임과 사죄의 관계

- ① ‘언제까지(또는 어디까지) 사과를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왜 책임 규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사실상 같은 의미.
- ② 사죄는 책임의 전제조건이면서 책임의 결과이고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책임과 사죄를 분리해서 볼 수 없음.
- ③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파블로 파비앙은 사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인정’, ‘책임의 인정’, ‘피해자를 존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과 후회를 공적으로 표명하는 것’, ‘재발방지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2019. 7. 12.)
- ④ 2015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사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음.

“2015한일합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일본 정부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위와 같은 사죄의 표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원인과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정을 사죄로 인정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보았음.

II. 책임 규명의 의미

- ① 책임 규명은, 국제질서 속에서 배제당하고 소외된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과정임.
- ② ‘법적 책임’은 공동체의 정의실현과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짐.
 - ▲ 우선, 법적 책임은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즉, 국제사회의 중요한 가치, 특히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강행법규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 실현과 직결된 문제임.
 - ▲ 또한, 일본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짐

III. 책임규명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

- ①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는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청산을 위한 과거사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② 책임 규명을 위한 여정이 바로 인권과 평화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을 막는 길임.

토론문

강정숙(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30주년 참 긴 시간입니다. 특정주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시도를 하며 활발하게 해 온 운동은 이 운동 외 또 있을까요? 이 운동에 대해서는 <‘정대협’운동-30년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의 역사>(이나영)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이 운동을 이끌어 온 정대협 내지 정의연 관계자에게 30주년 축하 인사와 더불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1992년 3월부터 이 운동과 인연을 가진 사람이다보니 토론제안을 넘죽 받았으나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참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언어나 생각이 이제 오히려 이곳에서는 꽤 낡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각설하고 제가 역사학을 하는 까닭에 발표자 여러분의 내용을 모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포스트 피해자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중심에 두면서 다른 영역 발표에 대해서는 의문만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 올해 안티정대협의 언론 움직임을 보면서 역사학적인 중심이 서야 함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역사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는 없지만 피해자중심의 운동을 하다 보니 역사학적 성과가 운동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역사학에서도 운동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점 역시 있었습니다.

<포스트 피해자 시대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질문

0 ‘포스트 피해자 시대’보다는 ‘포스트 생존자 시대’라는 지적,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여성혐오,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보다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박정애선생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0 다만 구체적인 점에 들어가 몇 가지 질문

1) ‘일본군 ‘위안부’ 제도 하의 피해 양상은 시기별, 지역별, 정치상황별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왜 일본군‘위안부’제라고 하였는지. 그리고 위 문제에서 정치상황별

을 따로 내어 분류한 의미는 무엇인지?

2) ‘위안부’ 피해자 전체상을 접근하기 위해 어떠한 피해자 범주 분류가 적절할까요.

발표자는 범주를 생존자·사망자·행방불명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피해신고에 대응한 분류였으니 또 다른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신고하여 우리의 인식 안에 들어온 피해자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피해자 등 여러 방향으로 피해자를 읽어낼 수 있는 방식이 필요

3) 피해실태조사와 전체 시스템 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피해자 파악과제와 전시 성폭력 시스템의 가해구조 해명은 별도의 과제인가. 피해자 파악이 정부와 연구자 사이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려는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해조사는 무엇을 위해 하는가. 포괄적인 진상규명, 그래서 결국 피해자 범주만이 아니라 전시 성폭력 시스템의 가해구조 규명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피해자를 밝히는 것은 구조에 대한 해명과도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피해조사 방법은 여러 방식이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 언급한 피해자 리스트 연구. 피해자 명부/명단의 의미를 피해자 판정의 기능으로 너무 협소하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발표자도 중국 명단 등을 통해 피해자 리스트의 의미를 밝힌 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피해자 명부가 가진 제한성을 뛰어넘어 활용할 방법과 과제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자가 접근하는데 있어 현장성(군과 피해자, 피해자와 피해자, 피해자와 그 지역과 주민 관계 등을 보여주는)은 매우 중요한데 명부는 이러한 현장성을 드러내준다. 그리고 피해신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자료에서 실존하는 여성들은 중요한 증거, 증인으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서 발표자가 밝히고자 하는 주제 내용으로 나아가는 또하나의 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 지역의 피해조사는 지역과 개인, 시스템 등을 결합해 나갈 수 있다. 지역조사가 있었던 곳은 경주나 광주, 경남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좀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 공유하여 새롭게 접근하면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0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연구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주제, 역사연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일, 역사가의 시급한 과제를 어떤 것이라고 보나요.

생존피해자, 군‘위안부’만이 아니라 기업위안부, 나아가 군인 군속 노동자 등 남성들의

경험도 좀더 목적의식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0 포스트-피해자 시대의 법적 책임의 김창록선생님 의견에는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 법적 적용의 세밀함, 불법적 행위를 지적하는 가지 수 증가로 나아가고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담보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 점이 있지만 우리도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았다. 필자는 운동단체가 원칙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원칙은 지키되 유연한 현실적 모색은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남기정선생님이 지적하였듯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사실인정, 사죄반성, 법적배상’에서 ‘진상규명, 기억계승, 역사교육’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틀에 의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남기정선생님이 언급한 ‘회복적 정의’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법학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어떻게 보는지 김창록 남기정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세션Ⅲ.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30년, 미래세대 토론

사회: 강성현(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교수)

2-3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라운드 테이블

김태정(두레방)

최나현(한베평화재단)

최성용(성공회대)

최예린(서울대)

挺対協・正義連 30 周年

記念シンポジウム

連帯で共に歩んだ三十年、

平和の希望になる正義連

プログラム

10 : 00～10 : 10 あいさつ、祝辞

I 部 挺対協30周年シンポジウム

10 : 10～12 : 10 セッション I 挺対協運動30年の歴史と意義

映像：挺対協活動の歴史と意義

発表① 挺対協運動の胎動と結成、被害者と共に歩んだ30年の意味：

李娜榮(正義連理事長・中央大学教授)

発表② 被害者と共に歩んだ人々

韓国 安李貞善(大邱市民の会前代表)、李キョンヒ(馬昌鎮市民の会代表)

宋道子(統営巨済市民の会代表)、金デウォル(ナヌムの家学芸室長)

海外 梁澄子(日本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共同代表)

李ジョンシル(米国 ワシントン挺身隊問題対策委員会 元代表)

朴恩徳(豪州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実践推進委員会 元代表)

13 : 30～15 : 25 セッション II ポスト被害者時代と責任

司会：梁鉉娥(ソウル大学名誉教授)

発表① ポスト被害者時代の法的責任(金昌祿 慶北大学教授)

発表② ポスト被害者時代の政治的責任(南基正 ソウル大学教授)

発表③ ポスト被害者時代の歴史的責任(朴貞愛 東北アジア歴史財団研究委員)

討論 姜貞淑(成均館大学研究委員)・辛熙美(民衆言論市民連合 事務局長)・

コ・ミキョン(韓国女性の電話 代表)

15 : 25～16 : 00 質疑応答

16 : 20～17 : 30 セッション III 私たちが新たにつくっていく30年、未来世代の討論

司会：康誠賢(聖公會大学教授)

2部 挺対協・正義連30周年記念式

17 : 30～18 : 00 記念式：内外からの祝賀動画、功労賞授与・祝賀公演

問い合わせ：info@womenandwar.net

セッション1、

挺対協運動30年の

歴史と意義

司会：鄭鎮星(ソウル大学名誉教授)

‘挺対協’ 運動

30年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歴史

挺対協/正義連 30周年 記念 シンポジウム

2020.11.14

李娜榮(正義連理事長・中央大学教授)



1

1. 長い沈黙を破る!

2

1 | 長い沈黙の氷を破る!

背景

- 1) 尹貞玉教授：同時代の女性たちに対する罪責感と責任感, 加害者たちに対する怒り
- 2) 李效再教授：韓国女性学、分断社会学の創始者
- 3) <韓国教会女性連合会>を中心としたキリスト教の女性たち
- 4) 1980年代 民主化運動とともに展開した韓国女性運動の成長と<韓国女性団体連合>

3

1 | 長い沈黙の氷を破る!

「1943年、私の記憶ではたぶん11月だったと思うの。大学1年生、17歳だったと思う。高校生の頃から先生に看護師になれて盛んに言われたの。挺身隊に行けってことよ。大学を通っていた頃はもっとうごかった。男性は強制徴用で手当たり次第に捕まっていた頃よ。学徒兵になれば、女子には挺身隊に出ると……夏休みが終わって2学期になるともっとひどくなった。ある日、私たち1年生を本館の1階地下室に全部押し込めたの。その時から変な感じがしたわ。軍服を着た人と誰かが来て、四角い紙を配ったの。文字がびっしりと印刷されていたけど、読む時間も与えずに朱肉を回して拇印を押せと言うの。内容も読ませずに、拇印だけをさせてすぐに集めて行ったのよ。何が書かれていたのかも分からない」
(口述者：尹貞玉、出处：20年間の水曜日、110頁)



背景

- 1) 尹貞玉教授：同時代の女性たちに対する罪責感と責任感、加害者たちに対する怒り

4

1 | 長い沈黙の氷を破る!

背景

2) 李效再教授：第一世代 韓国女性運動家、 韓国女性学と分断社会学の創始者

1987～1990 韓国女性民友会 初代会長

1987～1998 韓国女性労働者会 理事、韓国女性労働者協議会 理事

1990～1992 韓国女性団体連合 会長

1991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共同代表



「女性の人的主権確立は、私たちが属する民族の主権回復及び確立と不可分の関係」にあることを指摘し、「女性の人権と民族自主を回復しようとする時代の課題」として、日本軍「慰安婦」問題に注目。李教授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植民地支配当時強行された「反人道的犯罪」であり、それに対する「責任が清算されていない点において、最も象徴問題」として捉え、日本政府の責任だけでなく、「親日勢力を清算」できていない私たち自身の責任も忘れてはならないと強調。

5

1 | 長い沈黙の氷を破る!

背景

3) <韓国教会女性連合会>を中心としたキリスト教の女性たち

1970年代から妓生観光反対、原爆被害者支援、催涙弾 反対運動、民主化運動
維新体制下で蓄積された国内外の連帯経験と運動性

全国初「慰安婦」問題を公論化

1984年 全斗煥大統領の訪日に際し、声明を発表、挺身隊問題の解決を要求し、日本の謝罪を最初に言及

“[日韓] 両国が友好関係を築くためには、早急に妥結すべき問題である女子挺身隊問題について、日本は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帝末期、韓民族に加えられた収奪政策の一つが「挺身隊」動員であった。「挺身隊」という名前で、強制的に女性を動員し、軍慰安婦に送り、性の道具として無残にも踏みにじった...このまま見過ごすことはできない。必ず謝罪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教会連 第16回定期総会報告書）。

6

1 | 長い沈黙の氷を破る!

背景

<女性と観光文化> 国際セミナー

韓国教会女性連合会 主催,

1988年 4月 21日~23日, 済州島で開催

- “挺身隊の足跡を辿り” 日本踏査チーム
(尹貞玉, 金信実, 金ヘウォン)の結果報告
 - 日本軍「慰安婦」問題提起
 - 韓国教会女性連合会傘下に挺身隊研究委員会設置
- * 挺身隊研究委員会は1990年7月10日に挺身隊研究会
(現 韓国挺身隊研究所)として独立



“挺身隊の足跡を辿り” 日本踏査チーム
(尹貞玉, 金信実, 金ヘウォン)/金ヘウォン寄贈

<女性と観光文化>国際セミナー/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7

1 | 長い沈黙の氷を破る!

背景

4) 1980年代 韓国女性運動の成長と<韓国女性団体連合>

“女性を抑圧する韓国社会の矛盾を、外勢による分断、軍事独裁政権による基本的自由の抑圧と民衆に対する抑圧的な経済政策として認識”

8. 女性と商品化する妓生観光政策を中断せよ.

韓国女性団体連合創立宣言文(1987年3月8日 出処：韓国女性
団体連合ホームページ)



8

2. 結成と成長

9

2 | 結成と成長

日本政府の妄言を糾弾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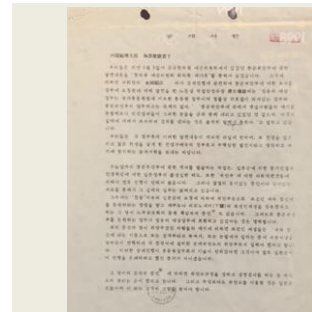
- 1) 日本の参議院予算委員会の場で、社会党の本岡昭次議員が強制連行と「従軍慰安婦」に対する日本政府の調査を要請

→ ‘国家総動員法に従軍慰安婦は関係ない’、
‘従軍慰安婦は民間業者が連れて歩いた’という趣旨を
清水傳雄（当時の労働省職業安定局長）が発言。

“日本政府は日本軍「慰安婦」問題に介入したことがない”

- 1990年6月6日 日本国会参議院 予算委員会議事録

- 2) 挺身隊研究委員会を中心に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送った抗議文書（公開書簡）作成
- 3) 韓国教会女性連合会など、37の女性団体が連帯し、日本政府の妄言に対する公開書簡を発表する記者会見を開く（1990年10月17日）



海部俊樹総理に送った公開書簡/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日本大使館に公開書簡を届ける, 1990.10.17/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10

2 | 結成と成長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事務室看板上掲式,
1992.11.16/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結成

- 1) <公開書簡>を送った後、37の女性団体が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協議体構成に合意
 - 2) 37の会員団体が構成された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が結成(1990年11月16日)
- : 日本軍「慰安婦」実態把握, 世論化, <公開書簡>で要請した6項目の履行追求, 悲劇的な歴史の再発防止

11

2 | 結成と成長

被害者 生存者の登場

- 1) 最初の証言者 金学順の記者会見
(1991年8月14日)
- 2) <挺身隊申告電話> 開設 (1991年9月18日)
- 3) 関連史料の発掘
: 歴史学者 吉見義明の日本陸軍省文書発掘、
米国報告書など
- 4) 被害者証言集の出版
- 5) 真相究明を通じた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
運動の本格化



被害生存者の登場

<挺身隊 申告電話> 開通式, 1991.9.18/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12

2 | 結成と成長

定期 水曜デモ

- 1)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定期水曜デモ
- 2) 日本の加藤紘一官房長官の妄言に対する抗議から始まる

被害者支援活動

- 1) 被害者たちの人間らしい暮らしの保障が目的
- 2) <挺身隊ハルモニ生活基金> 募金運動の展開
- 3) <日帝下 日本軍「慰安婦」に対する生活安定支援法>（1993年6月）制定



第1回定期水曜デモ, 1992.1.8/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寄付伝達式 1993.7.26/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13

2 | 結成と成長

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連携を通じた グローバル女性人権運動を主導

- アジア連帯大会
(1992年8月開始、20年間15回の会議を開催)
- UN活動（国連人権小委員会参加、1992年8月、ファン・グムジュ出席）
- ウィーン人権大会参加（1993年6月、金福童出席、北朝鮮 ジャン・スウォールと会う）
- 北京女性大会 参加（1995年 9月）
国連人権委員会の別名「クマラスワミ報告書（1996年）」と国連人権小委員会のマクドゥーガル報告書
- 国際労働機関（ILO）での活動
- 南北連帯
- '2000年 法廷'（2000年12月7日-12日、東京）



第1回アジア連帯会議, 1992.8/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ウィーン大会参加, 1993.6/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14

3. 変化と拡大

15

3 | 変化と拡大

希望と連帯、責任継承と教育の場として
拡大した水曜デモ

- ： 悲しみと哀悼を超え、希望と連帯の場へ
- ： 被害者と様々な世界の人々が出会う空間
- ： 人権と平和を叫ぶ、開かれた空間
- ✓ ‘ナビ’（韓国語で「蝶」の意）イメージ：解放、再生と新しい暮らし
- ✓ 黄色と紫の意味：希望と連帯、高貴



世界各地で行われる水曜デモ

第1,400回 定期水曜デモ 2019,8.14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16

3 | 変化と拡大

平和の少女像

2011年12月14日, 1000回 水曜デモ

被害者たちの怒り、悲しみ、苦痛、希望が複合的に絡み合っている像

「もし私だったら」、「私の娘だったら」という想像 (キム・ソギョン)



: 記念や単純な追悼ではなく、記憶と継承を強調

: 被害者性を越えて、主体性を強調

: 市民が「歴史を想像できるように」、「人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可能」な形(interactive)



17

3 | 変化と拡大

記憶と教育の基盤作り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 開館

(2012年5月 5日)

“私たちのような被害者が二度と生まれてはならない”

: 日本軍「慰安婦」問題と女性人権、平和に関連した資料を収集、管理

: 展示と研究、教育を通じた記憶と伝承の空間



博物館建設委員会 発足式, 2004.12.16/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博物館<希望の基盤固め> イベント, 2009.3.8/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18

3 | 変化と拡大

基地村女性人権連帯 (2012年)

トゥレバンやヘッサル福祉会など、基地村女性の人権団体、弁護士、研究者などとの連帯

- 2009年5月、吉元玉ハルモニが基地村安亭里を訪問

- 同様の痛みを経験した女性たちの連携、相互成長、構造的類似性と継続性を認識：植民地と戦争、女性に対する暴力の交差、帝国主義と軍事主義、地域家父長制文化の交差、ジェンダーと階層、人種差別の交差

→ 女性平和人権連帯、脱植民女性連帯



19

3 | 変化と拡大

被害者から人権運動家へ、

<ナビ基金> (2012年 3.8女性大会)

: 金福童と吉元玉

“私たちのように痛みを持つ人々を助けるために力を尽くしてほしい”

: コンゴ、ウガンダ、ベトナムなどの戦時性暴力被害女性と子どもの生存と自活支援

: 最初の受取人は、コンゴのレベッカ・マシカ・カツヴァ (Rebecca Masika Katsuva)

✓ 被害生存者が、他の被害生存者へ、サバルタンがサバルタンへ、私たち内部の他者たちへ→ 一次元さらに昇華された運動



ナビ基金設立の記者会見 2012.3.8/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ナビ基金初の受益者、レベッカ・マシカ・カツヴァ/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所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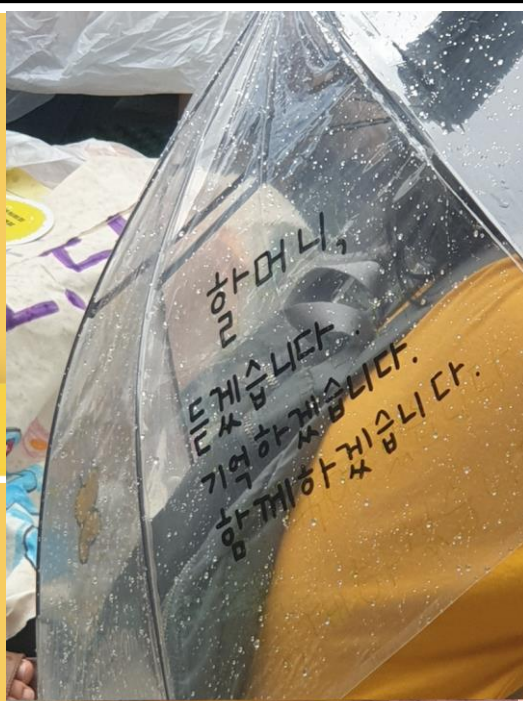
20

4.これから

21

4 | これから

2020年、
新たな30年を
準備するとき!



22

大邱慶北の被害者たちと 「共に」する解決運動

(社)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の会 前代表 安李貞善

I. 女性会から日本軍「慰安婦」問題へ

1987年6月以降、民主化運動の大きな潮流の始まりのなかで、保守的な家父長制の文化が根強く残っていた大邱にも女性運動団体が誕生することになるのだが、「主体的な女性、平等な社会」を訴え発足したのが大邱女性会だった。1995年2月、大邱女性会は挺身隊問題対策委員会(以下、挺対委)を結成し、地域に居住されている被害者の方々への福祉支援事業と、日本の国民基金への反対運動を展開した。

日本軍「慰安婦」問題への市民の関心が広まると、挺対委に対しハルモニ宅を訪問するとき一緒に行きたいという問い合わせが来たり、様々な団体の会員が挺対委のイベントに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背景から、大邱市民が幅広く参加し様々な活動を行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新しい団体の必要性が出てきたため、この間関心を持っていた人々が複数回の準備期間を経て、1997年12月29日に「挺身隊の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の会」(以下、挺身隊市民の会)が結成された。

II. 挺身隊市民の会の様々な活動

1) 生存者への福祉支援

戦争が終わっても帰国する方法が分からず、カンボジアで生活していたところを偶然

発見されたフンハルモニに対する支援のみならず、子ども時代を大邱で過ごしその後も故郷を忘れられずにいた琿春の「慰安婦」被害者・趙潤玉(チョ・ユンオク)ハルモニの祖国訪問推進運動を進めた。

ハルモニたちは毎年の年初めに、1995年8月以来「慰安婦」被害生存者たちの医療支援を行っている郭病院(KWAK'S HOSPITAL)で総合健康診断を受けており、必要に応じて風邪薬を調合してもらったり、注射から手術、入院治療といった全ての医療支援を受けている。

これ以外にもハルモニたちの生活支援プログラムとしては、ハルモニと一緒に春日の外出や秋の散策、平和人権キャンプなどがあり、誕生日パーティーを一緒に祝ったりお盆や正月を一緒に過ごしたり、ひと月に一度のハルモニ宅への定期訪問は今も続いている。

2) 広報活動と解決運動

① 生存者たちの伝記を発刊

『捨てられた朝鮮の乙女たち(버려진 조선의 처녀들)』(フンハルモニ、2004年)

『文玉珠—ビルマ戦線楯師団の慰安婦だった私(버마전선 일본군‘위안부’문옥주)』(文玉珠ハルモニ、2005年)

『帰りたい故郷に自分の足で行くことができず(가고싶은 고향을 내 발로 걸어 못 가고)』(趙潤玉ハルモニ、2007年)

『心の中は誰にもわからんのよ(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카이)』(キム・スンアクハルモニ、2008年)

『どうして話せましょう、母の心を痛めることを(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무이 가슴에 못 박을라꼬)』(キム・オクソンハルモニ、2009年)

② 押し花画報の発刊

『おばあちゃん、恋に落ちる(할매 사랑에 빠지다)』1, 2

③ 他にも、日本軍「慰安婦」問題だけでなく、日韓過去史清算活

動全般にわたり様々な活動を展開してきた。.

- * 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等に関する特別法制定のための推進委員会
- * 活動一署名活動、国会議員との面談、制定推進のための国土巡礼、8・15記念集会など
- * 元日本軍兵士クボタ氏を招き、証言・講演会
- * 日韓協定文書公開訴訟勝訴判決
- *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を推進する大邱市議会決議案採択(2009年7月)
- * 憲法裁判所に憲法訴願審判請求書提出、記者会見(2011年勝訴判決)
- * 平和と人権のための大邱市民徒歩大会(2010年から2016年まで、計7回実施)
- * 日本軍「慰安婦」問題解冤 鎮魂の儀式
- * 日本軍「慰安婦」問題 市民講座
- * 記録映画製作所・ボインのドキュメンタリー『息づかい』の上映会
- * ハルモニと共にする智異山文化紀行
- * 世界日本軍「慰安婦」被害者メモリアルデー共同行動イベント
- * フィウム大学生サポーターズ募集、活動
- * 大邱慶北 日本軍「慰安婦」被害者 追悼の日行事 (6月6日)ーハルモニたちのお墓参り
- * 日韓 日本軍「慰安婦」合意無効 大邱行動結成及び署名運動
- * フィウム夏のコンサート
- * 吉見義明教授を招き、公開講座
- * 日本軍「慰安婦」関連記録物の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共同登録のための韓国委員会及び国際連帯委員会会議とイベントに出席

3) 国内外への連帯活動

地域の女性人権団体と国内外の日本軍「慰安婦」関連団体たちとの交流と連帯も活発に行ってきた。

- *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アジア連帯会議に出席
- * 関釜裁判を支える福山連絡会と連帯―広島高等裁判所・関釜裁判控訴審傍聴及び報告大会に参加
- * 日本歴史教科書不採択・再検定のための大邱運動本部発足及び活動、広島へ抗議訪問
- * 広島教職員組合と全教組大邱支部の招聘、安市「望郷の丘」内にある高暮ダム徴用被害者慰霊祭及び「謝罪碑」建立式に出席
- * 日本軍性奴隷戦犯国際女性法廷に参加(17名)
- * 日本軍性奴隷問題解決のための日韓共同セミナー
- * イラク派兵反対ロウソク集会共同進行
- * 日本扶桑社版 歴史歪曲教科書検定通過の糾弾及び採択阻止のための大邱市民団体活動
- * 日本の過去清算を求める国際連帯協議会 平壤大会、フィリピン大会に出席
- * 東北アジア平和のための「2004 日韓平和共同行動」実施
- * 日韓同時多発証言集会 広島講演会
- * 日韓青年平和人権キャンプ、広島
- * 東ティモール被害者と市民団体に対する支援及び訪問
- * 第1回 日本軍「慰安婦」博物館会議に出席

III. フィウム日本軍「慰安婦」歴史館の建設

1) 建設基金準備のための様々な活動

- ①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の参与
- ② 絵本『花のおばあさん』クォン・ユンドク作家の印税寄付

- ③ 一般寄附金及び展示会、講演収益金
- ④ 建設基金準備のための各種キャンペーン
- ⑤ ブランド フィウム商品の販売収益金

2) 建設過程

2010年1月に逝去されたキム・スンアクハルモニから遺産の半分にあたる約5400万ウォン(約550万円)を歴史館の建設基金として寄附していただき、建設資金準備ための呼び水となった。「私が死んでも忘れないでくれ」と、歴史館建設に快く協力して下さったハルモニの思いに続き、他の被害者の方やご家族からも協力して頂いた。

敷地購入のため融資を受けようと調べてみると、団体の代表名義では受けることができず、法人名であれば受けれるとして法人登録を行ったのだが、時を同じくして稼働し始めていたブランドフィウムの収益に支えられ、2013年7月、第一次歴史館の敷地購入をすることになった。

2013年12月、韓国の国会女性家族委員会で歴史館建設の予算支援が決定し、第二次敷地購入が完了した。日帝強占期(日本の植民地期)に建てられた日本式の二階建て木造家屋が残っており、214.45㎡(65坪)の敷地を確保することになった。

2014年4月、日本軍「慰安婦」歴史館建設実行委員会が発足し、その傘下に諮問委員団、建築チーム、コンテンツチーム、アーカイブチームが構成され、具体的な準備と議論の段階に入った。同年8月、歴史館の建物の土地ならしイベントとして「嬉しいです 歴史館(반갑다 역사관)」を行い、12月5日に「フィウム日本軍「慰安婦」歴史館」が開館した。



IV. 希望を集め、花を咲かす-フィウム(희움/Heeum)

高麗大学経営学部 of 学生によるブルーミングプロジェクトチームと出会い、フィウム(희움/Heeum)というブランドを共同制作することになった。フィウムは「希望を集め、花を咲かす」〔韓国語では、희망을 모아 꽃피움(フィマンウル モア コッピウム)―翻訳者〕の最初と最後の文字から付けた名前、その意味を英語に訳して「Blooming their hopes with you」というフレーズを作った。最初の作品は、ハルモニたちの押し花作品が入っていない、ただのシリコン製の腕輪だった。英語のフレーズととも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の名誉と人権を』というハンゲルのフレーズも入った。そして、ハルモニたちの押し花作品がプリントされたエコバックやハンカチ、ポーチ、Tシャツなどの日常品が相次いで発売された。

フィウムの多くの商品は、故キム・スンアク、故シム・ダリョン、二人の押し花作品をモチーフにデザインされ、暗くて重いテーマである日本軍「慰安婦」問題を日常で身近に触れることのできるよう生活で使用する日用品を中心に作っている。

それから数年経った現在、ブランドフィウムは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 이슈を効果的拡散の寄与のみならず、挺身隊市民の会の活動を支援し、さらには歴史館建設のための土地購入や再建するために多大なる貢献をし、『フィウム日本軍「慰安婦」歴史館』にその名が長く記憶されている。2015年12月に開館時から数えてみると、フィウム製品を購入した国内外のフィウマーは15万人に上っている。

V. フィウム日本軍「慰安婦」歴史館の企画展示

この間、2階の企画展示室で行われた展示内容は、次のとおりである。

- * 私たちが記憶するあなた#1.玉珠さん(2016年11月26日~11月30日)
- * アジアの日本軍性奴隷生存者たち、東ティモール(2017年8月10日~11月4日)
- * 懐かしむ心(2018年5月23日~8月11日)
- * 彼女たちの勇気、私たちの#WITH_YOU : (2018年8月14日~11月30日)
- * 私たちが記憶するあなた#2 キム・スンアク(2019年8月14日~)

そして2018年に、押し花体験プログラム「花迎え」を定期(54人参加)と、非定期(165人参加)に分けて行った。また、2019年2月には大邱広域市歴史記録記念事業の地方補助金支援を受け、演劇「ハルメの部屋」を地元の劇団とともに制作し公演を行った。そしてキム・スンアクハルモニのドキュメンタリー『しなやかに』を制作し、「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の8月14日に試写会を行った。パク・ムンチル監督が制作したこの映画は、今年(2020年)全州国際映画祭でドキュメンタリー賞を受賞している。

昌原地域の日本軍「慰安婦」

運動のふり返し

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ともにする馬昌鎮市民の会 代表

李キョンヒ

I. 昌原地域の日本軍「慰安婦」運動の昨日と今日

1. 馬山・昌原・鎮海地域の日本軍「慰安婦」運動団体とその活動

▶ 1998～2003：慶南挺対連(慶南挺身隊問題対策市民連帯)

- 1998年、慶南昌原地域での「フン・ハルモニ」事件を契機に、女性人権団体と市民社会団体、メディアなどを構成
- 討論会、文化公演(演劇、舞踊など)などの活発な活動を通じて、地域社会に日本軍「慰安婦」問題を知らせる役割
- 中国に残っていた被害者たちの調査と帰国支援、国籍回復支援などの活動(李オクソン、コ・ジトリハルモニなど)
- 被害者たちの証言を採録する活動

▶ 2004～2006：慶南女性団体連合の慰安婦事業チームの活動

：馬山、昌原、鎮海地域の被害者支援活動

- 6名の被害者支援：イム* ジャ、キム* ジョン、イ* スン、キム* ジュ、キム* スン、キム* ソン

- 3名の支援活動家チームを構成
- 訪問及び話し相手、近況把握、外出同行、病院出入り同行、母の日、誕生日、祝日に慰労訪問活動、葬儀支援

▶ 2007～現在：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ともにする馬昌鎮市民の会

○ 主要活動



- 被害者支援活動：訪問、情緒安定と心身健康維持のためのプログラム、及び住居環境改善のサポート、葬儀支援など多様な支援活動（入浴のお世話、外出、心理治療、生活困窮支援活動など）
- 故キム○スン、故イム○ジャ、故イ○スン、故キム○ジョン、故イ○スン、故パク○ジャ、故カン○ア、キム○ソン、キム○ジュ、キム○エ
- 広報及び地域社会に共有：講演、演劇、映画、展示会、ストリートトークショー等
- キャンペーン、署名運動など：地方議会決議案を求める署名運動、日本議会の関連法制定を促す道民ハガキ運動、「12.28日韓合意の無効化慶南行動」など
- 教育：青少年女性人権歴史フィールドワーク、「ハルモニ名誉回復青少年実践団」、作家とともに読む『花のおばあさん』の物語、慰安婦問題青少年のゴールデンベル、青少年慰安婦テーマ、青少年美術作品公募展、青少年慰安婦テーマ公演コンテスト、ハルモニと共にする大学生キャンプ
- 記録及び証言活動：被害者と共に日本訪問・証言、被害者の証言の撮影など
- 記念事業：被害者追悼式、被害者追悼モニュメント建立(人権自主平和の誓いの

碑)及び誓いの碑を守る市民の会活動

II. 馬昌鎮市民の会の活動の限界と特性

1. 近距離からの日常的な被害者支援と地域支援の活用

地域内で身近なところからの支援を行うことにより、日常生活内での問題や困っていること、心身の健康上の問題、介護人材や家族の葛藤の仲裁など、被害生存者たちが日常生活で必要としていることに対する実質的な支援と、地域社会の資源の活用

：保健所、住民自治センター、地域福祉館、市民団体、学校など

2. 慰安婦問題の話題を地域社会に共有、そして共同主体化

- 被害者支援活動など多様な事業を地域の関連機関団体や市民社会団体と共に行うことで、日本軍「慰安婦」運動と広報の対象ではない、共同の主体としての協力関係を形成
- 地域と共にする活動事例
 - ・日本軍慰安婦被害者追悼式(毎年)：地域の約30の市民社会団体が共同協力する形式
 - ・日本軍慰安婦追悼モニュメントの建立(2013~2015)：約70団体が共同参加、共同推進
 - ・地域作家と共に行く女性人権フィールドワーク及び創作展示会(2014年)：民族美術人協会慶南支部、慶南道立美術館
 - ・青少年美術作品コンテスト (共同受賞)(2014)：地域メディア、民弁、昌原大学校など
 - ・「人権自主平和の誓いの碑」を守る市民の会 (2015~)：地域の様々な市民社会団体のメンバー約20名で構成
 - ・青少年事業(2013~現在)：各学校の教師との共同協力方式
 - ・海外被害者支援 (2016、イ・スダン)：地域市民共同募金で中国在住の被害者支

援(訪問支援とおむつを送る)

3. Glocalization : 地域から世界へ

- 日本軍「慰安婦」問題は韓国だけの歴史ではなく、アジアと国際社会が共に解決していくべき共同の歴史問題であり課題である
- 戦時性暴力(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苦痛と願い)テーマにしたパフォーマンスアート、パリ公演(2018)
- 青少年国際大会(2017~2020)
- 青年国際フォーラム(2018~2020)

III. 悩みと課題

1. 資料と情報の共有不在

- この間、地域で10名の被害者ハルモニに対し身近な支援を行ってきたが、被害者の方々の初期資料が共有されていない

2. 当事者組織の不在と被害者の家族の協力の難しさ

- 被害当事者たちの組織不在により意思代表性が不可能
- 被害者たちの高齢化によりアクション不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不可能、家族の接近を拒否
- 被害者たちの心身健康と安定の重要条件となる周りの家族、遺族たちの苦情や葛藤、認識のための活動の困難と不十分さ

3. 2020年5月以降の状況をどのように克服していくのか?

- 国内外の歴史否定勢力からの攻勢に対する、国内の団体間での共同対応戦略が必要
- 状況と資料の共有

4. 「被害者中心主義」をどのように解釈し、適用するべきか?

- 典型化された被害者像、すなわち苦痛と痛みの中でも堂々とした女性人権活動

家として活動する、一般的に最も広く知られている被害者像とは全く異なる
様々な被害者たちを疎外・排除しない運動の姿勢と方法とは何であろうか？

5. 持続可能な運動

- この世を去る第1世代、高齢化している第2世代、量的に不足している第3世代
- 今後リーダーシップの発掘と生産の問題

6. 運動団体に対する関心不在と研究の貧困

- 慰安婦運動団体の運営と組織、政策などに対する社会的関心の不在と研究の貧困
- 自らを研究するしか

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共にする統営巨済市民の会 解決運動と課題

宋道子(ソン・ドジャ)



1

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共にする統営巨済市民の会

●歩んできた道

- 2002.08.15. 創立
- 2002~2018 **被害生存者** 福祉、心理治療及び情緒的安定 支援事業の実施
- 2003~2017 日本軍「慰安婦」正義実現 平和人権文化財 毎年開催
- 2009~2010 慶尚南道 地方議会日本軍「慰安婦」決議案 採択運動
- 2010~2016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 凡市民嘆願ハガキ発送運動
- 2011,2015 1000回 水曜デモを迎え 1000 凡市民正義の人間の鎖イベント
- 2013~2013 **全国初 被害生存者の伝記 小中学校 歴史教育教材 共同制作**
- 2013.4.6. 公共の歴史 日本軍「慰安婦」名誉 人権のための「正義の碑」建立
- 2015~2016 **国内初 慶南地域 日本軍「慰安婦」被害資料全数調査事業**を実施
(統営、巨済、固城、晋州、泗川) 調査報告書を発刊

2

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共にする統営巨済市民の会

●歩んできた道

- 2015～ 日本軍「慰安婦」記録物(慰安婦の声 Voices of The Comfort Women)、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活動
- 2016～ 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 市民記憶行動 毎年開催
- 2013.7 慶南地域日本軍「慰安婦」被害者資料 中国調査
(武漢、南京、上海)
- 2017～ 日本軍「慰安婦」専門家招聘 市民講座 毎年開催
- 2018～2019 日韓地域共同体 記録・記憶繋ぎ-日本巡回展示、シンポジウム
ダークツーリズム開催
- 2018～ 慶南地域 日本軍「慰安婦」歴史館 建設準備活動共同展開
- 2019～ 慶南地域 日本軍「慰安婦」歴史館 建設推進委員会発足及び
建設運動共同展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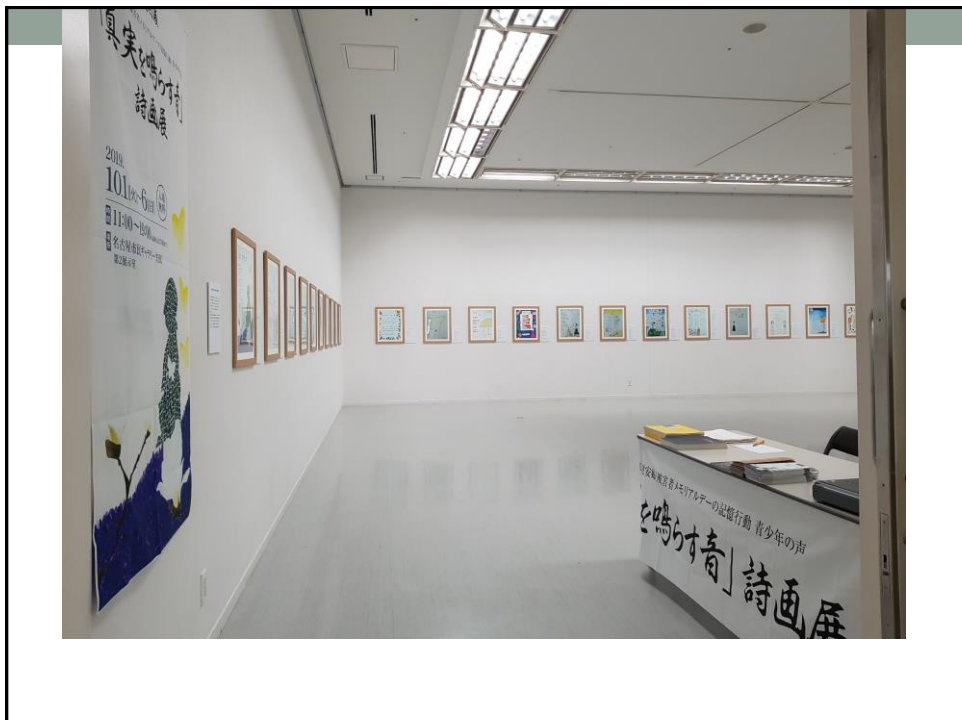
3



4



5



6

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共にする統営巨済市民の会

● 統営、慶南地域発の運動が可能だった理由

“被害者が多かった”

- 1900年代初め、統営港が開港、世界3大黄金漁場地、航路が発展
⇒ 日韓海上交通が早い段階で発展（漁船、商船）
- 日本人の集団居中民地域が早期形成 ⇒ 遊郭導入で紹介所が発達
- 1938年 戦時総動員体制へ編入 ⇒ 「慰安婦」動員 早期作動
- 集結地である釜山への移動が容易 ⇒ 日本や中国、東南アジアなど
へ動員

7

慶南地域 日本軍「慰安婦」記録・記憶運動

- メモリアル造形物（記念碑）建立運動
- 2007 河東 ‘平和の塔’
- 2013 統営 ‘正義の碑’
- 2014 巨済 ‘平和の少女像’
- 2015 南海 ‘平和の少女像’
- 2015 昌原 ‘人権自主平和 誓いの碑’
- 2016 山清 ‘春’
- 2017 金海 ‘平和の少女像’
- 2017 晋州 ‘平和の記念像’
- 2018 昌原 ‘記憶と願望’（慶南道教育庁）
- 2018 金海 ‘平和の少女像’
- 2019 咸安 ‘平和の少女像’
- 2020 山清 ‘平和の碑’

8

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共にする統営巨済市民の会

● ポスト・ハルモニ時代の課題

- 被害者の声を記録
- 地域被害の歴史調査、研究、記録
- 知られていない被害者の記録
- 被害者の声を継承、広げる
- 韓・日 歴史修正主義へ対抗、揺れている正義を堅持



終わりのない記録、記憶の政治⇒ 公的歴史を公共の歴史へ



人権、平等、平和教育のハブ **日本軍「慰安婦」歴史館建設！**

記録、記憶の政治を続けていくことで、正義、性平等、平和の価値を実現

ナヌムの家の昨日と 今日、そして明日



ナヌムの家・日本軍「慰安婦」歴史館

金デウォル

1

紹介

金デウォル

- 国民大学校韓国歴史学科博士課程修了
- 前 北岳史学会教育編輯部長
- 前 国民大学校博物館学芸員
- 現 ナヌムの家運営委員
- 現 ナヌムの家・日本軍「慰安婦」歴史館学芸室長

2

目次



ナヌムの家

1. ナヌムの家は...

2. ナヌムの家の昨日と今日

- ・ ナヌムの家の活動
- ・ 被害者の受容を通じた社会的・経済的利益創出
- ・ 被害者に対する人権侵害
- ・ 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専門性の欠如

3. ナヌムの家の明日

- ・ 偏にハルモニ達のためのナヌムの家に
- ・ ハルモニの暮らしに対する学術研究と展示
- ・ ナヌムの家を国民の懐に

3

1. ナヌムの家は...

4

1. ナヌムの家は...



ナヌムの家

- 大韓仏教曹溪宗人権委員会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の快適な生活の為という名分で1992年設立
- 1992年ソウル市麻布区西橋洞に作られ、1996年京畿道広州市退村に定着
- 1998年日本軍「慰安婦」歴史館開館

5

2. ナヌムの家の昨日と今日

6

ナヌムの家の活動



7

ナヌムの家の活動



8

ナヌムの家の活動



学術大会



9


2. ナヌムの家の昨日と今日

10




11


被害者の受容を通じた社会的・経済的利益創出



- 「快適な安らぎの場」と宣伝していたナヌムの家は、一般的な無料養老施設に過ぎない。
- 無料養老施設の基準でも全国下位**20%**。



- 国民から届いた後援金のほとんどが、社会福祉法人曹溪宗ナヌムの家法人へ
- ここ5年間に募金された約88億ウォンの後援金のうちハルモニの生活施設に使われたお金は、2億ウォンあまり
- 2億ウォンのうちハルモニに使われた直接費用は5年間でたった約800万ウォン。



- ナヌムの家の理事陣や運営者は、ハルモニを個人や宗教団体の広報手段として利用。
- 理事陣たちは理事会の場で集めた後援金を使い、ハルモニの死後、ホテル式養老施設建設を推進

12

被害者に対する人権侵害

“ 設立当初はハルモニたちの健康にも大きな問題はなく、外出や活動は自由だった。 ”

しかし、ハルモニたちの活動力が低下すると統制が始まり、外出時に他の人の補助が必要となるや統制はさらに露骨になっていった。

10名以上のハルモニが生活している時でも看護スタッフは常に一名しかおらず、適切な医療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年間100回以上の証言会と曹溪宗の行事に出席するも、個人的な外出は不可能だった。



ナヌムの家

13

被害者に対する人権侵害



国家人権委員会

“ 身上公開を拒否した被害者を無理やり露出させ広報手段として利用 ”

ハルモニの意思に反し、ハルモニの所有物を破損。

運営者たちはハルモニに「悪い癖がつく」という言葉を、職員やボランティアスタッフたちに繰り返し発言。

14

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専門性の欠如




- 今までナヌムの家で生活したハルモニたちの記録さえない。
- ハルモニの遺品や物品を放置。
- 国家指定記録物を紛失及び破損。




15

IN



国家人権委員会

人権侵害
後援金の流用



ナヌムの家

?

日本政府の謝罪と賠償を受け、この問題を**解決**すべきだと主張。

OUT

16

3. ナヌムの家の明日

17

■ 偏にハルモニ達のためのナヌムの家に...

ハルモニと家族の意見を
最大限尊重する



18

ハルモニの暮らしに対する学術研究と展示

1 問題意識

- 今まで韓国社会の「慰安婦」問題は運動に集中してきた。
- ハルモニたちは被害者として対象化される。

2 研究方向

- ナヌムの家は戦後直後の被害者の生活。
- 韓国政府の不作為。
- 韓国社会が望見するハルモニ。

3 研究目標

- 慰安婦「被害者」ではなくハルモニの生活に注目する。
- これをもとに「慰安婦」問題を考える視覚の多様化へ

19

ナヌムの家を国民の懷に

“ 誰でも気軽に訪れることのできるナヌムの家 ”

Peace Road(人権キャンプ)



ゲストハウス



地域社会との連携



20



21



22



23



24



25



26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全国行動の活動報告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共同代表 梁澄子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略称「全国行動」)は2010年2月に結成された。従って全国行動自体はまだ10年の団体だが、約30の参加団体の中には1990年代の初めから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活動してきた団体や個人が多く含まれている。

日本での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は、1980年代末、韓国教会女性連合会の呼びかけに呼応した矯風会などキリスト教女性たちの運動に始まり、1990年11月の挺対協の結成、その翌月である12月の尹貞玉先生の日本での講演を機に、女性たちの運動として広まった。さらに、1991年12月に金学順さんを原告に含む裁判が日本の裁判所に提訴されたのに次いで、フィリピン、在日、中国、台湾、オランダなど日本の裁判所で合計10件の訴訟が起こされると、各裁判を支援する団体が続々と日本で立ち上げられた。これらの裁判は結局、全て敗訴したが、裁判が終わった後も団体は存続して今も各国の被害者支援を続けている。加害国であるがゆえに、それぞれの被害国に対して被害者支援団体が結成され今日まで活動が続けてきたのが、日本の運動の一つの特色と言えるだろう。これらの裁判支援団体も、もちろん全国行動に参加している。

1990年代の運動の一つの軸が各国被害者の裁判を支援する運動であったとしたら、1990年代末のもう一つの軸は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開催だった。この法廷を提案したVAWW-NET ジャパンの後継団体であるVAWW RACも全国行動に参加している。裁判支援運動が裁判所のある東京を中心に、戦後補償運動の一環として取り組まれた側面があるのに対し、女性国際戦犯法廷運動はより広範囲な女性たちの参加を得て、日本

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の裾野を広げることができたと言える。

そして2000年代の末になると、住民運動としての意見書採択運動が日本全国に広がった。2007年の米下院決議採択に始まり、オランダ、カナダ、EU議会へと挺対協が広げて行った決議案採択運動に触発されて、日本でも宝塚市で2008年3月に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を求める意見書が採択されたのに端を発し、2013年までに43の自治体で意見書を採択するに至ったのである。

全国行動の結成には、このように全国で意見書採択運動をした団体と、90年代から各国の被害者支援、裁判支援をした団体、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を主催した団体等、幅広い市民団体が結集した。その契機は、2009年の民主党政権の樹立だった。2000年以来、「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以下、解決促進法案)」を国会に提出し続けてきた民主党が政権の座についたことを、日本軍「慰安婦」問題の立法解決のチャンスと捉え、全国で様々な活動をしてきた団体が一堂に会して結成されたのが全国行動だった。発足を協議し決定する会議には、挺対協の尹美香代表(当時)と梁路子幹事(当時)も参加し、その後も会議のたびに可能な限り韓国から駆けつけて韓国の状況などを伝えてくれた。つまり、全国行動は結成時から挺対協と連絡を取り合い、連携して日本軍「慰安婦」問題の立法解決(法的解決)を模索したのである。

全国行動は、参加団体が全国にあることを強みに、各地で地元議員への説明・働きかけをおこなうと共に、国会議員会館で院内集会を開き、各地で市民集会を開催して立法解決を訴えた。とりわけ2010年11月には挺対協が集めた国際市民署名61万832筆、韓国国会議員署名177筆を日本政府に提出する行動を挺対協と共におこなった。この時の院内集会には約400人の市民が集まった。

2011年を迎えて8月に韓国憲法裁判所の決定が出されると、日本の中でも解決への気運が高まった。

そのような中で2011年12月14日、水曜デモが1000回を迎えることになった。全国行動は、挺対協の水曜デモに連帯して、日本でも「韓国水曜デモ1000回アクション」を起こそうと、全国に呼びかけた。この呼びかけに応じて、北海道では厳寒の中、150人が集まって1時間のデモ行進をおこない、大阪では500人がキャンドルナイトコンサート

に集まってキャンドルで1000の文字を灯した。また、東京では1300人が集まって、右翼団体の反対デモに囲まれながらも、外務省を人間の鎖で包囲した。ここには宋神道さんも参加、また国会議員らもこの場で解決を訴えるアピールをおこなった。その他にも、名古屋、富山、川崎、京都、広島、浜松、岡山、福岡、福山、山口、北九州、沖縄など全国15地域で様々な取り組みがおこなわれた。

全国行動は民主党内に設置された戦後補償議連への働きかけを強め、学習会や説明会を開いて国会議員たちの理解を促す活動を精力的におこなった。しかし、政権についた民主党は「政権与党は実現可能な法案しか提案できない」として、野党時代に何度も国会に上程した「解決促進法案」を国会に提出しようとしなかった。私たちは、日本で立法による解決を追求することは現実的に難しいと判断、他の方法で法的解決をはかるべく挺対協と共に検討を開始した。これが、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日韓TFチームである。TFチームでは日本と韓国の法律家たちが集まり、2012年～13年にかけて日本と韓国を交互に訪問して会議を開き、法的解決とは何か、被害者が望む解決とは何か、その中身を具体的に検討した。

この間に、2012年12月、民主党政権に終止符が打たれ、安倍政権の時代を迎えることになった。政権への働きかけは難しくなったが、日本政府にとって日本軍「慰安婦」問題が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懸案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2014年6月、第12回アジア連帯会議が東京で開催され、この場で日韓TFチームが練り上げてきた解決案を8ヵ国の被害者と支援者たちに語り、集中的な議論を経て「日本政府への提言」をまとめあげた。全国行動は、この提言に沿った解決を政府に促すため、外務省交渉等を重ねたが、2015年12月に発表された日韓政府間合意は、この提言の趣旨とは全く異なる内容だった。

2016年～2017年、全国行動は「日韓合意は解決ではない」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の下、真の解決とは何かを市民に訴える運動を展開した。日韓合意後、ますます悪化した日本の世論を変えるために、とりわけ次世代に日韓合意の不当性と、日本軍「慰安婦」問題の歴史的事実および運動の歴史と成果を知らせる活動に力を入れている。北海道、東京、大阪、神戸、広島では韓国の水曜デモに連帯する水曜デモが続けられてい

る。

今後、日本で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正しく認識させ、その責任を取るべき主体は誰なのか、何を記憶し継承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を知らせる運動が続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教科書に「慰安婦」問題を記述して学校教育の中で学べ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が、現在は中学教科書では1社しか記述されていない状況であり、歴史修正主義の教科書も販売されているのが現状だ。また、メディアも嫌韓をおおるような歪曲報道をするものが多く、メディア報道を通して真実を知らせることも非常に難しい状況に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ゆえに、私たちは街頭で一人一人に語りかける運動、若者たちに一人一人語りかけていく運動を展開せざるを得なくなっているが、そこから生まれる希望も感じている。

韓国で尹美香議員と正義連に対する攻撃が激しくなされる中、日本でもこれと関連した歪曲報道がなされている。全国行動はこれらが事実無根のバッシングであること、被害者に寄り添って自らを犠牲にする献身的な闘いをしてきた活動家たちを正当に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訴えている。日本政府が未だ事実を否認し被害者たちに2次、3次の加害を加えているがために被害者が苛立ちを抱えているのであり、その責任は全的に日本にあるのだ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と市民は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挺対協／正義連の30年は、誰も聞こうとしなかった被害者の声に耳を傾けようとした先駆的な運動であり、これによって声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被害者たちの被害回復のために全てをなげうった献身的な運動であり、女性の人権と平和を訴えて、私たちが目指すべき社会のあり方を示した運動であった。誰もこの運動を貶めることはできない。

Comfort Women Redress Movement in the US: 28 Years of Activism of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WCCW: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November 14, 2020

Jung-Sil “Julie” Lee, Ph.D.
Chairman of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Art History Adjunct Professor at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wccwcontact@gmail.com / jlee38@mica.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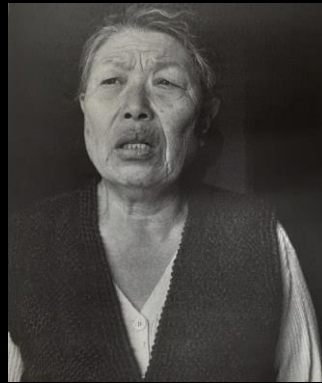


1

Diverse Dimensions and Directions of WCCW Activities in the U.S.

1. Human Rights and Women's Rights:
Grassroots movement: Legislation
(풀뿌리 운동과 법안 통과)
2. Educational Initiative and Publication (교육/출판)
3. Exhibitions of Archival & Artistic Works (전시)
4. Comfort Women Memorials (위안부 기림비)
5. Archiving & Research Project (아카이빙 프로젝트)

2



Hwang Keum-Joo (황금주 할머니 미국 방문):

She was drafted against her will when she was 13, in 1939, and suffered as a “comfort woman” in Manchuria and other regions. She testified a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1992 (와싱턴 한인 교회) that prompted the Foundation of WCCW

3

WCCW Mission Statement (revised Aug. 8, 2020)

미 연방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재단 501 (c) (3)

The WCCW is an independent, non-profit advocacy group dedicated to the pursuit of justice for the so-called “Comfort Women” of WWII. These wartime victims -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WWII - still await **official acknowledgement, apology, and reparation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CCW promotes education around the significance of women's rights through the legacies of “comfort women” survivors, and **seeks to eradicate and prevent any types of sexual crimes** globally by promoting public awareness of the egregious distortions in school textbooks about the “Comfort Women” and research of sexual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WCCW is an independent, non-partisan,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December 1992 in Washington DC, and welcomes persons of all genders, races, and nationalities.

4



1. Women's rights: Activism---legislations

Demonstration, White House
1993, 1994

Rally in front of the
Capitol Hill. April 27-28,
2015



5



WCCW has supported for **Wednesday Demonstration(수요집회)**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by occasional rally since 1992 with The same demands proclaimed by the Korean Council to Japanese government:

1. Admit **responsibility** for the drafting of sex slaves.
2. Make **an official** apology.
3. Reveal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4. Erect **memorials and a museum** for the victims.
5. Pay **reparations** to the victims or their families.
6. Record what happened in **textbooks** that teach about the war.
7. **Punish** those responsible.

6



The Hill, Sep. 27, 2006
Lane Evans & WCCW

위안부란 이름으로 나온 모든 법안

- H. Con. Res. 176 (1996)
- H. Con. Res. 126 (1997)
- Cal. Assembly Joint Res. 27 (1999)
- H. Con. Res. 357 (2000)- 에반스
- H. Con. Res. 195 (2001)
- H. Con. Res. 226 (2003)
- H. Con. Res. 68 (2005)
- H. Res. 759 (2006)
: Passed by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 H. Res. 121 (2007): 마이크 혼다
- H. Res. 952 (2016)

7



Congressional Hearing:
Eni Faleomavaega (D-AS)
House Resolution 121, Feb. 15, 2007

Ms. Koon Ja Kim, Ms. Yong-soo
Lee, Ms. Jan Ruff O'Herne

Rep. Mike Honda
With three grandmothers in the
Hearing, Feb. 2007

8

"H.Res.121 - A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sh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요약 Summary of H. Res. 121, 110th Congress, 200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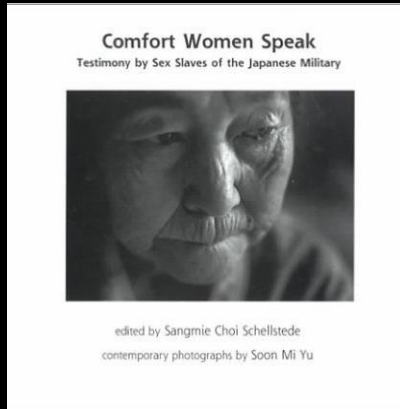
Growing Support from Legislatures Around the World

August 1999	California State Senate Resolution
<u>July 2007</u>	<u>The U.S House Resolution HR 121</u>
November 2007	Canadian Parliament Passage of Motion Netherlands Parliament Passage of Motion
December 2007	European Parliament Passage of Resolution RC-B6-0525/2007
March 2008	Philippin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Passage of Resolution 124
January 2013	New York State Senate Resolution J304
<u>March 2015</u>	<u>Maryland Senate House Resolution SJR3</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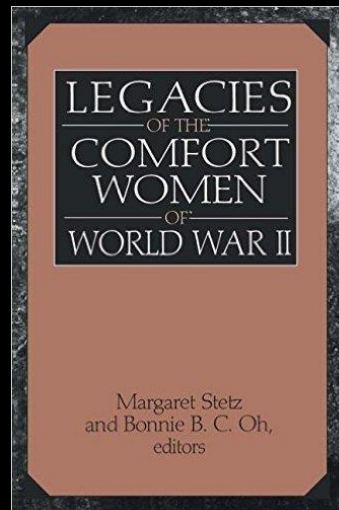
10

2. Educational Initiative and Pub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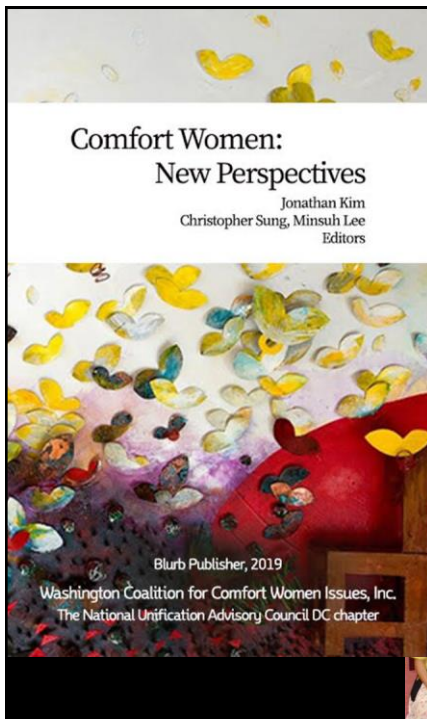
Comfort Women Speak (2000):
Testimony by Sex Slaves of the
Japanese Military : Includes New
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port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2001)*



11



WCCW Internship & Fellow



12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Human Right Department
2016

* Conference, Forum, Lecture
Along with Film Screening &
Exhibition (collaboration with
academic institutions)

*Collateral Damage:
Wartime Atrocity
and Trauma*
Symposium at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2016
Human Right Center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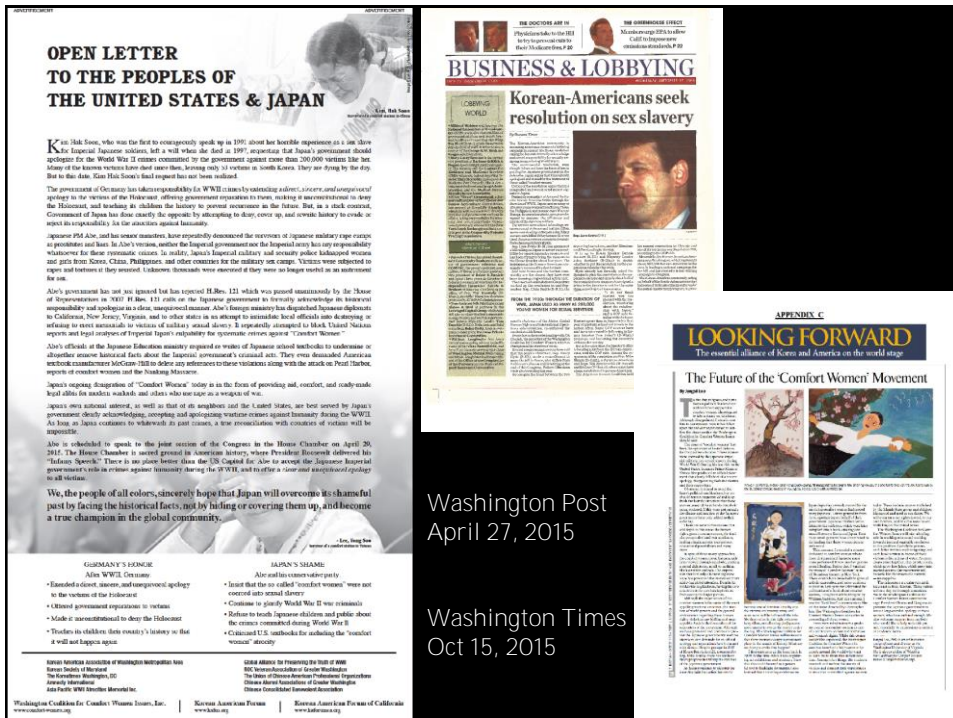


**“The Sorrow and Hope
Of Comfort Women”**
Catholic University
International Social
Development (CISD),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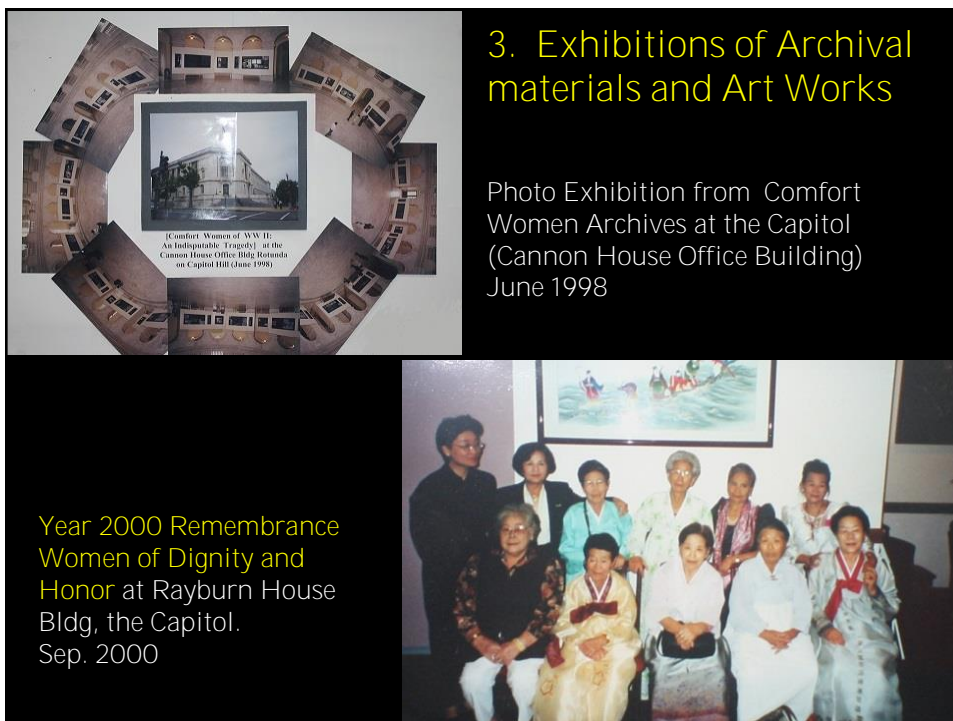
**“History Writing
For Justice and
Reconciliation
Of Comfort Women”**
George Washington Univ.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 History Dep.
2016



14



15



16

*Unveiling the Truth:
The Sorrow and Hope of "Comfort Women"*



Exhibition: November 26 – December 14, 2012

Opening Reception: November 30, Friday, 6-8 pm
(7 pm Artist Talk and Film Screening)

Mason Hall Artview Gallery, George Mason University
4400 University Drive, Fairfax, VA 22030
Gallery Hours: Monday to Friday, 9 am – 5 pm

Presented by ArtTrio &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Sponsored by WCCW, ArtTrio, Korean Studies Center, George Mason University Gallery,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 (한국학중앙연구원)

George Mason University, 2014

Collateral Damage

The Anya and Andrew Shiva Gallery
John Jay Gallery of Criminal Justic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eptember 8 - October 21, 2016



Sponsored by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Inc. (WCCW)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2016

17



Bae Chun-hee during an art therapy session, House of Sharing, September 22, 2011



Kang Duk-hyung, *Innocence Sto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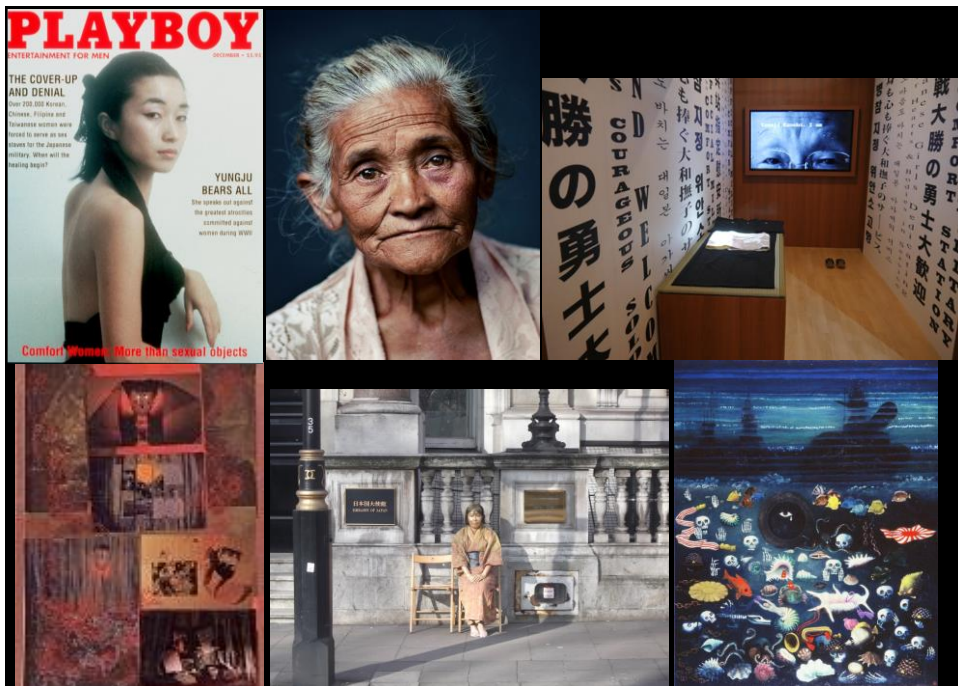
Kang II Chul, *The Burning of Virgins*, 2004

18

Art-making is not
about telling the
truth but making the
truth felt.

Christian Boltanski

19



20

The Sorrow and Hope of
COMFORT WOMEN



SEMINAR & EXHIBITION
Hosted by National Catholic School of Social Service
Center for International Social Development (CISD)
Co-organized by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WCCWI)

Dates: **November 25, 2014 (Tuesday)**, 2:00 - 4:00 pm, followed by reception
Exhibition continues to January 12, 2015

Venue: The May Gallery of Mullen Library,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ontact: Frederick Ahearn, Organizer: ahearn@cua.edu
Julie Jungsil Lee, Curator: artriblee@gmail.com



Steve Cavallo, *Lamentation*

Catholic University, 2015

21



"If the film is finished,
it will be one of few movies about comfort women"
by New York Times 27/03/15

Director **Cho Junglae**



Trampled flowers,
sought to return but could not,
are finally coming home



Spirits' Homecoming
Guihyang

First Film Screening (영화상영) of "Spirits' Homecoming Guihyang"
January 29th 7 pm 2015 at Messiah Presbyterian Church
December 16 GWU and UM "Spirit's Homecoming II"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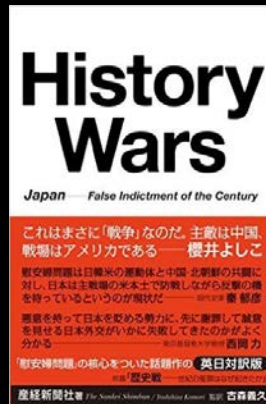
4. Comfort Women Memorials in the US



Comfort Women Monument, Palisades Park, County of Bergen, New Jersey. #1 monument in USA. October 23, 2010

24

Sankei Shimbun, “History Wars”



“This book is about a full-fledged information war now waged against Japan, with China as the chief adversary and America as the main battlefield...”
(Yoshiko Sakurai, Journalist)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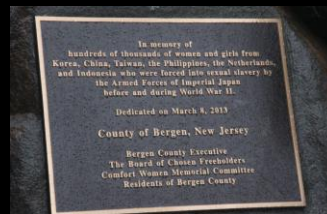
October 23, 2010 - Comfort Women Monument, Palisades Park, County of Bergen, New Jersey. **#1 monument in USA.**



June 18, 2012 - Comfort Women Monument, Veterans Memorial, Eisenhower Park, Westbury, Nassau County, New York. **#2 monument.**



January 2014 - Flanking the original monument set up in Eisenhower Park in 2012. **#5 monument in USA.**



March 8, 2013 – Comfort Women Memorial. Bergen County **#3 monument**

26



First Statue of Girl (Sonyeo Sang), Seoul, Korea, 2011,
In front of Japanese Embassy during 1000th demonstration, The Korean Council



July 30, 2013 - Statue of Girl, Glendale Central Park, Glendale, California (USA). #4 monument. Near Los Angeles, California.

27



May 30, 2014 - Comfort Women Memorial Peace Garden, Fairfax County Government Center (페어팩스 정부 청사 내 가든), Fairfax, Virginia (USA). #6 monument Near Washington, DC.

28



August 4, 2014 - Comfort Women Monument, Liberty Plaza, Union City, New Jersey (USA).
#7 monument in USA.
Near New York City.



August 16, 2014 - Comfort Women Peace Statue, Korean American Cultural Center, Southfield, Michigan (USA).
Near Detroit, Michigan. #8 monument in USA.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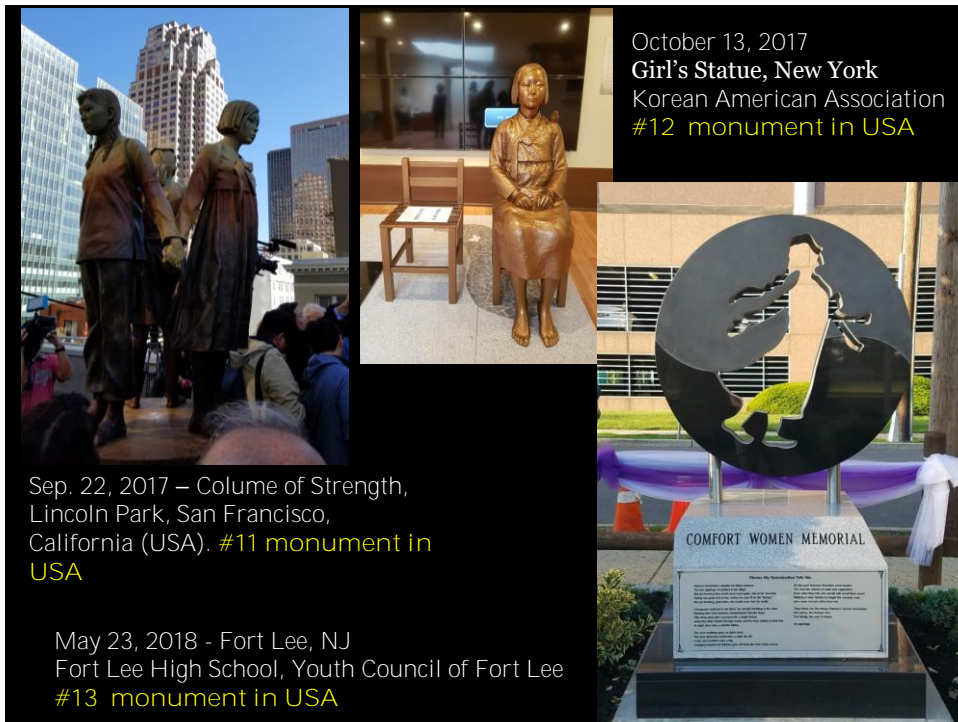


June 28, 2017 - "Young Girl's Statue for Peace," Blackburn Park II, along Blair Circle, Brookhaven, Georgia
#9 monument i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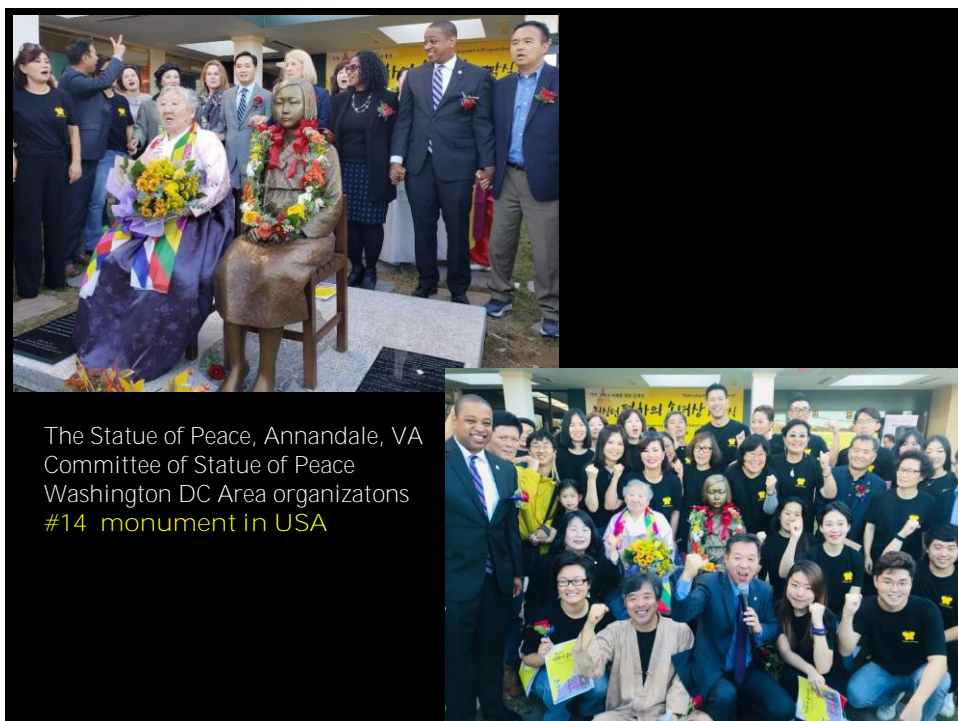


July 19, 2017- Cliffside park, NJ Bergen County
#10 monument in USA

30



31



32

5. Archiving: Research & Education Project

Was there no “forced” recruitment?

(강제 징용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ceived the repor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stated that the forceful abduction of Asian women b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during the war could not be confirmed in any documents.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reported Sunday, Jan. 31, 2016 right after the 2015 agreement.

Responding to the news account, a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spokesman stressed that the forced nature of recruitment and transfer of comfort women, many of whom were Korean, is an undeniable historical fact.” (Yoshimi Yoshiaki)

We need “the archiving project”: Untruthful “Truth” Propaganda

이와 같은 위안부 관련 거짓 사이트를 만드는데 일본 정부가 주력하므로 이에 맞서서 고증 자료로 증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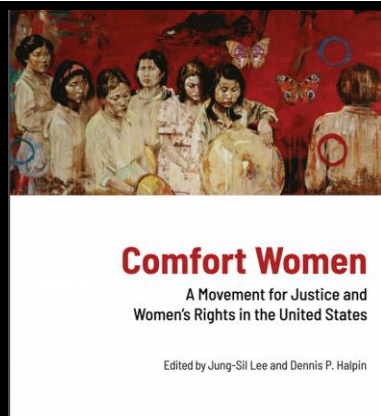
33

Ultimate Goal of the Archive Project

- ❑ In order to make historical truth apparent and visible and to ascertain diverse historical evidence both primary or secondary sources (역사적 진실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 ❑ To create a repository for documents and artifacts related to comfort women from which soft-powered material, memorial, or literary & artistic product will be created and circulated. (재생산 위한 위안부 관련 자료 수집)
- ❑ To realize the justice and give a peace and dignity to grandma, by situating them prominent place of the annals of history and prevent any types of sex crimes.

(할머니들 이야기를 역사에 각인시키고 여성인권 유린 성범죄 예방)

34



축하드립니다. 함께 가요!!
Thank you for
your support!

www.comfort-women.org



挺対協/正義連 30周年記念 シンポジウムと記念式

2020年11月14日 土曜日

被害者と共に歩んだ人々 | 豪州

報告者：朴恩徳（豪州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実践推進委員会 元代表）



被害者と共に歩んだ人々 | オーストラリア

I. 始めに |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関連 特殊性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展開過程 (シドニーを中心に)

1. 第1期 (2006 ~ 2010) 国際連帯と豪州連邦議会決議案採択アクション
2. 第2期 (2016)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建立
3. 第3期 (2017 ~ 現在)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を人権と平和の象徴へ

III. これから |

ポスト被害者時代の豪州における活動方向

I. 始めに |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関連 特殊性

- 地域的にアジアの各地域の被害者と離れていること
- 外交的側面からアメリカと友好国でありながら、日本と非常に親密な関係→州政府と政治勢力たちが日本の影響を多大に受けている
- 第二次世界大戦中、豪州の領土であったニューギニアの「慰安所」に約3,000名の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が存在した
- 豪州は主要国際人権条約署名国として、第二次世界大戦中の日本軍性奴隷問題解決のため役割を果たすことに期待



2017年11月13日、ASEAN首脳会談で同席した安倍晋三前首相、ドナルド・トランプ前米大統領、マルコム・ターンブル前オーストラリア首相の姿 (出処: JIM WATSON/AFP/Getty Images)

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関連 特殊性(cont.)



被害者 ジャン・ラフ・オハーン
(Jan Ruff O' Herne 1923-2019)

1. 被害者 ジャン・ラフ・オハーン (Jan Ruff O' Herne 1923-2019)の実存

- ・ オランダ系豪州人で日本軍性奴隷制の被害者であり女性運動家
- ・ 1944年、オランダ領東インド (Dutch East Indies, 現 インドネシア) で21歳の年に日本軍性奴隷として約3か月間苛酷な生活を強いられる
- ・ 1992年から約20年間、多くの証言活動を通じて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世界に知らせる
 - 1992年12月、日本東京戦後補償国際公聴会
 - 2000年 日本軍性奴隷女性国際戦犯法廷
 - 2007年 米下院「慰安婦」決議案採択のための聴聞会

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関連 特殊性 (cont.)

- ・ 豪州社会に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刻む
 - 2007年2月15日、米下院外交委員会アジア太平洋小委員会で開かれ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聴聞会に、李容洙・ハルモニ、金君子・ハルモニと共に証言者として参加したことで、オーストラリア社会に広く知られることになる
 - 日本軍性奴隷制問題は日本のアジア支配に対する民族的葛藤だけの問題ではなく、人類の普遍的な人権侵害問題であることを指摘
 - 豪州国営放送ABCのTVドキュメンタリー「オーストラリアン ストーリー: 忘れられた人々」(Australian Story: Forgotten Ones)の中で、2001年と2007年(米国の公聴会后、視聴者の要望で再度放送)で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の話が紹介



“私はこれからも戦い続けます。日本人たちは私たちが皆死ぬことを待っているようだけれど、私は死にません”

Australian Story インタビューから

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関連 特殊性 (cont.)

- ・ 世代をつなぐストーリーテリング
 - 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の孫・ルビー監督の映画制作支援と連帯
 - 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の孫であり映画監督のルビー・チャレンジャー(Ruby Challenger)は、2018年短編映画「Daily Bread」で祖母の話を映画化(多くの映画祭で受賞)
 - 現在、ルビー監督はインドネシア日本軍慰安所を題材にした長編映画「Handkerchief」の制作準備



祖母から聞いた話を映画化した短編映画「Daily Bread」は、第二次世界大戦中に日本が占領したインドネシアのオランダ人収容所の話を扱っている。
写真出处: Challenger Productions

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関連 特殊性 (cont.)

2.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とシドニーストリートの父、ビル・クルス牧師

- ビル・クルス牧師(Rev. Bill Crews) は、2016年、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建立推進が不発になったことを知り、平和の少女像の建立地を準備してくれた人権運動家であり、社会的脆弱階層のため生涯を捧げたシドニーの著名人
- 現地の日本社会の激しい反発にも屈することなく、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建設を推進できるよう全面的に支援
- 被害者たちの痛みを豪州では最も早く「応答」



「平和の少女像は、男性の女性に対する迫害と虐待、特に戦時性暴力の象徴である。日本軍性奴隷制問題は、人権問題であり、社会正義の問題である」

ー2016年8月1日、ビル・クルス牧師の記者会見にて

II |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第1期(2006-2010)

国際連帯と豪州連邦議会決議案採択アクション

- ・ 「慰安婦」被害者と共にする豪州の友人たち (Friends of "Comfort Women" in Australia) の結成
- ・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豪州巡回講演会開催(2006年8月)
- ・ 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豪州支部の招聘により豪州を訪問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あるチャン・チョムドルハルモニ(尹美香・前挺対協代表も同行)は豪州シドニー、メルボルン、阿德レード、ホバートで講演



2006年8月4日、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右)と会ったチャン・チョムドルハルモニ(左)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 (シドニーを中心に)

1. 第1期 (2006~2010)

国際連帯と豪州連邦議会決議案採択アクション

1.1. 豪州連邦議会「慰安婦」決議案採択追求アクション

- a. 2006年8月、「慰安婦」決議案最初の発議 (否決)
- b. 2007年2月、第2次発議 (2票差で否決)
- c. 2007年9月、第3次発議 (新党の共同発議、1票差で否決)
- d. 2008年8月、第4次発議 (否決)

- 決議案採択のための市民請願活動、国会議員と個別面談及び懇談会の開催
- 2007年から2008年まで、豪州連邦議会に四度にわたる決議案の上程にも関わらず全て否決される



ジョン・ハワード (John Howard) 前 豪州総理の所信発言

- ・ ジョン・ハワード総理の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所信発言

- ・ 2007年3月12日、豪州 - 日本の安全保障協力に関する共同宣言署名のために、日本を訪問したジョン・ハワード首相はオーストラリア国籍の「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が代表的な承認」とであると、日本軍「慰安婦」強制動員がなかったという日本側の主張に対して「その場しのぎの言い訳はしてはならない」と発言し、強制動員に対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たと、豪州日刊新聞「The Age」が報道



THE *Age*

Howard firm on Japan sex slave war history

John Howard, and Penelope
side
- 11:00am

Share A A A

Y'S TOP STORIES

J. CREW
ederal government rejected
requests for PPE from
has been the only one to do so



PRIME Minister John Howard has set himself on a collision course with his Japanese counterpart, Shinzo Abe, by declaring there should be no "quibbling" over the degree of coercion used to force thousands of women to act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On the eve of their talks in Tokyo today, Mr Howard has made it clear he will not tolerate an attempt by Japan to rewrite history. He is expected to raise the issue with Mr Abe this afternoon.

Mr Abe enraged surviving so-called "comfort women" two weeks ago when — after the US Congress called on Japan to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sex slave practice — he suggested there wa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or army had coerced women to work in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 (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1. 第1期 (2006~2010)

国際連帯と豪州連邦議会決議案採択アクション

1.2. 広域/自治体議会で議論される日本軍「慰安婦」問題

- a. ニューサウスウェールズ (NSW) 州政府
 - 2010年ニューサウスウェールズ州議会でバージニア・ジョージ(ストラスフィールド地域区)議員、2016年、ジョディ・マッケイ(現 野党党首)が議会個別立法案 (Private Member's Statement Session)を通じ「慰安婦」問題に関連した日本政府の公式謝罪を強く追求
- b. 2009年3月、ストラスフィールド市議会、ライド市議会で「慰安婦」決議案採択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 (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1. 第1期 (2006~2010)

国際連帯と豪州連邦議会決議案採択アクション

1.3. 米国議会「慰安婦」決議案採択のための国際連帯活動 (2006年~2007年)

- 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の米議会聴聞会証言 (2007年2月)
- 豪州人であり、唯一の白人ヨーロッパ系の女性として、日本軍性奴隷制被害の事実を勇気をもって証言し、日本軍性奴隷制の歴史的真相と女性の人権侵害問題がアジアの女性だけの問題ではなく、全ての人々が解決すべき課題であり、普遍的な人権侵害の問題であると、問題認識の拡大に大きく貢献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1. 第1期 (2006~2010)

国際連帯と豪州連邦議会決議案採択アクション

1.4. シドニー日本総領事館前 初の水曜デモ(2007年3月7日)

- 2007年 世界女性の日のデモ行進に参加
- シドニーで初めて開かれた「第751回水曜デモ」で、
韓国の吉元玉氏、台湾の呉秀妹氏、豪州の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が安倍晋三首相に送る抗議声明をシドニー駐在日本副総領事のマナベヒロシに提出



豪州での初めての水曜デモに参加する韓国の吉元玉氏、豪州の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台湾の呉秀妹氏
2007年3月7日、シドニーの日本総領事館前にて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1. 第1期 (2006~2010)

国際連帯と豪州連邦議会決議案採択アクション

1.5. 2010年国際連帯会議 'Beyond 2010 for the "Comfort Women"'

Issue -Dialogue on Justice, Compensation & Education' 開催

- 日本軍「慰安婦」問題を研究する豪州内の良心的学者たちとの交流
- 豪州国立大(ANU)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教授
- 豪州、台湾、日本、ニュージーランド、インドネシアなどで活動してきた日本軍「慰安婦」研究者と活動家、豪州市民たちが出席し各国の最新の活動内容と研究成果を共有し、今度の活動計画である'2010 Action Plan'に参加者と決議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1. 第1期 (2006~2010)

国際連帯と豪州連邦議会決議案採択アクション

1.6. 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伝える文化活動

- 戦争と女性の人権写真展開催 (2010)
: 韓国、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日本、台湾などの日本軍「慰安婦」問題と世界の戦時性暴力被害を伝える写真展
- 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献呈展示会開催 (2010)
: 豪州、韓国、日本、インドネシアの作家約20名が出席



II.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2. 第2期 (2016)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建立

2.1.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建立推進委員会(シ少推) 結成

- 2015年 日韓合意全面撤回要求
- シドニー日本総領事館前で水曜デモ開催(2016年1月6日)
- 漫画展、写真展 野外展示会開催(2016年7月)



漫画展「負けない花」(2016年7月)

II.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2. 第2期 (2016)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建立

2.2.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建立推進委員会(シ少推) 結成

-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建立 (2016年8月6日)
: 海外地域で四番目、豪州では初の平和の少女像建立
(シドニーアッシュフィールド)

挺対協、城南市庁の支援、シドニー韓人同胞たち、
現地人たちの注目と援助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3. 第3期 (2017- 現在)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を人権と平和の象徴へ

3.1.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を守る会の活動

- 週に数回（同胞社会、現地人たち、海外訪問客など）訪問客が少女像を訪れる
- シ少推の会員たちが自発的に少女像維持と管理、活動に必要な募金活動を展開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3. 第3期 (2017- 現在)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を人権と平和の象徴へ

3.2.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を広める

- 地域社会に平和の少女像と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知らせるための様々な文化活動を展開
- 毎年8月6日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建立日、8月14日 世界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週間文化活動展開
- バザーや平和コンサート(2017年8月、少女像建立一周年記念)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 日本軍「慰安婦」野外写真展 (2018年)
- 映画上映会「アポロジー」 (2017年・2019年)、
「I Can Speak」 (2017年), 短編映画「Daily Bread」 (2019年)、
「金福童」 (2019年)



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の孫・ルビー監督の短編映画「Daily Bread」の上映会の様子 (2019年8月12日)

II. 豪州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

市民活動の展開過程(シドニーを中心に) Cont.

3. 第3期 (2017- 現在)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を人権と平和の象徴へ

3.3. 女性人権と平和国際連帯活動

- 2016年から毎年世界女性の日、シドニーで行われるデモ行進に参加
- 豪州の女性、人権、平和団体と朝鮮半島戦争反対と非核化北朝鮮とアメリカの平和協定締結、国連核兵器禁止条約批准などを求める活動を展開
- 朝鮮半島平和集会主催 (2017年10月・12月)
- 板門店宣言1周年記念「平和の手つなぎ」運動に参加 (2019年4月27日)



「平和の手つなぎ」運動に参加(2019年4月27日)



朝鮮半島の平和を求めるシドニー集会(2017年12月8日、シドニー米国総領事館前広場)

III.これから | ポスト被害者時代の 豪州における活動方向

1. 豪州で活動する日本軍「慰安婦」問題に良心的な学者たち、 人権と平和活動家たちのネットワーク強化

- 一般向け講演及びワークショップ、学術シンポジウム開催
- 研究資料及び記事収集、社会に向けた広報の必要
: Caroline Norma, RMIT University教授は、2015年
日韓合意が発表された後、シドニーモニルヘラルド紙に日韓合
意の矛盾点と問題点を指摘、「Australia must face up to its role
in the lack of justice for "Comfort women"」に寄稿



- 過去、オーストラリアの管轄地域で起きた日本軍「慰安婦」問題の 再評価

: 第二次世界大戦中、豪州の領土だったニューギニアでは約20の
「慰安所」で、約3,000名の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が存在した。
豪州社会がより積極的に日本軍性奴隷制問題に関心をもち、行動し
ていく正当性を強調。

- 豪州議会を通じた持続的なロビー活動の模索

: 過去四回否決された豪州議会「慰安婦」決議案採択活動を再検討。
豪州の人権・平和団体、研究者、メディアの連帯が必要。

III.これから | ポスト被害者時代の 豪州における活動方向

2. 豪州内の同胞運動のエネルギー強化—次世代韓人 活動家の育成、国際連帯活性化

- 豪州女性、人権、平和関連NGOとの交流拡大
- 豪州の研究者、活動家たちと共にする Australia
Activists Zoom Meeting を計画(12月初旬)
- シドニー平和の少女像広報、次世代の教育活動実施
- 韓国訪問の推進を通じて、日本軍「慰安婦」問題を研
究する韓国/オーストラリア研究者、活動家、政治家との
ネットワークを強化



III.これから | ポスト被害者時代の 豪州における活動方向

3. 豪州の被害者であり女性人権活動家、 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を伝えていく

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一周忌オンライン追悼式開催 (2020年8月15日)

- ・メルボルン慰安婦少女像建立委員会 (メ少委) 共同主催
- ・ジャン氏の家族と、7カ国の日本軍性奴隷制問題活動家、関連研究者、政治家、宗教者、芸術家、市民、約100名がオンライン会議ツールZoomとYouTubeで追悼式に参加
- ・ヴィッキー・チャップマン(Vickie Chapman) 南豪州副総理兼法務部長官、労働党予備内閣女性部長官トリッシュ・ドイル(Trish Doyle)、緑の党のジェニー・レオン(Jenny Leong) など政界人からの大きな関心と参加があった。
- ・毎年、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追悼式推進予定



III.これから | ポスト被害者時代の 豪州における活動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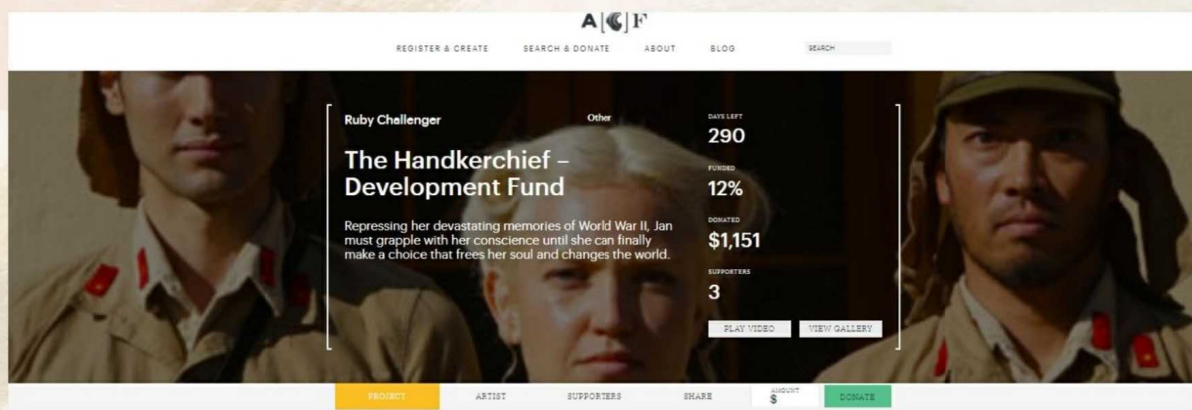
ジャン・ラフ・オーハン記念日制定推進 (2020年8月~現在)

- 2020年8月6日、NSW州議会で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の命日である8月19日を「ジャン・ラフ・オーハン公式記念日」に制定しようという決議案を自由党、労働党、緑の党の3党が共同で決議案上程。





2020年8月6日、NSW州議会で「ジャン・ラフ・オーハン記念日」制定の決議案を共同発議した国会議員たち
写真左から、緑の党のジェニー・レオン、労働党のトリッシュ・ドイル、自由党のビクター・ドミネロ議員
©Office of Shadow Minister for Women NSW Trish Doyle MP



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の孫・ルビー監督の映画「The Handkerchief」制作支援と宣伝

- ルビー監督は現在第二次世界大戦当時、インドネシアの日本軍「慰安所」を背景にしたジャン氏の実話を扱った長編映画「The Handkerchief」の制作準備中
- 映画制作が順調に進むよう、制作費の募金と宣伝を行う予定

現在進行中のルビー監督の次回作「The Handkerchief」の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https://australianculturalfund.org.au/projects/the-handkerchief-development-fund>

III. これから | ポスト被害者時代の 豪州における活動方向

4. 豪州戦争記憶館 三姉妹の平和の少女像(Three Sisters Statue of Peace)建立推進

2007年3月7日、シドニー初の水曜デモ記念

-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ある韓国の吉元玉氏、台湾の呉秀妹氏、豪州の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が安倍晋三首相に送る抗議声明をシドニー駐在日本副総領事に提出した日
-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生活を越え、平和と人権活動家として活動してこられた3人が肩を並べ手をつなぎ堂々と正義のために行動した歴史的瞬間を記念する
- 豪州戦争記憶館第2次世界大戦の展示室にジャン・ラフ・オーハン氏のハンカチと、日本軍「慰安婦」の歴史が展示されている
- アジア太平洋地域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支援団体との連帯活動を基盤にしながら、三姉妹平和の少女像建設推進



豪州戦争記憶館(Australian War Memorial) 第2次世界大戦展示館に展示されたジャン氏のハンカチ

豪州、そして日本軍性奴隷問題

全世界の戦争難民の安らぎの場であり

定着地である豪州から..

戦争による被害がない世の中に、

戦争のない平和な世界を叫びます。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STAY CONNECTED

sysochu.com

facebook.com/sysochu

instagram.com/sysochu_au

twitter.com/sysochu_au

セッションⅡ

ポスト被害者 時代と責任

司会：梁鉉娥(ソウル大学名誉教授)

ポスト被害者時代の法的責任

慶北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 金昌禄

I. はじめに

- 2020年8月30日にまた一人の韓国人日本軍「慰安婦」被害者が亡くなることによって、韓国政府に登録されている240人の被害者のなか生存者は16人になった。生存者たちの平均年齢は90歳を遥かに越え、自由に挙動し意思表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生存者はごく少数である。非常に残念なことであるが、直接被害者に残された自然の時間は長くない。したがって、被害者の生前に最大限の解決をもたらすとともに、ポスト被害者時代のための準備も並行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そして、その準備は、過去30年の歴史の点検から出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である。
- この報告では、「法的責任」に焦点を合わせながら、過去30年の間の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努力の歴史を振り返え、それをもとにポスト被害者時代の向かうべき方向を描いてみる。ただし、30年の間の多くの場面を一つの報告にまとめることは不可能なので、報告者なりに注目する大きな流れと重要なポイントを中心にまとめて見ることにしたい。

II. 「法的責任」の提起と確立

- 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法的責任」は、1990年年10月17日に挺身隊研究委員会を中心になって、韓国女性団体連合をはじめとする37の女性団体の共同名義で発表

した、日本政府に対する公開書簡で、具体的に整理された形では初めて提起されたと
思われる。

- 1. 朝鮮人女性を従軍慰安婦として強制連行した事実を認めること。2. それにつ
いて公式的に謝罪すること。3. 蛮行の全貌を自ら明らかにすること。4. 被害者
のために慰霊碑を立てること。5. 生存者と遺族に補償すること。6. このよう
な過ち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歴史教育を通じてこの事実を教えること。

○ ただし、上記の公開書簡では「法的責任」が特別に強調されたわけではなく、「責
任者の処罰」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

○ その後も日本政府の消極的な対応が続く中で、挺対協は1993年に入って責任者処罰
を強く提起し始めた。1994年2月7日には、韓国人被害者27人が告訴状を東京地方検察
庁に提出すると同時に、挺対協も告発状を提出して、日本の検察当局に公式的に責任
者の処罰を要求した。しかし、担当検事は告訴状・告発状の受理そのものを拒否し、
日本による責任者処罰は不発に終わってしまった。

○ 挺対協によって7つの項目へと拡張された「法的責任」は、以降、国際社会で繰り返
し確認され具体化された。

- 1994年の国際法律家委員会(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のレポート
(Comfort Women—an unfinished ordeal)

- 1996年の国連人権委員会「女性に対する暴力に関する特別報告者」ラディカ・ク
マラスワミ(Radhika Coomaraswamy)のレポート(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
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 1998年の国連人権小委員会「戦時性奴隷制特別報告者」ゲイ・マクドゥーガル(G
ay J. McDougall)のレポート(An Analysis of the Legal Liability of the Go
vernment of Japan for "Comfort Women Stations" Established during t
he Second War)

- 2001年の「2000年日本軍性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の判決

- 2005年の「国際人権法及び国際人道法に関する重大な違反の被害者が救済及び賠償を受ける権利に関する基本原則とガイドライン」(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また、「法的責任」は、1995年7月19日に発足した日本の「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が「法的責任」を積極的に否定する文脈で「道義的責任」を重ね重ね打ち出したのに対応して、特に強調された。
- 上記のような過程を経て提起され確立された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法的責任」の核心内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
 - 日本軍「慰安婦」制度は、制度全般の企画、「慰安所」の設置と運営、「慰安婦」の連行、監禁、性搾取、遺棄、1945年以降の隠蔽、否認、不処罰などを含む。
 - 日本軍「慰安婦」制度は、それ全体として、人道に対する罪、奴隷制の禁止などの国際法を違反した罪である。
 - 日本軍「慰安婦」制度と関連して、具体的に犯罪行為を犯した日本人個人は、刑事処罰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は国家的次元で犯罪事実の認定、謝罪、賠償、真相究明、慰霊、歴史教育、責任者の処罰などの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III. 「法的責任」に対する反動

- 上記のような流れに対して、1997年ごろから日本の反動が本格化した。
 -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の結成
 -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の発足
 - 「日本会議」の発足
- 2007年3月16日の第1次安倍晋三内閣の閣議決定：「河野談話」発表日である1993年8月3日まで、「政府が発見した資料の中には、軍や官憲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直接示すような記述[が]見当たらなかった。」
 - 上器の内容は、以降、日本政府によって繰り返し主張されており、2020年現在に

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にも含まれている。

- ところで、上記の「いわゆる強制連行」は、2007年3月5日の参議院予算委員会で、安倍首相が「官憲が家に押し入って人さらいのごとく連れて行くという強制性」、つまりいわゆる「狭義の強制性」を前提としている概念である。
- したがって、上記の閣議決定は、「官憲が家に押し入って人さらいのごとく連れて行」ったという記述が、1993年8月3日までに日本政府が発見した資料にはないという意味である。
- しかし、日本軍「慰安婦」制度全般が犯罪なので、その一部であ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立証する記述がないという主張は、特別な意味を持つことができない。
- 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がこの主張を繰り返すのは、「河野談話」で日本政府に責任があるものと認められた「慰安所」の設置・運営と「慰安婦」の移送・募集の中、少なくとも韓国人被害者と関連しては、「募集」の場合のみ、それを証明する公文書が発見されておらず、被害者の証言だけがあるという点を掘り下げることによって、日本軍「慰安婦」問題全体の土台を崩してみようと企てることである。
- つまり、反復的な主張を通じ、「協議の強制性は証明されない」⇒「強制性がなかった」⇒「問題がない」という「印象」をまき散らすための企てなのである。
- 実に苦しみながら過去の傷を自らさらけ出した被害者の証言を侮辱する邪悪な主張に違いない。

○ 2015年12月28日の「韓日外交長官合意」：「最終的・不可逆的な解決」

- この内容も、日本政府によって繰り返し主張されており、2020年現在に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にも含まれている。
- 「法的責任」の履行は持続的なプロセス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は、「最終的・不可逆的」という修飾語と似合わない。

- しかも、そもそも「不可逆的」という表現は、被害者の要求の中に含まれていたものであり、そこで「不可逆的」であることを要求されたのは「謝罪」である。
- 「不可逆な謝罪」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のアジア連帯会議」が2014年6月2日の第12回会議で採択した「日本政府への提言」に、日本政府が明確な事実と責任を認めた後、それに基づいて取るべき措置の一つとして、「翻すことのできない明確で公式な方法で謝罪すること」という形で含まれていた。アジア連帯会議が「翻すことのできない」、つまり「不可逆的な」という表現を含ませた理由は、日本政府がいったん「謝罪と反省」を表明した後、すぐそれを翻す妄言が重ねられてきたことが、深刻な問題であるという認識のもと、「誤った歴史認識に基づく公人の発言の禁止、および同様の発言への明確で公式な反駁」を確保するために、つまり、日本政府が「謝罪と反省」を否定する発言をした公人はその地位から退かせなければならず、公人以外の人々の発言についてはその都度明確かつ公式的に反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を含ませるためであった。
- ところが、「2015年合意」では、「不可逆的な謝罪」を「不可逆的な解決」に変身させてしまった。
- 「不可逆的な解決」は、安倍首相が、「外務大臣の代読謝罪ではなく、あなたの口で直接謝罪するの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要求に対して、「謝罪すれば合意違反である」という趣旨で対抗し、「被害者に謝罪の手紙を送る用意はない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毛頭考えていない」と対抗する口実として動員された。そして、日本の教科書から日本軍「慰安婦」関連の記述を縮小・削除するようにし、世界各地で少女像の設置を妨害したり、設置された少女像を撤去する活動を支援し、韓国政府の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一切の言及に抗議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使用された。また、朴槿恵政府にして、国際機構などで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一切言及できないようにし、すでに編成されていた関連予算も執行しないようにする武器として利用された。
- 「不可逆的な解決」と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どころか、むしろそ

の解決を妨げ、さらに問題そのものを消すための低劣な手段に過ぎないのである。

IV. 「法的責任」の再確認

- 2020年9月末から、ベルリンの「平和の少女像」をめぐる、設置—ミッテ区の撤去命令—撤去命令執行停止の仮処分申請—ミッテ区の撤去保留、と続いた一連の事態は、日本による反動がどれほどとんでもないことかを鮮やかに表わす事例であるといえる。
- 駐独日本大使館・領事館はもちろん、外務大臣まで立たせた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に込められた主張を繰り返し提起したのだろう。つまり、「平和の少女像」を「日韓の大きな外交問題」と一方的に規定し、2007年の閣議決定の「強制連行の証拠はない」、「2015合意」の「最終的・不可逆的な解決」、そして「道義的責任」を消去した国民基金の活動を強調しながら、ドイツ側を圧迫しただろう。実体を覆い隠すきらびやかな言葉の遊びで、ドイツ政府と自治体の撤去命令を導き出しただろう。
- しかし、平和を志向する少女の像という実体を向き合ったドイツ市民には、それを撤去せよという主張がとんでもないことと受け入れられざるを得なかったし、そのため、ミッテ区も撤去保留を宣言せざるを得なかっただろう。
- ベルリン少女像事態は、過去30年の間至難な努力を通じて「法的責任」を国際社会の常識として確立した被害者と世界の市民たちの歴史を、ベルリン市民の常識を通じて再確認した事件である。正義を叫ぶプロセスは至難であるが、その過程で不正義が自らみすばらしい姿を表わして崩れるという事実を見せてくれた大切な事例である。
- その巨大な常識の前に、日本政府の意地張りは、ただみすばらしく見えるだけである。日本政府が意地を張れば張るほどそのみすばらしさはより大きくなるはずである。

V. おわりに—ポスト被害者時代の出発点

- 「法的責任」の継続的な確認と、より多くの実現のための努力が必要である。
- 日本政府をして、犯罪事実を明確に認めさせ、不可逆的に謝罪させ、犯罪に対する贖罪として賠償をさせ、関連資料の全面公開を通じた真相究明をさせ、全世界の後の世代をのための歴史教育をさせ、誠実な慰霊をさせ、日本軍「慰安婦」制度が処罰されるべき犯罪であるという事実を確認させるための努力が必要である。
- 韓国政府をして、自ら「残っている」と宣言した日本の法的責任を持続的に問わせるだけでなく、日本軍「慰安婦」問題の最大の被害国であると同時に、それに対する法的責任を先頭に立って追及することを通じて国際社会に「女性の人権と平和」という新しい価値を確立した国として、それに見合った積極的な役割を果たせるための努力が必要である。
- 何よりも重要なの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を確立した歴史が、他ならぬ市民によって書かれたという事実である。国が果たすべき役割をしなとしても、今までそうであったように、市民がこの歴史を継承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 さる30年の壮大な歴史の先頭に立って、実に献身的な努力を傾けてきた「おばあさんたち」と挺対協・正義連に深く頭を下げて敬意を表する。

「被害・生存者なき時代」の

被害・生存者中心主義

――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政治的責任――

ソウル大学日本研究所 教授 南基正

I. 「生存者なき時代」を控えて

この報告は慰安婦問題解決運動の30年を迎えて、被害・生存者なき時代を準備する政治的責任を究明する必要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問題解決の重心は「事実認定、謝罪反省、法的賠償」から「真相究明、記憶継承、歴史教育」に移っている。これを踏まえ、慰安婦運動30年の成果と生存・被害者なき時代の残された課題を確認するのが課題だ。具体的には、2015年の合意の処理をめぐる運動と政治が核心争点だ。これは「過ぎ去る30年」と「来るべき30年」の結節点の問題である。

一つの国家と個人にとって、過去の問題の解決が目指す最終目標は原状回復であり、その具体的手段は被害に対する補償または賠償だ。このとき、一国家の失われた国権と破壊された経済を原状回復することは「もしかして」可能かもしれないが、一個人の破壊された生活を原状回復することは「そもそも」不可能だという事実が背景をなす。生命の剥奪や伝統の破壊など「時計を逆に回さない限り」、現実の代替物では復旧できないものについて、金銭的手段以外に原状回復の方法がないという現実がそれである。またそれは、言語で表現される謝罪が象徴的意味以上の何物でもないという点で、これを

「可視化」する意味もあった。

ここに政治的現実主義が介入する余地が生じる。「望ましいこと」より「達成可能なこと」とは何かを問い、そのための政策で答えることが政治的現実主義であるとすれば、不可能な理想よりは達成可能な目標に集中して問題解決を可視化しようとする努力が国家賠償と呼ばれる行為である。古代社会から人類は戦争が終わると、土地と物品、時には人間を供物として捧げる(または奪う)ことで、戦争で損なわれた秩序を修復してきた。国家間の近代的秩序が確立してからは、物的手段による損害の補償が戦後処理という名目で行われてきており、これを国家賠償という概念で制度化してきた。

それは最初から被害者がいない状況での問題解決の努力だったのであり、その意味で生存・被害者なき(post- victim/survivor)状況での努力だったと言える。これに対して生存被害者が現れ問題を提起することにより初めて被害者中心主義が提起される。しかし、その生存者が亡くなっていく状況のなかで被害者中心主義の危機が可視化し、生存・被害者なき時代の被害者中心主義の問題が浮上している。

政治的現実主義の介入は、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救済(賠償)の問題が人権の問題はなく、外交の問題で展開される契機および背景になった。ここにおいて人権と外交は両立または補完の関係ではなく分離と排除の関係となった。人権問題としてアプローチすれば外交的解決が難しく、外交問題としてアプローチすれば人権が侵害される二律背反の状況が作られた。この二つを両立させ、相互補完する不可分の関係にしていけることが政治的責任である。

II. 政治的現実主義が試みる和解政策の問題

政治的現実主義についての議論は、ハンス・J・モーゲンソーを抜きにして語ることはできない。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韓日交渉過程と関連してモーゲンソーが提示した政治的現実主義の六つの原則のうち、第5及び第6の原則が問題となる。モーゲンソーは「政治的行為の道徳的重要性を認識」しながらも、それが道徳とは区分される領域を規律する原理であることを確認している。したがって、政治的現実主義に基づいた問題解決を試みる人々は「特定の国家の道徳的熱望と世界を支配する道徳法則を同一視するこ

とを拒否」し、国際政治において「法的・道徳的アプローチ」を不満に思ったり、そのようなアプローチとの「实际的で明確な違い」を認識する(モーゲンソー、国家間の政治 1、81- 108)。

モーゲンソーは、国家より上位の行為者、すなわち世界国家の創出を通じた平和が現在の「道徳的、社会的、政治的条件」の下で達成されないならば、国家間の「調整による平和」が現実的な方法であり、その道具として外交に注目している。『国家間の政治 (Politics Among Nations)』の最終章が外交に関する考察であることにモーゲンソーの問題意識が込められている。モーゲンソーによると、外交が意識すべき最も重要な徳目は「実際に、潜在的に利用可能な力を勘案して目標を決定」することだ。そして外交が機能するための9つの規則は「十字軍精神を捨てること」という勧告から始まり「政府は世論の指導者であって奴隷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定言命令で終わる(モーゲンソー、国家間の政治 2、434- 447)。

具体的にドイツとイスラエルの和解が政治的現実主義に導かれた成功事例という分析と評価がある。すなわち、政治的現実主義が試みる和解は、加害者が被害者の身体の安全と生活の安定を保障すること、すなわち政治的および経済的生存を保障することであり、これが国家対国家の間で試みられる時、これは安全保障の提供と経済的補償によってな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点でドイツの和解政策は、イスラエルに対する安全保障と経済的補償という「望ましいというより可能な目標」を追求しつつ、相互利益を追求した結果として成功したという評価である(武井彩佳、255)。

しかし、ドイツとイスラエルの和解が現実政治の結果であることは明らかなが、ドイツが長時間にわたって補償対象を拡大し、時代の変化に合わせて当代の道徳的基準に対応しようと努力したことも事実だ(武井彩佳、253)。それは、中東でパレスチナ難民の問題が複雑に展開する中、イスラエルを相手に補償を実施する過程でドイツが見せた政治的謙虚さに現れた。すなわち補償に対する解釈は、補償を実施する側ではなく補償を受けた側が決定するということ、加害者側はその決定権を持たないという政治的謙虚さ(武井彩佳、31- 37)がドイツが政治的現実主義の和解政策をとる中で採択した最小限の被害者中心主義であった。

そのため、それは政治的現実主義の成功でありながら、理想主義との対話を試みた結果と理解される。E・H・カーは政治学が「政治的現実(what is)」に対する学問であると同時に「政治的当為(what ought to be)」に関する学問で、科学であると同時に哲学だと規定した。カーの問題意識は理想主義の失敗を失敗と認識することから始まった。カーは、ホップハウスが未開人の特徴として、良いことは「良い」という事実だけで「正しい」と信じる点にあると指摘したことを挙げ、理想主義的政治学は分析の産物ではなく、意欲の産物だとした(カー、20年の危機、23- 28)。

カーによると、現実主義が現実追従主義に流れるにつれて思想を無力化し、行動を否定し、悲観的かつ冷笑的な側面を持つこともあるが、「現実主義はユートピア主義の行き過ぎを矯正するために必要だ」という。これは「理想主義が現実主義の欠如を矯正するために必要なことと同じだ」。「未成熟な思想は圧倒的に目的論的で理想主義的だ。目的を全面的に否定する思考は、過去の時代の想像である。成熟した思想は目的に観察と分析を併せ持つ。したがって理想と現実とは政治学の二つの顔」であり、「すべての健全な人間の行動と思想は理想主義と現実主義、自由意志論と決定論のバランスの上に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カー、20年の危機、29- 32)。

政治の理想と現実の間の葛藤は、理論と実践の葛藤を媒介に知識人と官僚の葛藤に展開される。さらに、これは保革葛藤、左右葛藤として現れる(カ、20年の危機、34- 42)。先験的に思考する知識人と経験的に対応する官僚間の葛藤が2015年の合意を生み、これをめぐる葛藤が知識人と官僚の葛藤、ひいては保革・左右葛藤へと展開した。この葛藤を解消することが被害者なき時代の被害者中心主義の課題である。

III. 再び、「被害者中心主義」とは何か？

「被害者中心主義(victim- centered justice, victim- centered approach)」は概念言語として安定的な地位を持つ言葉ではない。クォンキム・ホンヨンによると、被害者中心主義はレイプに対する定義が変化して生まれた歴史的産物だ。それはフェミニズムの戦略として有用性議論に開かれた概念として、性的暴力の概念が広がり判断基準が変化する過程で被害者中心主義という言葉が登場したのだ。それは文字通り、「加害

者中心」の社会に対する批判と代案として登場し、加害者の一方的な弁明だけを受け入れる現実から「被害者の言うことを聞け」という要求から始まった。そして、韓国社会における被害者中心主義は、2000年に「運動社会における性暴力根絶100人委員会」の活動を通じて広がり、定着した。

被害者中心主義は、加害者と被害者の証言が異なる時、被害者の供述を信頼するものと理解されてきた。上記の100人委員会は「客観的証拠や証人が不在で加害者と被害者が異なった陳述をする場合、被害者の陳述を事実として認めること」が被害者中心主義であると規定した。被害者中心主義を「性暴力事件の意味構成と解決過程で被害者である女性の主観的な経験に真実の権威を与えること」(100人委員会；イ・ミギョン他、2011、65；パク・ギョンシン)、「被害者の被害経験に集中し、その経験を家父長的な男性的態度ではなく、完全に被害者の見解で見ようとする事」(民主労総)と捉える態度もこのような脈絡から出たものだ。

このような過程で、加害者中心の社会を批判するために使われ始めた被害者中心主義が、次第に性暴力に対する判断基準を被害者に一任するという意味に変わり、「被害者中心」と「主義」が加えられ、新しい権威の言語に変わったという指摘も出た(チン・ヒギョン)。「被害者中心主義」がフェミニズムの言語から「手続き」の言語に変わったという指摘も、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被害者中心主義」がフェミニズムの言語ではないという批判も出た。被害者に客観性の地位を独占させては、男性中心的社会を解体することも、客観性に対する新しい認識論を展開することもできないというのが批判の核心だ。性暴力事件の客観性は被害女性が証明するものではなく、社会が女性の声を尊重することで獲得されるものだという批判だ(チョン・ヒジン)。被害者中心主義が「被害者になるための」競争を生み、結果的に被害者の経験を尊重することに失敗したと評価し、被害者中心の解決に内容がないという問題を指摘している(クォンキム・ホンヨン)。

いずれも被害者中心主義が運動の言語から政治の言語に変化したことを指摘している。それは「被害者中心主義」という用語そのものが持つ政治性のため、つまりそれが権力関係を内包する用語であるために不可避なことと考えられる。すなわち、被害者中

心主義は加害者- 被害者間の権力関係に関連して発生する犯罪において登場する用語である(パク・ギョンシン)。上記の「紆余曲折」を経ながら、現在、被害者中心主義とは「権力関係を原因として発生する犯罪などにおいて加害者の処罰を盲目的に追求した場合、その権力関係の下で生き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被害者の事後の回復、または権力関係からの解放がかえって阻害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被害者の欲求と関心に重点を置いて司法の手続き及びすべての事件解決の手続きを進めようとする傾向」として理解されている(New Jersey Attorney General, 2004 ; Konradi ; Koss and Achilles)

被害者中心主義を「被害者を司法制度の第一の顧客と考え、彼らの安全、権利及び利益を優先して加害者に対する管理戦略をデザインし、実行すること」(Bumby)と規定した場合、第一の顧客の不在は被害者中心主義の存立根拠の不在状態を引き起こす。しかし、加害者の処罰が中心ではなく、権力関係の解体を目的とする場合、被害者中心主義は被害者の存在の如何に関係なく追求されるべき戦略であり、目標となる。この時、被害者中心主義は法的・道徳的責任の問題ではなく、政治的責任の問題になる。これが被害者なき時代の被害者中心主義が政治的責任と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だ。

具体的課題は、記憶後の世界(post- memory world)の被害者記憶の構成と継承だ。被害者なき時代のホロコースト記憶継承の問題に直面し、ニコラス・チェア(Nicholas Chare)は, "Holocaust Memory in a Post- Survivor World: Bearing Lasting Witness"のなかで、証言をするための哲学的、視覚的、世代間の努力からストーリーテリングの詩学(poetics)を探究している。これに関する先行研究を検討しながら彼は「相互テキスト的に生成される記憶(intertextual generative memory)」といえる方法を提示した。これは、現在と未来のホロコースト記憶にかかわる人々の中で、小さなことでも意味のあるつながりが作られるように、文学、写真、哲学とともに、記念館訪問の経験などを一堂に生産的に合流させることを指摘する言葉として提示された(Gigliotti and Earl, Introduction)。これは、被害者なき時代の慰安婦問題の被害者中心主義の戦略として採択すべき提言である。

IV.再び、「政治的責任」とはなにか？

政治とは「本質的に論争的概念」だ。教科書的意味で「政治」とは(ヘイウッド、27-42)、最も広くは「人間が生活を営むのに必要な一般的規則を作り、保存し、修正する活動」であり、葛藤と協力という現象に関連する行為活動の一種である。その語源がポリス(polis)という点で、葛藤と協力という行為の主体が政治共同体であることが分かる。つまり政治はポリスにかかわることで、それは国家にかかわること 国家の統治および権威行使と関連することが分かる、またそれは「価値の権威的配分」、「妥協と合意」を通じて葛藤を解消する手段を意味し、「可能性の技術(芸術)」と呼ばれたりもする。それは「権力の割り当てを通じて葛藤する勢力間の和解を導く活動」であり、「暴力や強制よりは調停を選択することで秩序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であり、加害-被害の問題を調停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も政治の領域といえる。もちろん国家という政治的共同体の構成員に加えられた加害責任を正す行為が政治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エルサレムのアイヒマン』でアーレントは政治的責任という特殊な形態の責任が一国家の中の共通成員(common membership)と国家の名で行われた過ちに対する責任を受け入れることから出ると述べた(ヤング、143- 144)。アーレントは論文「集団的責任」で、政治的責任と罪を区分し、集団には道徳や法的な用語ではなく政治的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アーレントは「私は政治共同体の一員だという事実のため、私は国家や政府の名で特殊な行為者たちが犯した行動や事に責任がある」と述べた。

これに対する批判がアイリス・マリオン・ヤングの「正義のための政治的責任(Responsibility for Justice)」だ。ヤングはアーレントの分析が「観念の単純性」を曝け出していると批判し『エルサレムのアイヒマン』を読解し、国家が犯した犯罪に行為者が関わる方式を四つに区分した。この区分を通じてヤングは、「広範囲な国民大衆に影響を及ぼす措置や事件に関して公的な姿勢を取り、巨大な害悪が発生するのを防ぐために集団行動をとろうと努力したり、より良い方向に制度的変化を促す義務が個人にあり、このような義務を政治的責任と見るべきだ」と主張した(ヤング144)。ヤングは特に「誰もが有罪だ」と言うのは「誰でも有罪ではない」と言うのと同じだという命題に集中した。「すべてが有罪であるところでは、結局誰も審判さ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ヤ

ング、145、脚注5)。

ヤングによると、被害者中心主義が被害者なき時代の政治的責任になるのは、みんなが有罪(アーレント)であるからではなく、それが世界の秩序に関することだからであり、世界の秩序が個人を離れて、政治共同体を媒介とし、時間をさかのぼったり未来志向的につながっているからである(ヤング、147- 148)。また、それは公的かつ集団的に行われる行為であるという点(ヤング、165)において、被害者中心主義が被害者なき時代の政治的責任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

そこからヤングは責任に関する社会的連結モデルを提示する。不正義と関連した責任は、個人が共同の憲法の下で生活するという事実からではなく、構造的不正義を生産する様々な制度的過程に参加するという事実から生じるためだ(ヤング189)。法的責任モデルが、不法行為に関する法によって責任を与え、制裁、処罰、補償を強要し、賠償などの目的で責任当事者を確認して道徳的判断を下すようなすべての実践を含んでおり、このような責任の概念は目的上において過去志向的な概念であるのに対して、政治的責任は未来志向的である。さらに、政治的責任は道徳的行為者の意味を意識している社会構成員に課せられる。道徳的行為者とは、他人の運命に無関心でない人で、国や他の組織化された機構が、しばしば一部の人々に与え得る利害に無関心でない人をいう(ヤング、169- 190)。

ヤングが示した法的責任モデルと社会的連結モデルとの決定的な違いは、社会的連結モデルが加害者を隔離しないことにある。責任を付与する主な目的は未来志向的であり、責任は本質的に共有され、政治的集団行動によってのみ免除される(ヤング、189- 190)。被害者中心主義を法的責任に限定するとき、その責任の対象は生存被害者に限定され、ある時点に至り過去形に完結することができるが、社会的連結の中で具現すべき原則であるとすれば、その責任は社会的連結が意識される政治的共同体が持続する限り、被害者の生存の有無に無関係に追求されるべき未来志向的課題となる。

さらにヤングは、構造的不正義が個人の個別的な相互作用によるものではなく、個人の社会構造的地位によって発生するものと見做し、個人的責任より政治的責任を強調した(ジョン・ヘジョン、180)。構造に対する規範的判断の観点から政治的責任を問題視

したのである。既存の道徳的責任、法的責任の議論は正義を回復する責任を被害者- 構造に還元する方式として、ヤングは法的責任モデルに代わって社会的連結モデルを提示した。これは、自分の行為によって構造的過程に影響を及ぼしたすべての人々が、不正義に責任があるという事実に基づいている。このような議論は、被害者なき時代の被害者中心主義を議論できる根拠となる。しかし、これは一方において、個人と政治的共同体が二分法的に区分されないため、政治的共同体を主体とした責任論は成立しにくい。すなわち、いわゆる国家が行為主体になる責任論が成立しないという意味だ。むしろ社会的に相互につながった「個人の政治的責任」が強調される。

V. 「和解の国際政治」と被害者中心主義

「和解の国際政治」は国際政治の「4つの理論」によって構成される。国家間の和解とは「国家間の敵対行為から始まった問題を解決し克服する国際政治的過程」である(チョン・ジャヒョン、2012、1- 29)。国際政治の現実で存在した国家間の和解の事例は概ね次の4つの方式に従った。第一に、国益(特に安全保障上の利益)の調整と共有が和解を可能にするという現実主義的アプローチ。第二に、安定した平和を創出するための協力の中で和解が可能だという制度主義的(自由主義的)アプローチ。第三に、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を通じた相互認識の浸透の中で和解が可能であるという構成主義的アプローチ。第四は、加害者の処罰被害者の許しによる懲罰回復で和解が可能だという正義論的アプローチなどである。

韓日間では上記の第一方式の和解を試みたことが「1965年体制」と「2015年合意」という失敗を招いた。二番目の方式に従って行われた成果が、1990年代から2010年までに出了た宣言と談話だ。すなわち1993年の河野談話から始まり、1995年の村山談話、1998年の韓日共同宣言、2002年の朝日共同宣言、2010年の菅談話などの成果だ。三番目の過程はまだ始まっていないが、その萌芽が発芽している状況であり、四番目の過程は加害者加害国、被害者被害国の区分と水準の問題を抱えているところ、処罰または許しの(不)可能性の問題が存在する。

国際政治における被害者中心主義の可能性を見極めるために、「和解の国際政治」に

における「被害者」の位置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第一方式の現実主義的アプローチは、行為主体として「国家」が想定されるため、被害者の領域は狭小である。第二方式の制度主義的アプローチは、多様な行為主体の参加が想定されるため、被害者(団体)の参加の可能性が開かれる。第三方式の構成主義的アプローチは、被害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両国が共有する過程で被害者中心主義はより重要な価値になり、第四方式の正義論的アプローチで初めて「被害者中心主義」は実現されるべき核心価値になる。

ここに、次のような課題が導き出される。韓日間の過去の問題の解決策は、第1方式の現実主義の遺産を克服する一方、第二方式の制度主義的接近による解決過程を再開して第三方式が定着する空間を開き、最終的に第四の回復的正義を目標にするのが現実的だ。第一方式の限界の克服、第二方式の再開、第三方式の試みなどが第四の目標を実現する前段階の実践課題であり、少なくとも同時進行すべき課題である。これは具体的にはまず「2015年合意」の失敗を克服する過程を始めることだ。これと同時にこのような努力は、第二の方式の再開と第三の方式の試みにつな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これによって第四の「回復的正義」への道が開かれ得るという点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VI. 韓日関係で「被害者中心主義」の登場と展開

慰安婦問題で「被害者中心主義」が初めて言及されたのは2015年12月9日、『帝国の慰安婦』事態に対する研究者と活動家の立場表明記者会見の席上だった。この席で李明源(イ・ミョンウォン)慶熙大教授が「何より重要なことは被害者中心主義を堅持すること」と発言した(ニュー시스、2015年12月10日)。そして、2015年の合意以降、これに対する批判の中心に「被害者中心主義」が登場するようになった。朴槿恵大統領が慰安婦問題の解決策と強調した「被害者中心主義」が損なわれたという批判がその中心だった(ハンギョレ、2015.12.30)。「被害者の被害を明確に把握し、その被害を引き起こしたあらゆる状況に問題を提起し、被害者がその被害以外のいかなる追加的被害も負わないようにそばに立つこと」、「ハルモニたちが『もういい』とおっしゃるまで、被害者中心主義で練られた怒り」のような言及にその例が見られる(チョ・イクサン、週間京

郷、1159号、2016.1.12)。

文在寅政権に入って「被害者中心主義」は、対日外交の原則として確立された。外交部の姜京華長官は候補者聴聞会で、「被害者中心の観点から知恵を集めて日本との対話が続け、心のこもった措置が取られるようにしたい」とし、「被害者中心主義」の態度を明らかにした。さらに、「10億円の性格が何なのか明白ではなく、不可逆的、最終的合意という表現も軍事的合意で登場することができる話」と批判した。鄭鉉栢女性家族部長官も、候補者聴聞会で、2015年合意が「被害者中心主義に立脚した被害当事者の意見の収れんが不足した」と評価するなか、被害者中心主義を言及した。

慰安婦合意検討TFの発足(2017.7.31.)に際して政府は被害者中心主義に立脚し、慰安婦の合意を綿密に検討することを要請し、「日帝下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生活安全支援及び記念事業などに関する法律」改正案が法司委を通過(2017.11.23.)して、被害者捧げる賛辞の日(8月14日)を指定して、慰安婦被害者の権利義務と関連した政策を樹立する場合、被害者の意見を聴取するようにして、政策の主要内容を国民に積極的に公開するよう求める条項を新設し、これが被害者中心主義に立脚して政策を立てるという趣旨だと述べた。検証TF報告書の発表に対しては、大統領府は「被害者中心主義原則を固守するものの、韓日間の立場は平行線の中での関係発展を追求す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正義記憶財団は検証TFに対して批判声明を発表し(2017年12月18日)。「(検証TF)発表を知らせるその過程でさえ、被害者と支援団体にいかなる公式的な意見聴取の手続きや了解も得ずに一方的な言論報道を通じて該当内容を知らせたことは、被害者中心主義に背を向けたことを越え、被害者に対する無形の暴力を加えたことであり、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批判した。合意直後に実施されたユン・ミヒャン代表のインタビュー(2017年12月29日、統一ニュース)でも、ユン・ミヒャン代表は「被害者中心は過程も内容にも被害者がいるべきだ。誰のためにこの合意がなされるのか。動機も、過程も、内容も、結果もすべてが被害者を中心に協議するのが被害者中心だ」と主張した。

女性家族部は2018年11月21日に和解・治癒財団の解散を公式発表した。このための法的手続きを踏む予定であることを発表し、「被害者中心主義の原則の下、様々な意見収

斂の結果などを基に財団の解散を推進することになった」と説明した。これに対し、市民団体は2018年12月28日に声明を発表し、「2015年の韓日合意の完全無効」を主張し、「2015年の韓日合意の発表以降、国連人権機関は被害者の要求に合った永久的な解決策を模索するよう韓日両国政府に持続的に勧告」したとし、「被害者中心主義の原則に基づいた後続措置がなされず、国際社会で日本政府の犯罪不正と被害者に対する2次・3次加害行為は深刻化」していると批判した。さらに、2019年7月7日、正義記憶連帯は「和解・治癒財団」解散を確認して歓迎する声明を発表し、「日本政府がすべきことは国際人権基準である被害者中心主義のアプローチという原則に則って慰安婦問題が解決できるよう、犯罪事実を認めて、それに基づく法的責任を履行することだ」と要求した。

こ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慰安婦問題を含め、過去の歴史問題解決策の原則として「被害者中心主義」は確固たるものになった。2019年11月から12月にかけては「文喜相案」をめぐる被害者中心主義の解釈が問題となった。文喜相(ムン・ヒサン)議長が被害者中心主義を掲げたことについて、批判者たちは「被害者を排除したり、選択的に接触して制限された意見収斂のチャンネルを稼働して法案を推進しながらも、被害者中心主義の名を使っている点は驚くばかり」だと批判した(イ・ナヨン、京郷新聞、2019.12.15.)。

2019年12月27日に憲法裁判所が慰安婦の合意に対する違憲請求却下を決定しながら、慰安婦の合意が被害者の権利救済のための法的措置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たのも被害者中心主義に立脚したものだった。憲法裁判所の決定は「政治的合意であり、これに対する多様な評価は政治の領域に属する」と説明しながらも、「完全かつ効果的な被害の回復」のためには「被害者の意見収斂」が重要だという点を重ねて確認した。

文在寅大統領は、2020年2月11日、「被害者中心主義は国際社会の大原則」という考えを表明しており、これが韓日関係の基本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のような認識は文在寅大統領が被害者中心主義を固守することは、弁護士時代、被害者を代理した経験のためだという日本のマスコミ報道に反論する中で示された。

ユン・ミヒャン代表は国会議員選挙の候補として記者会見(統一ニュース、2020.4.5.)をするなかで、「韓国内部でも文在寅政府になり、過去の問題解決と関連して基準が作られた」といい、それがまさに「被害者中心主義」と主張した。つまり「被害者中心主義」に立脚して慰安婦問題と日本の過去における行為による被害の問題をどう解決するのか政策を樹立し、その政策を樹立するにあたっては、民間のレベル、立法部を十分に活用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具体的な課題として提示したのは、「立法による真実究明と資料収集、記録と体系化による真実究明作業の要求が第一の課題であり、これを通じて日本政府に責任を求めていく努力が二次的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さらにこうした「人権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多者外交を行ってほしいという意見を表明した。

2020年4月15日、正義記憶連帯は1435次オンライン水曜集会を通じて、21代国会に、女性人権平和財団を設立できる根拠となる法案を成立させて慰安婦被害者の名誉と人権回復に向けて先頭に立つことを促した。「新しい国会議員はハルモニたちが望むことが何なのか、真の被害者中心主義に基づいた解決がどんなものなのかを知る人になってほしい」とし「女性人権平和財団の設立根拠の基盤を備えられる意義ある国会議員を20代国会で(期待したが)論議さえできなかった。私たちが30年間、叫んで来た、そして多くの国民と一緒にした、切実さを込めた法案が可決されて慰安婦被害者の名誉と人権回復に向けて一歩進むことのできる国会になることを願う」と主張した。

その後、「李容秀(イ・ヨンス)記者会見」、「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事件」後、被害者中心主義と2次加害論議が改めて提起される中、「被害者中心主義」が混乱し、再構築されている。ここで参考にしたいのは、国際社会の認識である。

1985年に採択された国連の公式文書「犯罪被害者と権力乱用の被害者のための基本的司法原則宣言」(以下、被害者人権宣言)は、被害者支援の国際的原則と基準を明らかにしている。この被害者人権宣言は「権力濫用の被害者」を、「個別国家の刑法違反ではなくても、国際的に認められる人権関連規範に反する作為または不作為を通じて個別的または集合的に身体的または精神的損傷、情緒的苦痛、経済的損失または基本的権利の実質的損傷などの損害を受けた人」と定義付け、問題解決のためには被害者を尊重し擁

護することだけでなく、共同体の責任を認識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これが真の「被害者中心主義」の精神であると強調した。

そして去る8月14日、文在寅大統領は慰安婦被害者「記憶の日」の祝辞を通じて「問題解決の最も重要な原則は被害者中心主義」であり、「政府は(被害)ハルモニたちが『もう十分』とおっしゃる時までハルモニたちが受容できる解決策を探るだろう」として、問題解決過程に被害者が関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原則を確認した。さらに、翌日の8月15日、文大統領は光復節の式辞で、憲法10条の幸福追求権に言及した。文大統領は「個人が国のために存在するのではなく、個人の人間らしい暮らしを保障するために存在する国」として、「一個人の尊厳を守ることが決して国に損害が立たないという事実を確認する」と強調した。

これに対して、日本外務省幹部は、「慰安婦問題などで被害者中心主義を掲げている文在寅政府とは関係改善の糸口すら見いだせない」として、「被害者中心主義」そのものを否定する態度を示しており、「徴用」問題の解決において、対話が重要なら、「韓国が具体的解決策を提示せよ」と迫り、日本政府が責任論から自由である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聯合ニュース、2020年8月16日)。これはもちろん、日本政府の2015年の合意に対する解釈から出てくるものだった。したがって韓日両国政府が「被害者中心主義」を共有するためには日本政府のこうした解釈のフレームを破ることが一次的課題だ。

VII. 「2015年合意」の再検討ー

被害者中心主義による解決の道を開くため

「2015年合意」の後、慰安婦問題の解決には三つのレベルが存在する。第一に、現実存在する「2015年合意」の意味を確認することだ。第二に、日本政府が提供して韓国政府が一部使用した10億円の処理を確定することである。第三に、2015年の合意に基づいて韓国政府または日本政府の今後の措置(必要措置)が可能かどうかを確認すること、などだ。

2015年の合意に対する検証TF報告書は、日本政府の責任の認定、内閣総理大臣の謝罪と反省の表現、予算措置の実施など「3大核心事項」で進展があるものの、「平和の少

女像」問題、国際社会での非難の自制、最終的不可逆的解決の3つの問題により被害者中心の解決が不十分だと指摘した。報告書を発表する中でオ・テギュ検証TF委員長は破棄無効化、合意維持、第3の案の3つの選択肢がある中、「理性の悲観にも関わらず、意志の楽観を信じながら」、「問題があり、熾烈な解決努力があれば、適切な答え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とし、第3の案の可能性を提示した。

大統領も立場表明(12.28.)を通じて2015年の合意が手続き的、内容的に欠陥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国際社会の普遍的原則に反した、被害当事者と国民が排除された政治的合意として、この合意が、両国首脳の追認を経た政府間の公式的約束という負担にもかかわらず、この合意で慰安婦問題が解決できないという点を確認した。さらに、政府には被害者中心の解決と国民が共にする外交原則の下、後続措置を用意することを注文した。

これに対し外交部は後続措置を発表(2018.1.9)し、「被害者中心主義」の措置を模索し、10億円は韓国政府の予算で賄い、基金処理案について日本政府と協議すること、財団運営について該当部署において被害者関連団体と国民の意見を広範囲にわたり収斂し、後続措置を講じる」との立場を示した。これを発表した外交部報道官は会見の中で、韓国政府が考えている被害者中心主義に対する質問に対して、「慰安婦問題のように戦時の女性の性的暴力に関する普遍的人権問題の解決において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とは、何よりも被害者らの懸念や意見について注意を傾けながら問題解決に向けた諸過程で被害者らが意味ある参加と協議を保障することが最も核心的な要素」という立場を確認した。

李洛淵国務総理も記者懇談会(2018年1月16日)を通じて、「国家間、政府間に合意があ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事実として、約束破棄や再交渉などの追加要求はない」とし、問題解決で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3つの基準として「歴史的真相、普遍的正義、被害者の立場」などを提示した。

もちろんこれに対して安倍首相の日本政府は「1ミリも動かない」とし、韓国政府と市民社会の要求に一切答える考えがないという立場を確認した。

一方、検証TF報告について、挺対協、正義記憶財団、慰安婦研究会などは声明を発表

して、2015年合意に被害者中心主義アプローチが不在する批判し、和解・治癒財団の解散、10億円の返還、合意の破棄・無効化を要求した。さらに、国際機関の勧告による人権回復措置の履行として、被害者の完全な人権と名誉回復のため、政府レベルの公式謝罪、賠償を含む法的責任の履行を求めた。また、検証TF報告書に対する批判も提起したが、「責任の痛感と政府予算措置」を法的責任と解釈でき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反論した。被害者および支援団体が主張してきた法的責任の認定とは、「加害内容の具体的明示と認定」、「責任主体の具体的明示による法的責任の認定」であるという点を改めて確認した。

この過程で確認されるのは文在寅政府が被害者中心主義の復元と対外関係全般を考慮した外交を同時に満足させる策を追求していたという点だ。その解決策は、大統領が明言し、外交部長官が言明した2つの立場に即して出てくるものであった、すなわち「2015合意が政府間公式合意であることを考慮して破棄と再交渉を行わない」という立場と「2015合意で問題が解決されない」という立場の間に存在した。韓国政府は「政府間の公式的約束」という形式は有効だが、内容が問題であるという認識に立ち、その形式と内容の間の隔たりが「日本の自発的かつ真摯な措置」で内容が満たされるという立場だった。

一方、国際社会は2015年の合意が被害者中心主義を反映して「改正(revise)」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だった。つまり、被害者中心主義に反する内容だという点を指摘したのだが、合意の中で被害者が反発した「平和の少女像」問題、「最終的かつ不可逆的解決」、「国際社会での非難・批判の自制」に問題があることを指摘したのだ。

ここで「女性人権平和財団(仮称)」の設立と慰安婦被害者たちによる記憶の継承活動の制度的な実行が現実的課題であり、解決策として登場した。

VIII. 現実的解決の出発点として「2015年合意」と

その履行のための条件

2015年の合意の存在を認めるならば、何よりもその履行の順序において、日本の履行

が韓国の履行の前提条件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内閣総理大臣の謝罪と反省表明は、日本軍関与の事実を認めた上で日本政府の責任を痛感したことによるものであり、日本政府の金銭的措置はこれを確認する行動だ。にもかかわらず合意直後、これを否定する日本政府の行動が合意の精神に反するものである。これが現在「2015年合意」が「死文化」されている第一の原因だ。

合意内容の中心は、韓国が財団を設立し、日本が10億円を拠出し、日本と韓国が協力して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傷の治癒の事業を行うことである。すなわち、10億円拠出と伝達で、日本の責任履行が完了したわけではないのだ。すなわち、2015年の合意はプロセスに対する合意であり、問題解決に向けたロードマップを共有し、共に努力しようというのがその内容である。合意内容に即して日本政府の誠実な協力が必要であることが「死文化」された合意の「蘇生」のための必要条件である。つまり、日本政府の履行義務が10億円を拠出するのではなく、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傷の治癒事業の実施にあるという点が、合意当事者である韓国と日本政府の間で明確に共有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政府が10億円を政府予算で充当し、その使用のために日本と協議するということは、再交渉をするというのではなく、10億円の意味を確認するということだ。日本政府の予算措置が日本政府の加害事実および責任認定と公式謝罪とともに行われる場合、被害者たちはこれ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合意直後、日本政府はこの金銭的措置が「賠償ではない」と釘を刺し、被害者に謝罪の手紙を送ることは「毛頭考えてない」として、上記の方式を日本自ら否定した。このため、2015年の合意が死文化した責任は日本側に帰着する。韓国政府による10億円の充当というのは、61億ウォンの未執行分を凍結し、46億ウォンの執行分を政府予算で充当し、予算措置以前の原点に戻って日本政府の説明を待つということだ。日本の誠意ある自発的措置があれば、46億ウォン執行分を追認し、日本と協力して61億ウォンを財源とする新たな事業を始めることができる。これには被害者中心主義に基づき、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傷の治癒のための諸事業が含まれる可能性がある。

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要請する「行動」は「真実を認め、心を尽くした謝罪、再発防

止努力」だ。しかし、これは「追加措置」ではなく「必要措置」として、合意の外部に追加的に要請するのではなく、合意を履行する過程で必要な措置である。「最終的かつ不可逆的解決」については、当該文章の時制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1965年の協定では、請求権問題が「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なっていることに比べて、2015年の合意は、慰安婦問題が「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となっている。これは2015合意がプロセスに対する合意だったことを意味する。その意味で、2015合意はロードマップの意味を持つ。すなわち、日本政府が「先に表明した措置を着実に実施することを前提に」いつか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のである。

日本政府が実施する措置とは、「すべての元慰安婦の人々の心の傷を治癒する措置」であり、具体的には「すべ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および心の傷の治癒を向けた事業を行うことにした」ということだ。ここで、再度強調するが、10億円の伝達だけで、日本が約束を履行したとは言えない。また、「解決される」の主語が「この問題」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この問題」とは岸田外相が明らかにした第1項で言及した「慰安婦問題」であり、これは「当時、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に深い傷を負わせた問題」だ。したがって、「この問題」には「少女像」の問題と「国際社会における非難・批判の自制」の問題が含まれず、この二つの問題は2015合意において解決されるべき「この問題」の外部に存在している。

その意味で、日本政府が「1ミリも動かない」と言ったことは、合意への無理解(または恣意的解釈)に加えて韓国政府の立場に対する無理解が確認される言葉であり、これが仮に日本が取るべき「必要措置」に対する拒否であるとすれば、これがむしろ合意違反である。反面、韓国政府に対してのみ合意実施を要求することも、合意に対する恣意的解釈(または過剰解釈)から出る行動である。参考にしたいのは2018年1月9日、河野外相は韓国政府に「合意の履行」を促し、「追加措置」の受け入れを拒否する立場を確認しながらも、「日本の合意履行は終わったと思う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我々も履行するし、韓国側にも履行を要求する」と答えているという事実だ。「追加措置」ではなく「必要措置」は進行中であり、今後も日本政府がすべきことが残っているという点を認めた発言と言える。

日本の朝日新聞、毎日新聞、東京新聞などは韓国側の「合意履行」が必要だが、そのために日本政府もすべきことがあるという認識を示しており、自民党の政治家で石破茂氏がこうした立場を表明している。

結局、日本が「必要措置」を取らない場合、合意は最終的に死文化するはずであり、その責任は日本にある。日本の外交史では、日本の行為により条約協定が死文化した数多くの事例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1956年の朝日共同宣言、2006年の普天間基地移設に関する日米合意、2002年の朝日平壤(ピョンヤン)宣言などが、日本側の約束違反、合意事項の不履行で死文化した事例だ。

IX. 被害者なき時代に「2015年合意」をいかにすべきか？

何よりも、合意で確認された日本の加害事実の認定と心からの謝罪、そして法的責任の完遂だけが、死文化した合意を蘇らせる唯一の道だ。したがって、「ボールは日本にある」。

まず、日本の責任ある人(菅首相、または富田大使)が慰安婦慰霊碑を訪問して、河野談話で確認したところの加害事実を認めて2015年合意に即して日本の総理大臣の謝罪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安倍内閣に続き、2015年の合意を日本政府の立場から継承するという立場表明が必要である。すなわち、「内閣総理大臣として謝罪する」という文言を菅首相の肉声で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2015年の合意は安倍内閣総理大臣が主語となっており、個人の立場表明にすぎない。つまり「安倍内閣総理大臣は」というところを、現役の内閣総理大臣である菅首相が「日本国内閣総理大臣としてもう一度慰安婦として多くの苦痛を経験して心身にわたって癒しがたい傷を着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て心から謝罪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必要がある。

さらに、2015年の合意で確認した10億円は、河野談話で日本政府が認めたとおり、日本軍による戦時女性人権侵害の事実を認め、これに日本政府が責任をもって謝罪する心の証として、日本の予算措置で拠出して渡す「謝罪金」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そうすることで、10億円が合意で確認された通り、被害者の名誉回復と傷の治癒のために使われるという事実が確認される。ここで、被害者中心主義の原則が具現されな

ければならない。10億円の残余金とジェンダー平等基金を合わせて、「女性人権平和財団」という名で設立の動きがあった「真相究明、研究教育、記憶継承のための施設または機構」をラキビウム形で設立するのだ。その設立は国際社会と未来に開かれた解決の拠点を設けることである。

以上の日本側の努力を前提に、2015年の合意の限界が克服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時、「平和の少女像」は上記の施設または機構に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そうすることで、「平和の少女像」は日本人の心からの謝罪と法的責任を要求する水曜集会の象徴であったことが記憶として継承される。その後、水曜集会は、上記の施設または機構において「平和の少女像をめぐる水曜行事」として、例えば、イ・ヨンス学校、セミナー、懇談会、証言朗読会などに転換して実施される。

そして上記の施設または機構は、日本の研究者、活動家も含め、国際的なネットワークの中で運営される必要がある。当財団を国際社会に「戦時性暴力」の「記憶継承」と「再発防止のための教育」の場として提供し、戦時性暴力に関するアジアの女性に関する国際レジームを主導する機構として発展させる。

挺対協運動30年の2020年、「被害者中心主義」の時代を切り開くための条件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パンデミックを背景に日本で安倍政権が終わり、米国でトランプ政権が崩壊している。現在、我々は世界史・文明史の転換点に立ち、その出発点を記録し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新自由主義の無限拡張としてグローバル化にブレーキがかかり、再び国際政治の前面に出ている「国家」が政治的現実主義を復元させる一方、これまでゴミ箱に放り込まれ、忘れ去られていた国際的道義も希望の顔をそっと見せ始めている。

現実主義と理想主義の対話を開始して、慰安婦問題の解決の新たな30年を開くことにこれ以上ないチャンスが開かれている。その機会を捉える政治的責任は政府だけの責任ではない。

ポスト被害者時代の歴史的責任

東北アジア歴史財団 研究委員 朴貞愛

I. はじめに

「ポスト被害者時代」より「ポスト生存者時代」と言うべきかもしれない。私たちが知るべき被害者の話は、事件発生時点から継続して残っているからである。それは言うまでもなく生存者なのか、死亡者なのか、行方不明者なのかに関わらずだ。

今日のテーマに関連して、「ポスト生存者時代」が何ゆえ私たちにとって重要になったのかを問うてみたい。金学順が登場してから30年間、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相究明と問題解決過程において、被害生存者はどのような意味をもったのか。歴史的責任に対する「覚醒」と、運動への「参加」契機、そして持続的な実践の「動力」になったという点で、生存者の意味は決して小さくないし、ある分野では「聖域」という比喻が生まれるほど、絶対的存在として認識された側面もある。

「慰安婦」問題を認識し解決方向を模索するにあたり、生存者の言葉と歩みに追っていった流れには、植民地と戦争、性暴力を経験してもなお生き続けた女性を癒し、尊重したいという「善良な意志」が混ざっていた。しかし、責任主体が誠意ある態度を見せず、「慰安婦」問題が各勢力の政治的論争の名分として動員される過程で、生存者が前面に立たされることもあった。運動を無力化し暴力の時代を正当化したい勢力は、生存者の記憶を主要な攻撃対象とした。「ポスト生存者時代」を目前に控えている現時点では、生存者を代弁するのだと声を高めているの存在や勢力も出現している。

このような状況で「慰安婦」問題を理解する前に、「知っている」と言ってしまった

り、「知りたくない」と耳を塞いでしまったりする人が、往々にして見受けられるのは非常に懸念される。暴力の時代を維持したい勢力の思惑どおり「反知性」の逆流に飲み込まれる可能性が高いからである。

私は「慰安婦」問題を知ろうとすればするほど、さらに分からなくなるという気持ちと闘いながら学ぶ、韓国在住の40代女性歴史研究者の一人である。今も「歴史的責任」という途方もないテーマを前に、逃げ出したい気持ちと格闘している。その一方で、依然として日常に存在する女性嫌悪、性暴力の連鎖を断ち切るために、「慰安婦」問題は私たちが知っている歴史上から、さらに拡張され語られるべきだという切実な思いもある。そしてこの間、「慰安婦」被害の歴史像を理解し歴史を記録する過程で、生存者に依存し負担を背負わせてきたという省察もある。そのため、幾つかの点を検討し、共に悩み、被害者の視点を保ちながらも、被害者を前に立たせ言い訳するようなことのない日本軍「慰安婦」問題の歴史の記録の核となるものを見つけたい。

II. 日本軍「慰安婦」制度の被害実態に対するアプローチ

周知のとおり日本軍「慰安婦」制度は、15年間、日本が戦争を引き起こしたアジア・太平洋全域で実施され、その被害状況は時期別、地域別、政治状況別によって異なる。一定の法令の制定や改正ではなく、日本の公権力の「通牒」により、その都度「慰安婦」制度の政策方向と内容が決定したという点は、制度の隠蔽性と戦時状況に応じた可変的性質を物語るものである。

したがって「慰安婦」被害実態に関する研究は、研究者個人の専門研究と関係分野の研究者たちの共同研究が同時に行われる必要がある。戦争の性格と部隊移動の流れ、該当部隊及び将校の特性を理解し、総動員体制期における日本の戦時政策の影響を受けた日本本国、植民地、委任統治地域、満洲地域、占領地などの政治状況と、現地の「日本人身分である者」と親日勢力の動向に対する背景知識を持つ必要がある。日本と国際社会が互いに葛藤し対応し妥協していた関係も重要である。1870年代から国際社会は、日本の公権力の性売買管理制度が奴隷制度、人身売買制度であると指摘し、これに対応してきた日本政府の文脈の中で、日本軍「慰安婦」制度が登場した。

日本と国際社会の対立が露骨になった第二次世界大戦開始以降、戦闘地や占領地などで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を比較的容易に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ある意味で当然のことである。日中戦争以前や20世紀初頭から、日本が政治的に支配していた植民地、太平洋の島々、満州地域などでは、「慰安所」や「慰安婦」という検索ワードを用いても、関連資料をあまり見つ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しかし、日中戦争以前から上記の地域に連れてかれたという被害生存者は相当数存在した。口を揃えて話す内容は、誘拐や就職詐欺に遭い連れて行かれ、外出の自由はなく、軍人と警察が出入りする場所で日常的に暴力の中に置か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こが遊郭であったのか慰安所であったのか疑問に感じ、慰安所であることを証明しようと質問する前に、その質問がなぜ重要なのか、質問をする者とそれを見守る者たちはまず自問自答するべきである。

「慰安婦」問題が植民地犯罪、戦争犯罪、女性嫌悪犯罪として提起されてから30年が経過した現時点でも、真相究明すべき被害実態に関する研究は未だに途方もなく多い。それぞれの被害状況と原因を究明すれば加害主体は謝罪なり反省なりをするだろうし、市民社会は時空間を飛び越え私たちの日常に関連している歴史的事件を、歴史の流れの中で顧みて再発防止に努めることができる。「慰安婦」被害実態に関する研究の難しさや不十分さについては、この間何度も指摘があり、資料集も複数冊出版されてきた。これからは、別々に、もしくは一緒に、各々の研究に集中し、そして額を寄せ合いながら被害者を取り囲んできたマトリックスの全貌を明らかにし、また解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には先行研究と周辺研究に対し忠実な検討と体系的で根気強い研究計画がなによりも必要となる。

III. 被害調査はどのように行うのか

「慰安婦」被害者について調査を行うことは非常に重要であると長い間考えてきた。私の考えを聞いた数名の日本人研究者は、「誰が慰安婦であるのかを見つけ出すことは重要ではない。重要なのは戦時性暴力のシステムにおける加害構造を明らかにすることだ」と助言した。その考えに同意しながらも、「慰安婦」被害者を探し出すことをや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日本の公文書に軍関連「酌婦」、「特務要員」、「慰安所従業

部」、「芸娼妓」に分類された女性たちのリストを作成し、軍人と慰安所管理人の回顧録に登場する店と女性の個人情報を取りまとめ関係名簿などに記載された「慰安婦」被害の推定者をリストに追加した。

被害者リストの作成に執着するようになった背景には、2005年から満4年間勤務していた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の経験が大きく作用した。戦時性暴力被害(推定)者のうち、すでに逝去した者や行方不明者を家族にもつ人々は、少し複雑な状況だった。被害者を憐れに感じつつも十分に見守ることができず、時には恨んでいた歳月に罪悪感を抱いており、被害者が経験した共同体内の「恥ずべき存在」という視線から家族全員が逃れることのできない日々を悔しさを感じていた。彼らは被害者の慰労と家族の名誉回復、そして「補償」を受けるために、被害者が国家の認定する「慰安婦」被害者として登録されることを望んだ。しかし、徴兵や徴用とは異なり、当事者が直接記録したり語ったりしない限り「慰安婦」被害事実を確認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最終的には被害を申告した者の大半が「判定不可能」状態として取り残された。

戦時性暴力被害者をめぐって起きている矛盾に溢れ奇妙な状況、被害者は被害を隠そうとするも共同体はそれに気づき二次加害を犯し、家族たちは被害者にそれとは異なる加害を犯す一方、自身が被害を受けることもあり、加害主体は介入を隠蔽するために当時の公娼制度下の人身売買メカニズムと総動員体制、そして民間人を活用したのに、被害者がその共犯者を証明できなければ被害事実の確認ができない状況に問題意識を強く感じた。そして2000年代半ばの時点で、政府に「慰安婦」被害者として登録されることが「名誉回復」と考えている家族に対し「判定不可能」と応答することに責任を感じた私は被害者リストの作成に没頭することになった。しかし強制動員真相究明委員会も解散となり、動員前後の被害者を直接見ていた家族も徐々にこの世をさり、今となっては語ることができない生存者の「言葉」を並べて、自分の立場を正当化する人々が散見される状況において、被害者の把握が一体どのような意味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のか、不安を感じていることもまた事実である。さらに被害事実を確認したいならば被害者/家族よりも、募集業者ネットワークや総動員体制下での動員者たちを調査すること、さらには慰安所の業者を調査すること、もっと言うならば業者を選定した軍や現地領事館の

警察/憲兵を調査すること、そして「慰安婦」の移動過程で各種証明書を発行した人を調査することが、より必要となるだろう。しかし個人情報保護という名目上、主要人物たちの人的情報が黒塗りにされる場合が多く、他人の調査や研究内容を引っ張り出して確認することも難しく、私の調査内容を発表することも容易ではない。

体系的な調査システムがなく、歴史的責任レベルでの公共性に対する合意もない状況で、一時的な調査や研究が散発的に行われている状況であるがゆえに、重要な情報は匿名化され、成果物は非公開されデータは権力化される。したがって誰かの研究や調査を尊重するという前提の下で互いの成果をクロスチェックし、日本軍「慰安婦」犯罪に関与したこれらの足取りを一つ一つ共有できる調査—研究システムが必要である。人権侵害の可能性をなくしていくことも重要だが、個人情報保護という名分に隠れている共犯者の足取りを隠してしまってもいけない。これは批難したり処罰したりするためではなく、私たちの中の共犯者を省みるためにも重要なのだ。そしてどのような事情があったとしても、自己の利益のために他人を利用する人は、必ず代価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実を私たちが再確認するためにも必要である。

IV. 私たちが共に行うべき日本軍「慰安婦」の歴史記録

ポスト生存者の時代に対する懸念は、逆説的にこの間「慰安婦」問題解決の過程において、私たちが被害者に多くの部分を頼ってき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被害者が「慰安婦」として動員され慰安所生活を強いられ、戦後、放置される過程で情報からは排除され、周辺にいる人々との対等な話し合いすらできなかったのにも関わらず、私たちは被害者に被害内容を聞き、時には証明することが可能かどうかとも問うてきた。

しかし日本軍「慰安婦」制度の真相究明は、そのような戦時性暴力のシステムを企画し作り上げた主体とその関係者の役割であり、文献資料は被害者を他者化したり隠蔽したりする方法で生産されてきたため、必ず批判的に読むべきである。「慰安婦」歴史の記録の意味は、被害者が自律的な生活を送ることが不可能となってしまった権力、社会、関係を再び作らないところにある。歴史の記録の方法と方向は、被害者の語りから

見つけ出すべきだ。被害者の言葉は状況に応じて変化したり特定の言葉を繰り返したり、または拒否することもあり、関係性によっても意味が変わることもある。被害者の語りは、私たちの前に立っている生存者からだけではなく、周辺の人々の記憶、空間の痕跡、資料の批判的な読解からも聞こえてくる。ポスト生存者の時代において性暴力の加害構造と被害者が経験した苦痛が続く限り「慰安婦」被害者の語りはこれからも私たちに訴えかけるだろう。「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歴史の記録とは、私たちはその語りを積極的に聞き、共に新しい物語を作っていくことで可能となる。

セッションⅢ

私たちが新たにつくって いく30年、未来世代の討論 ポスト被害者時代と責任

司会：康誠賢(聖公會大学教授)

30 Years of Solidarity,
Another 30 Years of Hope and Peace!

Korean Council 30th Anniversary Symposium & Ceremony
Date: 10AM-6PM Saturday, November 14, 2020

30th Anniversary Symposium

Session I. History of the 30 years of movement by the Korean Council - The path we created and walked on

Moderator: Chung, Chin-Sung Professor Emeritus of Soc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Na-Young Chair of Board, The Korean Council

Beginning of the Korean Council movement, and 30 years of movement with the victims

Organizaions in Korea and Abroad: People who stood with victims

Korea Anyi, JeungSeun, Representative, Daegu Citizen's Forum for Halmuni

Lee, Kyonghee, Representative, Masan, Changwon and Jinha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Song, Doja, Representative, Tongyeong & Geoj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im, Dae-wol, Chief curator, House of Sharing / The Museum of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Japan Yang, Chingja, Co-representative,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U.S. Lee, Jung-Sil, Chairman,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Australia Vivian Pak, Former Co-chairperson,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Session II. Our responsibilities in the post-victim era

Moderator: Yang, Hyuna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Kim, Chang Rok,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Legal Responsibility'

Nam, Kijeo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The victim/survivor-centered approach in the post-survivor era: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Park, Jung-Ae,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the post-victim era

Q&A

Session III. For another 30 years to come, future generation discussion

Moderator: Kang, Sung Hyun, Assistant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Results of the 30th anniversary survey

Video: What doe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mean to you?

Future generation roundtable

Kim, Tae-Jung, My Sister's Home

Choi, Na Hyeon, Korea-Vietnam Peace Foundation

Choi, SungYong, Ph.D. student, SungKongHoe University Research of Asia Culture

Choe, Yerin, Seoul National University

30th Anniversary Ceremony

Video: 30 years created by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and 30 years for us

Session I. History of the 30 years of
movement by the Korean Council
– The path we created and walked on

Moderator: Chung, Chin-Sung

Professor Emeritus of Soc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Movement

30 years of history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Korean Council 30th Anniversary Symposium

November 14, 2020

Lee, Na-Young (Chair of Board of the Korean Council,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1

1. Breaking the Long Silence!

2

1 | Breaking the Ice of Long Silence!

Background

- 1) Professor Yun Chung-ok: Sense of guilt and responsibility towards women who lived through the same period and rage upon perpetrators
- 2) Professor Lee Hyo-jae: Founder of Women's Studies and Sociology of Division in Korea
- 3) Christian Women centered on <Korean Church Women United>
- 4) Development of the Korean women's movement and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along with democracy movement in 1980's

3

1 | Breaking the Ice of Long Silence!

"1943, I think it was November. Freshman of the university, I must have been around seventeen then. From high school times, my teacher used to tell me continuously to apply as a nurse. It meant to go to the Labor Corps. By the time I entered university, it was even worse. Ordinary men were to be taken randomly as forced drafts. Male students were ordered to be student soldiers and female students to be Labor Corps... By the second semester after the summer vacation, the situation grew intense. One day, they gathered us, the freshmen, into the basement. It started feeling strange. A man in military uniform and someone else came in, and they handed out squared papers. Printed words were filling up the page tightly, but they did not give us time to read. Instead, they gave us the ink pads and told us to stamp our thumbprints. They would not let us read the contents, and they just gathered the papers with thumbprints and went out. We had no idea what was on that paper."

(Narrator: Yun Chung-ok, Source: *20 Years of Wednesday*, page 110).



Background

- 1) Professor Yun Chung-ok: Sense of guilt and responsibility towards women who lived through the same period and rage upon perpetrators

4

1 | Breaking the Ice of Long Silence!

Background

2) Professor Lee Hyo-jae: 1st Generation Korean women's rights activist, Founder of Women's Studies and Sociology of Division in Korea

- 1987~1990** First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Women Link
1987~1998 Board member of the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Chair of Board of the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s United
1990~1992 Representative of th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1991 Co-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he observed that "establishment of women's humane sovereignty ha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the recovery and establishment of the sovereignty of our *minjok* (nation)" and focused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the "task of the times in attempt of recovery of women's human rights and national self-reliance." Moreover, she perceiv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imes of colonization and the most symbolic issue that resulted from failure to settle the responsibilities. She emphasized that we should remember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but also our responsibilities in failing to settle with the "pro-Japanese forces."

5

1 | Breaking the Ice of Long Silence!

Background

3) Christian Women centered on <Korean Church Women United>

From 1970's objected the *Gisaeng* tourism (sex tourism), supported atomic bomb survivors, anti-tear gas movement, democracy movement

Experienc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activism accumulated under the Yushin System

First to highligh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By President Chun Doo-hwan's visit to Japan in 1984, issued a statement, demanded resolution of the issue, and stated the call for apology from Japan the first time

"To make friendly relations among the two countries [Korea-Japan], as an issue to be settled as soon as possible, Japan should state an official apology regarding the issue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One of the colonial exploitation policy applied to the Koreans by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was the mobiliz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omen were forcibly mobilized under the name of "comfort women," sent off for military sexual slavery, where they were miserably trampled as sexual instruments... It cannot be overlooked like this. We must receive an apology." (16th regular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Korean Church Women United)

6

1 | Breaking the Ice of Long Silence!

Background

〈Women and Tourism Culture〉 International Seminar

Hosted by the Korean Church Women United,
April 21~23, 1988, held at Jeju Island

-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Japan exploration team presented their results (Yun Chung-ok, Kim Sin-sil, Kim Hye-won)
- Rais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Establishment of *Chongshindae* Research Committee under the Korean Church Women United
- * *Chongshindae* Research Committee independently established itself as *Chongshindae* Research Group in July 10, 1990 (now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Chongshindae*)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Japan exploration team (Yun Chung-ok, Kim Sin-sil, Kim Hye-won) / Donated by Kim Hye-won
〈Women and Tourism Culture〉 International Seminar / 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7

1 | Breaking the Ice of Long Silence!

Background

4) 1980's Development of the Korean Women's Movement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Recognizing the contradictions of Korean society that oppress women as stemming from division by foreign powers, oppression of basic freedom by military dictatorship, and economic policies that oppress the people."

8. Stop *Gisaeng* tourism (sex tourism) policy that commercializes women.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Founding Declaration (March 8, 1987, sourc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websit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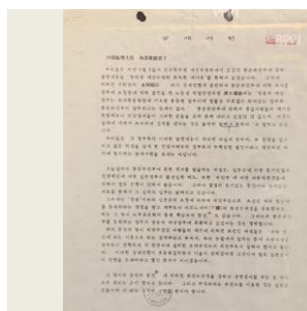
2.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9

2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Condemn the Japanese Government's absurd remarks!

- 1) At Japan's House of Councillors Budget Committee, lawmaker Shoji Motoookka, member of the Socialist Party, demanded Japanese Government's investigation on issues of forced mobilization an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National Mobilization Ordinance has no relation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Tsuta Shimizu, the Director of Occupational Security at the Ministry of Labor, made remarks arguing tha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ere in the hands of private agents."
 - "Japanese Government has never intervened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June 6, 1990 Minutes of the Budget Committee of House of Councillors of Japan
- 2) Protest letter (open letter) to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organized by the *Chongshindae* Research Committee
- 3) 37 women's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Church Women United (KCWU), joined forces to hold a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7, 1990, to announce the open letter to the Japanese Government on its absurd remarks.



〈Official Letter〉 sent to the Prime Minister Toshiki Kaifu (海部俊樹) of Japan/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Delivering 〈Open Letter〉 to the Japanese Embassy, Oct 17, 1990/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10

2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Signboard hanging ceremony of the office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November 16, 1992/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1) After the delivery of the <open letter>, 37 women's groups agreed to establish a council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2)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omposed of 37 member groups was established (November 16, 1990): To investigati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raise public awareness, call for fulfillment of 6 demands in the <open letter>, and prevent recurrence of the tragic history

11

2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The emergence of victim-survivors

- 1) The first witness Kim Hak-soon's (金學順) press conference (August 14, 1991)
- 2) <Chongshindae Hotline> established (September 18, 1991)
- 3) Discovery of relevant historical records: historian Yoshiaki Yoshimi(吉見義明) found Imperial Japanese Army documents, U.S. military reports, etc.
- 4) Publication of Victims' Testimonies
- 5) Invigorated movement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truth



The emergence of victim-survivors

<Chongshindae Hotline> opening ceremony, September 18, 1991/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12

2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Wednesday Demonstration

- 1) Wednesday Demonstra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2) Began by protesting the absurd remarks of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Koichi Kato

Victim support activities

- 1) To ensure the victims' humane lives
- 2) Fund-raising campaign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livelihood fund>
- 3) Enactment of <Act on the Support of Livelihood Stability for Former Comfort Women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legislated on (June 1993).



First Wednesday Demonstration, January 8, 1992/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Donation delivery ceremony, July 26, 1993/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13

2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Leading the global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through transnational solidarity

- **Asian Solidarity Conference** (from August 1992, conducted 15 times for 20 years)
- **UN activities** (Participation in the UN Subcommittee on Human Rights, August 1992, Hwang Geum-joo attended)
- Attendance at **the Vienna Conference on Human Rights** (June 1993, Kim Bok-dong attended, encounter with Jang Soo-weol of North Korea)
- Attending **the Beijing World Conference on Women** (September 1995)
 -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s Coomaraswamy Report (1996) and the U.N. Subcommittee on Human Rights' Gay McDougall Report (1998)*
- Activities at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North-South Korea Solidarity**
- **2000 International Tribunal** (December 7 -12, 2000, Tokyo)

First Asian Solidarity Conference, August 1992/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Participation at the Subcommittee on Human Rights of the United Nations, August 1992/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Attendance at the Vienna Conference on Human Rights, June 1993/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14

3.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15

3 |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Wednesday Demonstration expanded to a space of hope and solidarity, succession of responsibilities and education

: Space of hope and solidarity beyond sorrow and mourning

: Space where victims and international citizens meet

: An open space calling for human rights and peace

- ✓ Image of 'Butterfly': Liberation, Regeneration and New Life
- ✓ Meaning of Yellow and Purple: Hope and Solidarity, Nobility



Wednesday Demonstration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The 1,400th Wednesday Demonstration, August 14, 2019/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16

3 |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The Statue of Peace (Peace Monument)

December 14, 2011, the 1000th Wednesday Demonstration

a statue expressing victims' anger, sadness, pain, and hope in its complexity

imagining "If it were me," "if it were my daughter" (Kim Seok-yung)

: not only a commemoration or a simple memorial but an emphasis on memory and succession

: Emphasizing agency beyond victimhood

: An interactive form that allows citizens to "imagine history" and "communicate with people"



17

3 |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A base for memory and education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Opening (May 5, 2012)

"There should not be more victims like us again."

: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data related to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omen's human rights, and peace.

: Space of memory and transmission through exhibition, research, and education



Launching of the Museum Construction Committee, December 16, 2004/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Museum <Building the foundation of hope> event, March 8, 2009/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18

3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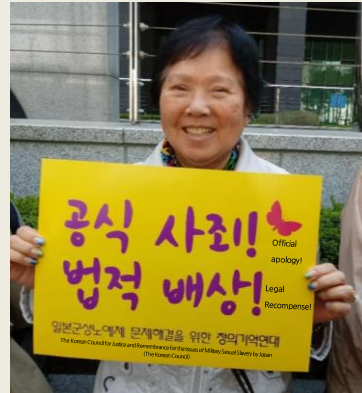
U.S. Military Camp Town Women's Human Rights Alliance (2012)

Collaboration of Durebang, Sunlit Sister's Center, U.S. military camp town women's human rights groups, lawyers, researchers and etc.

May 2009, Gil Won-ok halmoni visited the U.S. military camp town at Anjeong-ri

- Recognition of solidarity, mutual growth, structural similarity and continuity among women who have suffered similar pain: the intersection of colonialism and war, violence against women, imperialism and militarism, local patriarchal culture, gender and class, and racism.

→ Women's Solidarity for Peace and Human Rights, and Postcolonialism



19

3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Victims to Human Rights Activists,

<Butterfly Fund> (March 8, 2012, International Women's Day)

: Kim Bok-dong and Gil Won-ok

"Please support people who have similar pain like us"

: Support for the survival and livelihood of women and children affected by wartime sexual violence in DR Congo, Uganda and Vietnam.

: The first beneficiary was Rebecca Masika Katsuva from DR Congo

- ✓ Victim-survivor to another victim-survivor, subaltern to subaltern, To the marginalized among us → movement transcended to a higher level



Press conferenc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Butterfly Fund, March 8, 2012/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The first beneficiary of the Butterfly Fund,

Rebecca Masika Katsuva /

Collection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20

4. Moving forward

21



22

Movement for Resolution "with" victims from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Anyi, JeungSeun

Former Representative of Daegu Citizen's Forum for Halmuni

1. From Women's Association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ith the huge wave of democracy movement after June 1987, a women's organization formed in Daegu, where the culture of conservative patriarchal culture remained strong. This organization, Daegu Women's Association, called for "women with agency, equal society."

Daegu Women's Association formed the Committee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hereinafter Chongdaewi) in February 1995, which provided welfare support to victims in the local area and campaigned against the Asian Women's Fund.

As more citizens became awar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people asked to accompany Chongdaewi's visits to halmonis, and members of various civic groups participated in Chongdaewi's events. The need for a new organization that could lead various activities with the widespread participation of Daegu citizens emerged. Citizens who had previously shown interest held several preparatory meetings and founded Daegu Citizen's Forum for Halmuni (hereinafter Citizen's Forum for Halmuni) on December 29, 1997.

2. Activities of Citizen's Forum for Halmuni

1) Welfare support for survivors

Citizen's Forum for Halmuni provided support to Hun halmoni, who

could not return home after the war and lived in Cambodia until she was coincidentally found. Furthermore, we campaigned to bring Cho, Yoon-ok halmoni for a visit to South Korea, who was a “comfort women” victim in Hunchun who had spent her childhood in Daegu and could not forget her hometown.

Halmonis undergo comprehensive medical check-ups at Kwak’s Hospital, which has been providing medical support for “comfort women” survivors since August 1995. They are receiving full medical support as needed from cold medicine and medical shots to surgeries and hospital treatments.

Furthermore, we support social welfare of halmonis through spring picnics, fall picnics, and peace and human rights camp programs. We continue to organize birthday celebrations, check-ins during lunar new year and mid-autumn festival holidays, and monthly visits.

2) Publicity activities and movement for resolution

① Publication of survivors’ biographies

Beoryeojin joseonui cheonyeodeul [The abandoned virgins of Chosun] (Hun halmoni, 2004)

Beomajeonseon ilbonguntwianbutmunokju [Burma Battlefiel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on Ok-joo] (Moon, Ok-joo halmoni, 2005)

Gagosipeun gohyangeul nae ballo georeo mon gago [Could not walk back to the hometown I longed to return] (Cho, Yoon-ok halmoni, 2007)

Nae sogeun amudo moreundakai [No one knows what it’s like inside me] (Kim, Soon-ak halmoni, 2008)

Naega eotteoke mareul haeyo, eomui gaseume mon bageullakko [How can I speak, I would put a nail in my mother’s heart] (Kim, Ok-seon halmoni, 2009)

② Publication of pressed flower art book

Halmae sarange ppajida [Halmae, falling in love] 1, 2

③ Furthermore, Citizen’s Forum for Halmuni organized various activitie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well as on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Activities on the Committee for the Enactment of Special Act to Find the Truth of Compulsory Mobilization Damage under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 signature campaign, meetings with lawmakers, country pilgrimage urging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demonstration commemorating August 15th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 *Testimonial event featuring Mr. Kubota, a former Japanese soldier

- *Won the litigation to disclose documents on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 *Passed Daegu Metropolitan Council resolution for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July 2009)

- *Filed constitutional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held press conference (Won the case in 2011)

- *Daegu Citizen Walk-a-th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Organized 7 times between 2010 and 2016)

- **Gut* (Korean traditional ritual) for alleviating the *han* (trauma)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Public lecture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Public screening of the documentary “My own breathing”

- *Culture trip to Jirisan with halmonis

- *Co-organized events for the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 *Recruited and organized activities for university student supporters at Heeum

- *Event for the Memorial Day for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June 6) - visit to halmonis’ graves

- *Establishment of Daegu Action for annulment of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and signature campaigns

- *Heeum summer concert

- *Public lecture featuring Professor Yoshimi Yoshiaki

- *Attendance in events and meetings for the Korean Committee and International Committee for Joint Nomination of Document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o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3)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ies

Citizen’s Forum for Halmuni has actively engaged and stood in solidarity with various local women's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king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Attendance in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for Resolution of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Solidarity with Fukuyama Group that supports Kanpu Trial (関釜裁判を支える福山連絡会; the Pusan ‘Comfort Women’ and Women’s Labor Corps members vs. Japanese Government Lawsuit) -Attendance at Hiroshima High Court trial and participation in the reporting event

- *Established Daegu action base for rejection and reexamination of Japanese history textbooks and organized activities, including a protest visit to Hiroshima

- *Invited Hiroshima teachers' union and Daegu branch of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memorial statue for victims of conscripted labor for Kobo Dam at Cheonan National Cemetery for Overseas Koreans

- *Participated in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17 people)

- *Organized a joint Korea-Japan seminar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 *Co-organized candlelight vigil against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Iraq

- *Organized Daegu civic group activities condemning the authorization of Japanese history textbook by Fusosha publishing, which distorted history

- *Attended meetings in Pyongyang and the Philippines for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 *Organized 2004 joint Korea-Japan action for peace in Northeast Asia

- *Lecture at Hiroshima for Joint Korea-Japan Testimonial hearing events

- *Korea-Japan youth peace and human rights camp at Hiroshima

- *Support and visit to victims and civic groups in East Timor

- *Attended the 1st Museum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meeting

3. The construction of Heeum Museum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 Various activities to fundraise for the museum

- ① Participa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 ② Donation from author Kwon, Yoon-deok for royalties from picture book *Flower Halmoni*
- ③ Regular donations and donations from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 ④ Various fundraising campaigns
- ⑤ Income from goods sold by Heeum brand

2) Process of establishment

Kim, Soon-ak halmoni, who passed away in January 2010, donated half of her lifelong savings of 54 million won (approximately 48,000 USD) for museum establishment, which was foundational to fundraising for the museum. Inheriting the will of Kim, Soon-ak halmoni, who said "don't forget me even if I die," other victims and families also joined the fundraising efforts.

As we looked into getting a loan for the site, we realized that the loan could not be made in the name of the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but can be done in the name of a foundation. We finished registering our group as a foundation, and with the income from Heeum brand that launched around that time, we made our first purchase for the museum site in July 2013.

In December 2013,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decided to support f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useum. The second purchase for the site was made, which allowed us to secure a 214.45m² site with a Japanese style two-floored wooden house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April 2014, we created an executive committe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Museum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formed an advisory committee, construction team, contents team, and archive team to begin detailed preparations and discussions. In August of that year, we held "Good to meet you, museum" event to mark the start of the construction and opened the Heeum Museum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on December 5.



4. Blooming their hopes with you - Heeum

We created Heeum brand with blooming project team from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The name combines the first and last characters from the phrase “Blooming their hopes with you” in Korean, and the phrase was translated into English as “Blooming their hopes with you.” The first item sold at Heeum was a silicon bracelet that did not contain halmoni's pressed flower artworks. We included the abovementioned English phrase and the phrase “Dignity and human rights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in Korean. We also created various daily goods including eco-bags, handkerchiefs, pouches, and T-shirts with the halmonis’ pressed flower artworks printed.

Heeum's goods are designed with motifs from the pressed flower artworks of the late Kim, Soon-ak and Sim, Dal-yeon halmonis. We focus on creating everyday goods so that people can acces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hich can be dark and heavy, more easily in their everyday lives.

Since then, Heeum brand has spread awarenes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Citizen’s Forum for Halmuni, and contributing to the site purchase for the museum and its reconstruction. The brand’s name is preserved in the name of the museum, Heeum Museum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s of December 2015, when the museum opened, there were over 150,000 Heeum-ers (people who purchased Heeum goods) both domestic and abroad.

5. Special exhibitions at Heeum Museum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following special exhibits have been held at the museum’s special exhibit room, located in the second floor.

*We remember you #1, Ok-joo (November 26-30, 2016)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Asia: East Timor (August 10-November 4, 2017)

*Longing heart (May 23-August 11, 2018)

*Their courage, our #WITH_YOU (August 14-November 30, 2018)

*We remember you #2 Kim, Soon-ak (August 14, 2019-)

The museum also organized *Kkotmajung*, an experiential program in which participants can make pressed flowers, in a regular section (54

participants) and ad-hoc sections (165 participants) in 2018. In February 2019, we collaborated with a local theater company to create and perform a play called *Halmae's Room* with funding from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historical records memorial project. We also created a documentary about Kim, Soon-ak halmoni called *Comfort* and organized a preview on August 14,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is film, directed by Park, Moonchil, received the documentary award at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is year.

Looking back on the movement to resolv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Changwon Area

Lee, Kyonghee

Representative of Masan, Changwon and Jinha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I. Current and past movements to resolv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Changwon area

1. Organizations and their movements to resolv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Masan, Changwon and Jinhae area

▶ 1998 ~ 2003: South Gyeongsang Civic Association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경남정신대문제대책시민연대)

-In 1998, from Hun halmoni case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Changwon city, an organization was formed by women's human rights organizations, civil society, and the press

-Through debate and cultural performances (plays and dancing), it actively informed the public abou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t also conducted investigations regarding the whereabouts of the victims who were still in China, helped them return home to Korea, and to restore their Korean citizenship. (Lee Ok-seon, the late Ji Dol-yi)

-Recorded victims' testimonies



▶ 2004 ~ 2006: Gyeongnam Women's Association United Comfort Women Team activities

- : Supported the victims in Masan, Changwon, Jinhae area
- Supported 6 victims in total: Lim*Ja, Kim*Jeon, Lee*Soon, Kim*Ju, Kim*Soon, Kim*Seon
- Formed teams comprised of three volunteers each
- Visited and befriended the victims, learned about their how they were doing, accompanied them on the trips to the hospital or excursion. Also visited them on holidays, their birthdays, and offered funeral support

▶ 2007 ~ Current: Masan, Changwon and Jinha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 Main activities

- Victim Support: Visits, conducting programs to assure their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health, improving the victims' living facility, funeral support, helping them take baths, accompanying them when they cannot travel by themselves
- Late Kim○Soon, Im○Ja, Lee○Soon, Kim○Jeon, Lee○Soon, Park○Ja, Kang○Ah, Kim○Seon, Kim○Ju, Kim○Ae
- Raising awareness and informing the local community: Lectures, plays, movies, exhibitions, street-talk shows
- Campaigns and signature campaigns: Movement to urge the provincial council to adopt a resolution, campaign to send postcards to the Japanese diet to enact relevant laws, and South Gyeongsang Action for the annulment of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 Education: Teenagers' history trip for women's human rights, action group for restoration of halmoni's dignity, *Flower Halmoni* book recital with author, Golden-bell contest, art project contest, performance contest, and university student camp with halmonis
- Recording and testimonies: Accompany victims to Japan for testimonies, and film the victims' testimonies
- Commemorations: Memorial ceremonies for the victims, civic movement to protect and install the memorial monuments

II.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Masan, Changwon and Jinha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Activities

1. Support for victims from nearby and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By helping and supporting victims from nearby within the local area, we ensured that they have no discomfort in handling day-to-day tasks and are mentally and physically healthy. Local resources are also utilized, such as public health center, community welfare center, civil organizations, and schools.

2. Sharing and communal agency of the local community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Forme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relevant institu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local area by organizing various activities such as victim support, so that they are co-agents, not objects of promotion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Examples of local participation in the movement

- Memorial service (annual): around 30 local civic organizations participate

- Memorial monument installation (2013~2015): around 70 local civic organizations participate

- Women's human rights trip and creative exhibition with local artists (2014): The Korean People's Artists Association South Gyeongsang branch, Gyeongnam Art Museum,

- Teenagers' Art Contest (Joint award) (2014): local pres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University of Changwon, etc.

- 'Statue of human rights, autonomy, and peace' Keepers meeting (2015~): Comprised of 20 members from various local organizations

- Teenagers' participation (2013~ current): joint efforts with the teachers

- Supporting victims overseas (2016, Lee Soo-dan): Fundraised from the local community to support victims in China (Paying them visits and sending adult diapers)

3. Glocalization: From community to the world

-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not just Korea’s issue, but public history and task that Asia and the global community must address together
- Art performance in Paris on the topic of wartime sexual violence (pain and hop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2018)
- Teenagers’ International Contest (2017~2020)
- Youth International Forum (2018~2020)

III. Concerns and Tasks Ahead

1. The lack of information and resource sharing

- Around 10 victims in the region were supported, yet their initial information are not being shared

2. The lack of an organization of the victims and lack of support from the families

- The victims themselves have not organized their own association, and therefore, cannot unify their opinions
- As the victims are of advanced age, they cannot move or communicate freely, and the families are not willing to get in touch
- The lack of and challenges regarding activities on difficulties, conflicts, and recognition of families and bereaved families, which are crucial for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of the victims

3. How should we overcome the situation since May 2020?

- Need joint strategies by organizations to respond to the attacks of historical denialists in Korea and abroad
- Share information and matters at hand

4. How should we interpret and apply “victim-centered approach”?

- Unlike the normalized image of victims as those who voice their opinions confidently as women’s human rights activists amid pain and wounds, some victims are in completely different situations. What must we do to continue our work without isolating them in the process?

5. Sustainable movement

- The first-generation activists are disappearing, the second-generation activists are growing old, and there aren't enough third-generation activists
- Must find ways to inspire and discover leadership for the future

6. Lack of interest in the movement and relevant research

- Social disinterest in the formation, operation, and policy of organizations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lack of relevant research
- We must conduct the research ourselves

Tongyeong & Geoj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Movement for Resolution and Future Directions

Song, Doja



1

Tongyeong & Geoj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History

August 15, 2002 Establishment

2002~2018 Implemented support programs for welfare, psychological healing, and emotional stability of victim-survivors

2003~2017 Organized annual peace and human rights festival on justice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2009~2010 Campaigned to adopt a resolution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t South Gyeongsang Provincial Council

2010~2016 Organized public campaign to send petition postcards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2011,2015 Organized a human tie for justice performance with 1000 citizens in commemoration of the 1000th Wednesday Demonstration

2012~2013 Co-published history education materials on the biographies of victim-survivor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first in the country

April 6, 2013 Established a "justice memorial statue" for redress and human righ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2015~2016 Conducted the first full-scale investigation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aterials in South Gyeongsang area (Tongyeong, Geoje, Gosung, Jinju, Sacheon), published an investigative report

2

Tongyeong & Geoj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History

2015~ Campaigned for the registra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emorial documents (Voices of The Comfort Women) as UNESCO Memory of the World

2016~ Organized annual Citizen Remembrance Action on the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arch 2017 Researched materials in China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living in South Gyeongsang area (Wuhan, Nanjing , Shanghai)

2017~ Organized annual public lectures featuring expert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2018~2019 Korea-Japan Local Communities Connecting Records and Memory - Held exhibition tour in Japan, symposium, and dark tour

2018~ Co-organized the establish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useum in South Gyeongsang area

2019~ Launched a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useum in South Gyeongsang area and co-lead the campaign for establish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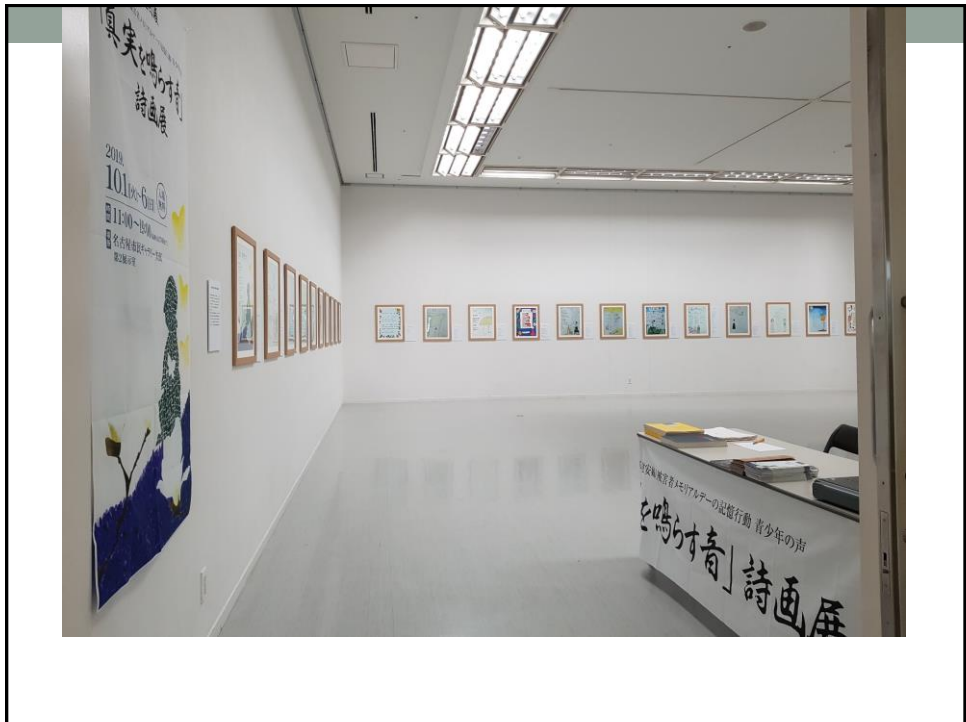
3



4



5



6

Tongyeong & Geoj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The reason the movement could be established in Tongyeong and Geoje area was

“many survivors lived in this area”

- Opening of Tongyeong Port in the early 1900s. Development of a golden fishing base known to be top 3 in the world and sea route.
 - ⇒ Early development of marine transpor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ishing ships, commercial ships)
- Early establishment of Japanese group residence areas ⇒ Agencies were developed with the introduction of Japanese licensed prostitution
- Full mobilization for war in 1938 ⇒ Early enactment of “comfort women” mobilization
- Easy transportation to Busan, where the mobilized women were gathered ⇒ Mobilized to Japan, China, Southeast Asia, etc.

7

Movement to record and remembe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South Gyeongsang area

- Movement to establish memorial sculptures (memorial statues)

- 2007 ‘Peace Tower’ in Hadong
- 2013 ‘Justice memorial statue’ in Tongyeong
- 2014 ‘Statue of peace’ in Geoje
- 2015 ‘Statue of peace’ in Namhae
- 2015 ‘Statue for human rights, autonomy, and peace’ in Changwon
- 2016 ‘Bomi’ in Sancheong
- 2017 ‘Statue of peace’ in Kimhae
- 2017 ‘Peace memorial statue’ in Jinju
- 2018 ‘Memory and hope statue’ (Gyeongnam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Changwon
- 2018 ‘Statue of peace’ in Kimhae
- 2019 ‘Statue of peace’ in Haman
- 2020 ‘Statue of peace’ in Sancheong

8

Tongyeong & Geoj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Tasks for post-halmoni era

- Record victims' voice
- Investigate, research, and record history of damage in local areas
- Record the story of victims who are unknown
- Inherit and expand victims' voices
- Resist against historical revisionism in Korea and Japan, strengthen justice



Unremitting record, politics of memory ⇒ From official history to public history!



Hub for human rights, equality, and peace education *Establish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useum!*

Realize values of justice, gender equality, and peace by continuing politics of recording and memory

House of Sharing'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House of Sharing &
The Museum of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Kim, Dae-wol

1

Introduction

Kim Dae-wol

- Kookmin University Korean History doctoral coursework completed
- Former Education Editorial Chief at Bookak History Academy
- Former Kookmin University Museum curator
- Current House of Sharing steering committee member
- Current House of Sharing & Museum of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chief curator

2

Contents



1. House of Sharing is....

2. House of Sharing's Yesterday and Today

- Activities of House of Sharing
-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by accepting victims
- Violation of victims' human rights
- Lack of expertise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3. House of sharing's Tomorrow

- Towards House of Sharing truly for halmonis
- Academic research and exhibitions on halmonis' lives
- Bringing House of Sharing to the arms of citizens

3

1. House of Sharing is...

4

1. House of Sharing is...



Toechon, Gwangju-si,
Gyeonggi-do



나눔의 집

-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the House of Sharing in 1992 under the justification of supporting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comfortable life.
- Started in Seogyo-dong, Mapo-gu, Seoul in 1992 and was established in Toechon, Gwangju-si, Gyeonggi-do in 1996.
- Museum of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opened in 1998.

5

2. House of Sharing’s Yesterday and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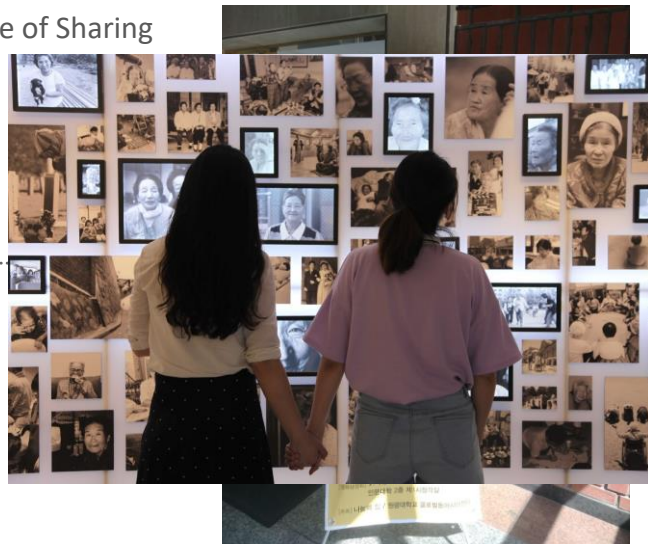
6

Activities of House of Sharing



7

Activities of House of Sharing



8

Activities of House of Sharing



9


2. House of Sharing's Yesterday and Today

10




11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produced by accepting victims



- House of Sharing, which was advertised as a 'comfortable shelter,' is merely a free nursing home.
- Based on standards for free nursing home, the House ranks in the **bottom 20% in the country**.



- The donations that people send are usually sent to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ouse of Sharing Social Welfare Foundation.
- Among the 8.8 billion KRW (7.8 million USD) fundraised in the recent 5 years, **only 200 million KRW (177,150 USD) was used on facilities for halmonis.**
- Among the 200 million KRW, **only 8 million KRW (7068 USD) was used directly for halmonis in the past 5 years.**



- The board members and executives of House of Sharing used halmonis as means of advertisement for individuals and for the Order.
- The board members has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a hotel-like nursing home after the death of halmonis using the accumulated donations.

12

Violations of victims' human rights

“

In the early stages, halmonis did not have major health issues and could freely go out or engage in activities

Afterwards, as halmonis' energy level declined, control over them started. As they started needing help of others when going out, **they were subject to more explicit control.**

Even when more than ten halmonis stayed at the House, **only one personnel provided nursing**, thus depriving them of appropriate medical service.

Halmonis attended more than 100 testimonies and Jogye Order events each year, but **they were not allowed to individually go out.**

”



13

Violations of victims'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House of Sharing] **publicly exposed** victims who did not want to reveal their personal identities and **used them as means of advertisement**

[House of Sharing] **damaged halmonis' possessions** against their will.

Executives repeatedly told staff members and volunteers that halmonis are “**getting spoiled**”

”

14

Lack of expertise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Does not even have records of halmonis who have lived in House of Sharing thus far
- Neglect halmonis' goods and keepsakes left after halmonis' death
- Lost and damaged nationally designated records



15

IN

국가인권위원회

Human Rights Violations,
Misuse of Donations

나눔의 집

IN

OUT

Argues that the issue should be **resolved** through Japanese Government's apology and reparations.

16

3. House of Sharing's Tomorrow

17

▮ Towards house of sharing for halmonis...

**Respect halmonis and families'
opinions as much as possible**



18

Academic research and exhibitions on halmonis' lives

1 Awareness of issues

- The “comfort women” issue in Korean society thus far has been focused on the movement.
- Halmonis were objectified as victims.



2 Research directions

- House of sharing focuses on: Victims' lives after the war ended
- Negligence of the Korean government
- Halmonis as seen in the perspectives of Korean society



3 Research Goals

- **Attend to the lives of halmonis themselves, not just as comfort women “victims”**
- **In doing so, diversify perspectives on the “comfort women” issue**

19

Bring House of Sharing to the arms of citizens

“ House of Sharing that anyone can visit easily and comfortably ”

Peace Road(Human Rights Camp)



Guest House



Connections to the Local Community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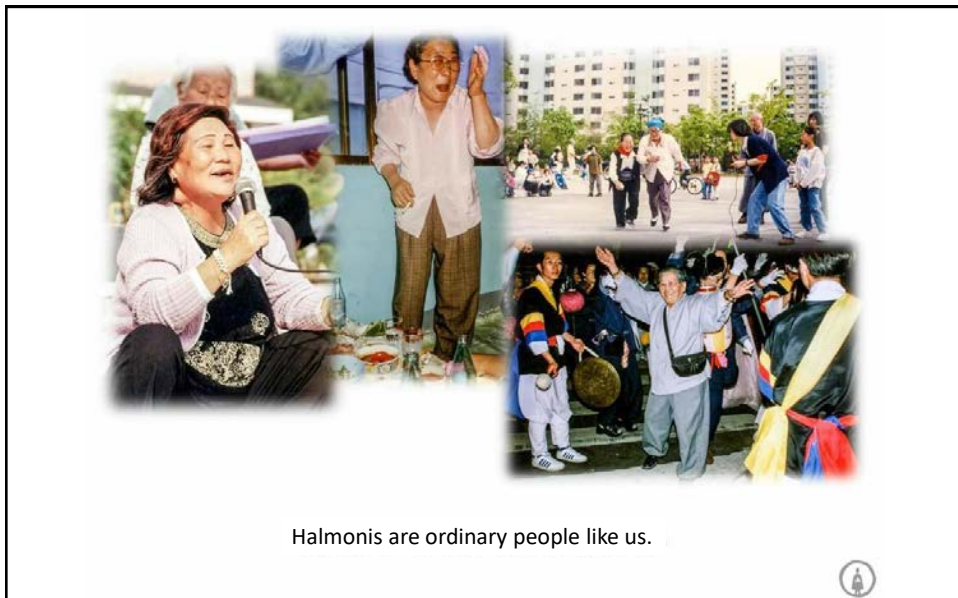
21



22



23



24



25



26

Thank you.

Report of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Yang, Chingja

Co-representative of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Japan Nationwide Action) was formed in February 2010. While the organization itself is only 10 years old, among around 30 member organizations, there ar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committed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ince the 1990s.

In Japan, the movement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tarted as a movement in the late 1980s, by Christian women, including Japan Christian Women’s Organization, who answered the call from Korean Church Women United. In December, a month afte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as formed in November 1990, Yun Chung-ok’s lecture in Japan broadened the issue to women’s movement. Groups supporting each trial were formed in Japan in turn, as a total of 10 lawsuits were filed in Japanese courts by victims from the Philippines, Japan, China, Taiwan, the Netherlands and etc., following a trial involving Kim Hak-soon halmoni as a plaintiff in December 1991. In the end, the plaintiffs all lost the case, yet even after the trials were terminated the groups still operate and support the victims.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 about the movement in Japan is the fact that as the perpetrator nation, there are multiple support groups designated to support victims from different victimized nations. These trial support groups also

joined the Nationwide Action.

There were two main movements that supported the victims in the 1990s. One was supporting the trials brought by the victims of each nation, and the other was the organization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the late 1990s. The VAWW RAC, which was formed after VAWW-NET Japan, which suggested the Tribunal, also participates in the Nationwide Action. While the movement to support trials began with a focus on postwar compensation, the 2000 Tribunal movement expanded the movement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broader audience of women participated.

In the late 2000s, resolutions were adopted across Japan through community activism. In 2007,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dopted a resolution regarding the issue, followed by resolutions adopted in the Netherlands, Canada, European Parliament, and more. These adoptions sparked a similar movement in Japan, that Takarazuka City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March 2008. By 2013, a total of 43 regional assemblies adopted resolutions.

Therefore, a wide range of civic groups participated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wide Actions, including those who pursued the resolution movement in Japan, the trial support groups from the 90s, and those who hosted the 2000 Tribunal. What triggered this unification was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regime in 2009.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persistently proposed the bill on urging the resolution of the wartime forced sexual slavery victims (hereafter bill on resolution) to the National Diet since 2000. Various organizations that were dispersed all around the country believed this to be the chance to legally combat the issue and gathered to form the Nationwide Action.

The Nationwide Action focused on its strength that it has presence all over the country to urge the district-elected congressmen to address the issue in legal terms and hold citizen rallies in the National Diet and across regions. In November 2010, the Nationwide Action delivered signatures of 610,832 international citizens and 177 signatures of Korean lawmakers gathered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o the Japanese Government. Around 4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rally held at the National Diet on the day.

In August 2011,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nounced its ruling, the expectation of resolution of the issue also heightened in Japan. Then on December 14, 2011, the Wednesday Demonstra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reached 1000th Wednesday Demonstration.

The Nationwide Action joined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appealed to the Japanes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commemorating the 1000th Wednesday Demonstration. In Hokkaido, despite the freezing weather, 150 people gathered and marched for one hour; In Osaka, 500 people placed the candles in the shape of the number 1000; In Tokyo, 1,300 people joined and made a human belt around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ilding, despite the Japanese right-wing protest against them. Song Shin-do halmoni also participated, and lawmakers demanded resolution of the issue. Various events were held in 15 regions including Nagoya, Toyama, Kawasaki, Kyoto, Hiroshima, Hamamatsu, Okayama, Fukuoka, Fukuyama, Yamaguchi, Kitakyushu, and Okiwana.

The Nationwide Action hosted forums and lectures for the postwar compensation parliamentary union formed within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and helped them understand the issue. However, the Democratic Party argued that the ruling party can only propose bills that are realistically achievable and did not even attempt to propose the bill on resolution to the National Diet. We believed that trying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legislative means in Japan would be realistically difficult and discussed with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o tackle the issue by other legal means. Eventually, a Korea-Japan Taskforce to addres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formed. In 2012~2013, The Taskforce gathered Korean and Japanese legal experts and hosted meetings in both Japan and Korea to discuss how to legally address the issue and the resolution that victims seek to achieve

Meanwhile in December 2012, the Democratic regime came to an end in Japan, and the Abe regime began. Approaching the administration became more difficult, but the fact tha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d to be address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t changed. In June 2014, the 12th Asian Solidarity Conference for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as hosted in Tokyo, Japan. The Korea-Japan Taskforce presented

the resolution plans to the victims and activists of 8 countries, discussed the matter in depth, and finalized the recommendations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Nationwide Action constantly requested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implement the resolution plans. However, the agreement announc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2015 completely contradicted with the recommendations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2016~2017, the Nationwide Action coined the catchphrase "Korea-Japan Agreement is Not a Resolution" and made an appeal to the citizens about just resolution. In order to reverse the public opinion in Japan which worsened after the Korea-Japan agreement, we actively engage in activities to explain the injustice of the agreement, the historical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history and accomplishment of the movement to the next generation. Further, we continue Wednesday Rally in Hokkaido, Tokyo, Osaka, Kobe and Hiroshima, to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Wednesday Demonstration in Korea.

Hereafter, in Japan, the movement to remind everyone the truths regarding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responsibilities, and what to remember about this issue must continue. To accomplish this mission, Japanese children must learn about the issue in school curriculum through textbooks. Yet only one middle school textbook mention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extbooks created by historical revisionists continue to be sold.

Further, since many media instigate anti-Korean sentiment through distortion of truth,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inform the public through the media. Therefore, we must approach the public on the street, talking to one individual at a time. Still, we find hope in our activities.

As indiscriminate attacks against the lawmaker Yoon, Mee-Hyang and the Korean Council continued, distorted reports also made their way through Japanese media. The Nationwide Action are appealing to the public that those reports are baseless and the activists who sacrificed and devote their lives to the victims, must be evaluated fairly. As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refuse to admit the truth and continue to victimize over again, the victims came to feel anxiet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itizens must realize that all responsibilities li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The thirty years of the Korean Council has been a pioneering movement that gave voice

to the victims who were not heard, dedicated wholeheartedly to the redress of victims who found their voices, and presented the ideology that we must pursue for women's human rights and peace. This movement cannot be undermined by anyone.

Comfort Women Redress Movement in the US: 28 Years of Activism of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WCCW: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November 14, 2020

Jung-Sil “Julie” Lee, Ph.D.
Chairman of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Art History Adjunct Professor at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wccwcontact@gmail.com / jlee38@mica.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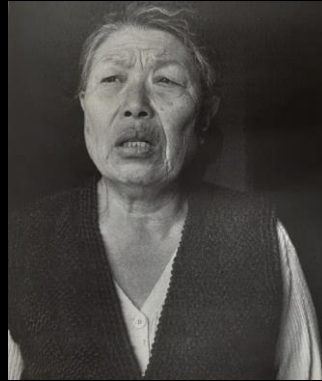


1

Diverse Dimensions and Directions of WCCW Activities in the U.S.

1. Human Rights and Women's Rights:
Grassroots movement: Legislation
(풀뿌리 운동과 법안 통과)
2. Educational Initiative and Publication (교육/출판)
3. Exhibitions of Archival & Artistic Works (전시)
4. Comfort Women Memorials (위안부 기림비)
5. Archiving & Research Project (아카이빙 프로젝트)

2



Hwang Keum-Joo (황금주 할머니 미국 방문):

She was drafted against her will when she was 13, in 1939, and suffered as a “comfort woman” in Manchuria and other regions. She testified a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1992 (와싱턴 한인 교회) that prompted the Foundation of WCCW

3

WCCW Mission Statement (revised Aug. 8, 2020)

미 연방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재단 501 (c) (3)

The WCCW is an independent, non-profit advocacy group dedicated to the pursuit of justice for the so-called “Comfort Women” of WWII. These wartime victims -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WWII - still await official acknowledgement, apology, and reparation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CCW promotes education around the significance of women's rights through the legacies of “comfort women” survivors, and seeks to eradicate and prevent any types of sexual crimes globally by promoting public awareness of the egregious distortions in school textbooks about the “Comfort Women” and research of sexual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WCCW is an independent, non-partisan,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December 1992 in Washington DC, and welcomes persons of all genders, races, and nationalities.

4



1. Women's rights: Activism---legislations

Demonstration, White House
1993, 1994

Rally in front of the
Capitol Hill. April 27-28,
2015



5



WCCW has supported for **Wednesday Demonstration(수요집회)**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by occasional rally since 1992 with The same demands proclaimed by the Korean Council to Japanese government:

1. Admit **responsibility** for the drafting of sex slaves.
2. Make **an official** apology.
3. Reveal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4. Erect **memorials and a museum** for the victims.
5. Pay **reparations** to the victims or their families.
6. Record what happened in **textbooks** that teach about the war.
7. **Punish** those responsible.

6



The Hill, Sep. 27, 2006
Lane Evans & WCCW

위안부란 이름으로 나온 모든 법안

- H. Con. Res. 176 (1996)
- H. Con. Res. 126 (1997)
- Cal. Assembly Joint Res. 27 (1999)
- H. Con. Res. 357 (2000)- 에반스
- H. Con. Res. 195 (2001)
- H. Con. Res. 226 (2003)
- H. Con. Res. 68 (2005)
- H. Res. 759 (2006)
: Passed by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 H. Res. 121 (2007): 마이크 혼다
- H. Res. 952 (2016)

7



Congressional Hearing:
Eni Faleomavaega (D-AS)
House Resolution 121, Feb. 15, 2007



Ms. Koon Ja Kim, Ms. Yong-soo
Lee, Ms. Jan Ruff O'Herne



Rep. Mike Honda
With three grandmothers in the
Hearing, Feb. 2007

8

"H.Res.121 - A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sh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요약 Summary of H. Res. 121, 110th Congress, 200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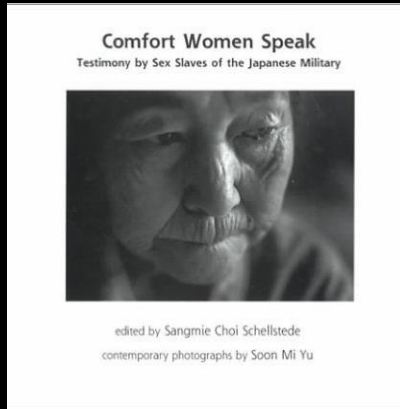
Growing Support from Legislatures Around the World

August 1999	California State Senate Resolution
<u>July 2007</u>	<u>The U.S House Resolution HR 121</u>
November 2007	Canadian Parliament Passage of Motion Netherlands Parliament Passage of Motion
December 2007	European Parliament Passage of Resolution RC-B6-0525/2007
March 2008	Philippin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Passage of Resolution 124
January 2013	New York State Senate Resolution J304
<u>March 2015</u>	<u>Maryland Senate House Resolution SJR3</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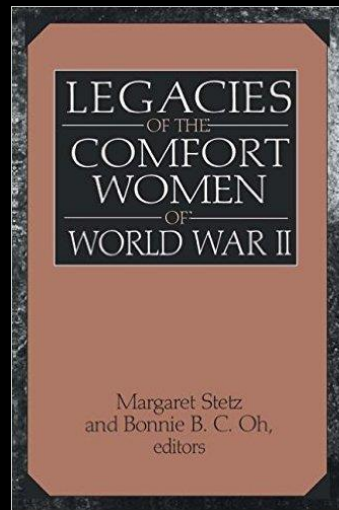
10

2. Educational Initiative and Pub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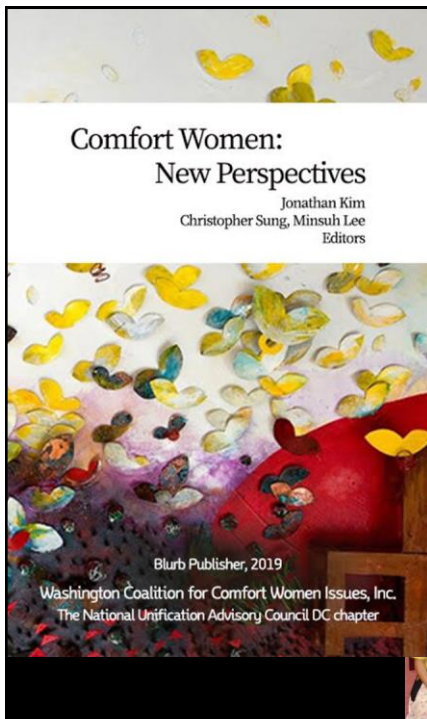
Comfort Women Speak (2000):
Testimony by Sex Slaves of the
Japanese Military : Includes New
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port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2001)*



11



WCCW Internship & Fellow



12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Human Right Department
2016

* Conference, Forum, Lecture
Along with Film Screening &
Exhibition (collaboration with
academic institutions)

*Collateral Damage:
Wartime Atrocity
and Trauma*
Symposium at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2016
Human Right Center



13



**“The Sorrow and Hope
Of Comfort Women”**
Catholic University
International Social
Development (CISD),
2014

**“History Writing
For Justice and
Reconciliation
Of Comfort Women”**
George Washington Univ.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 History Dep.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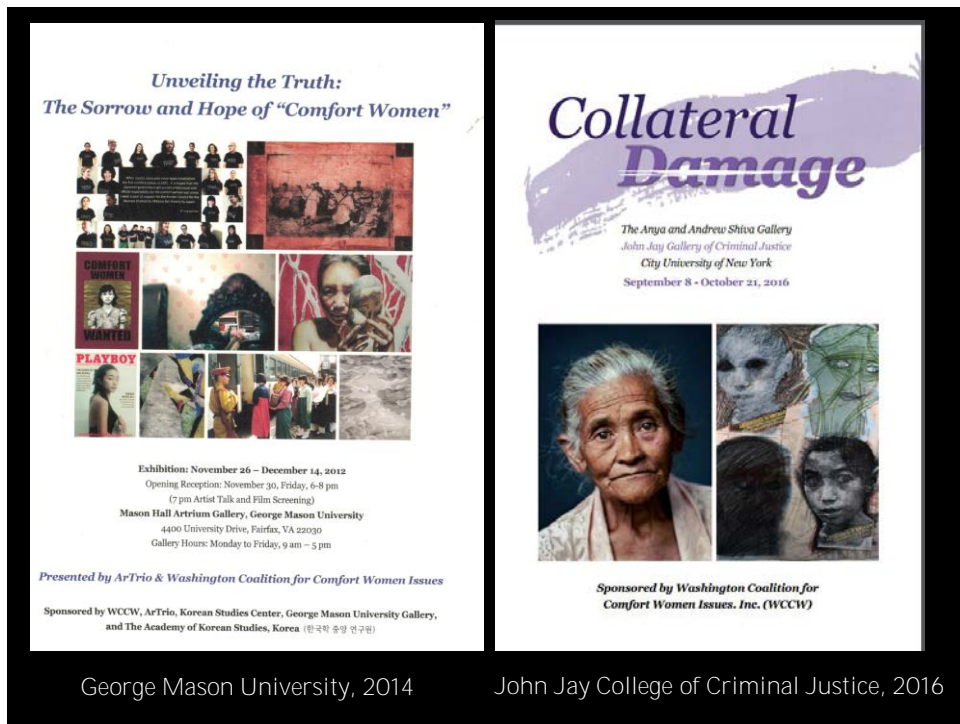
14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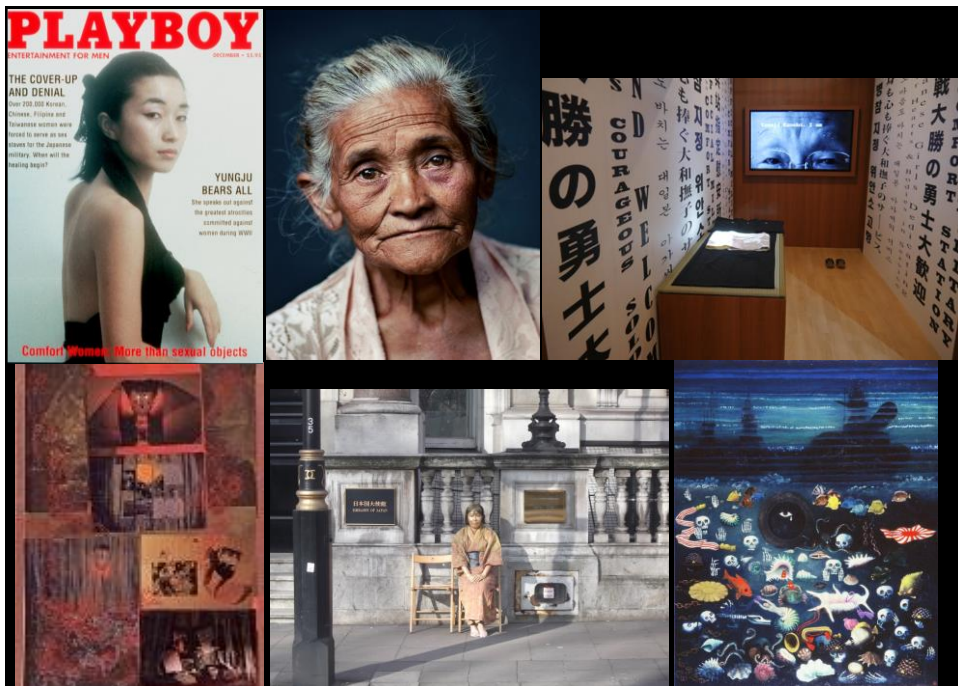


18

Art-making is not
about telling the
truth but making the
truth felt.

Christian Boltanski

19



20

The Sorrow and Hope of
COMFORT WOMEN



SEMINAR & EXHIBITION
Hosted by National Catholic School of Social Service
Center for International Social Development (CISD)
Co-organized by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WCCWI)

Dates: **November 25, 2014 (Tuesday)**, 2:00 - 4:00 pm, followed by reception
Exhibition continues to January 12, 2015

Venue: The May Gallery of Mullen Library,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ontact: Frederick Ahearn, Organizer: ahearn@cua.edu
Julie Jungsil Lee, Curator: artriblee@gmail.com



Steve Cavallo, *Lamentation*

Catholic University, 2015

21



"If the film is finished,
it will be one of few movies about comfort women"
by New York Times 27/03/15

Director **Cho Junglae**

Trampled flowers,
sought to return but could not,
are finally coming home



리향
Spirits' Homecoming
Guihyang



THE APOLOGY
BEFORE IT'S TOO LATE

WINNER Busan Cinophila Award
WINNER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NNER Audience Award
WINNER Best of Festival

First Film Screening (영화상영) of "Spirits' Homecoming Guihyang"
January 29th 7 pm 2015 at Messiah Presbyterian Church
December 16 GWU and UM "Spirit's Homecoming II"

22



Comfort Wome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국제 영화제), American University, 201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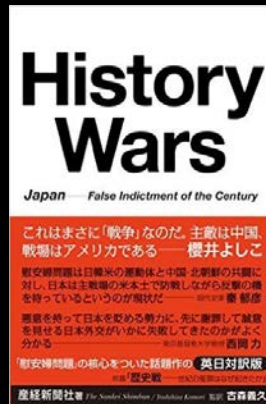
4. Comfort Women Memorials in the US



Comfort Women Monument, Palisades Park, County of Bergen, New Jersey. #1 monument in USA. October 23, 2010

24

Sankei Shimbun, “History Wars”



“This book is about a full-fledged information war now waged against Japan, with China as the chief adversary and America as the main battlefield...”
(Yoshiko Sakurai, Journalist)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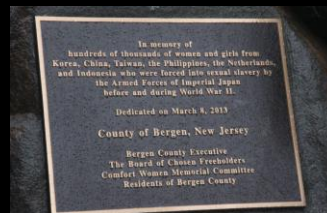
October 23, 2010 - Comfort Women Monument, Palisades Park, County of Bergen, New Jersey. **#1 monument in USA.**



June 18, 2012 - Comfort Women Monument, Veterans Memorial, Eisenhower Park, Westbury, Nassau County, New York. **#2 monument.**



January 2014 - Flanking the original monument set up in Eisenhower Park in 2012. **#5 monument in USA.**



March 8, 2013 – Comfort Women Memorial. Bergen County **#3 monument**

26



First Statue of Girl (Sonyeo Sang), Seoul, Korea, 2011,
In front of Japanese Embassy during 1000th demonstration, The Korean Council



July 30, 2013 - Statue of Girl, Glendale Central Park, Glendale, California (USA). #4 monument. Near Los Angeles, California.

27



May 30, 2014 - Comfort Women Memorial Peace Garden, Fairfax County Government Center (페어팩스 정부 청사 내 가든), Fairfax, Virginia (USA). #6 monument Near Washington, DC.

28



August 4, 2014 - Comfort Women Monument, Liberty Plaza, Union City, New Jersey (USA).
#7 monument in USA.
Near New York City.



August 16, 2014 - Comfort Women Peace Statue, Korean American Cultural Center, Southfield, Michigan (USA).
Near Detroit, Michigan. #8 monument in USA.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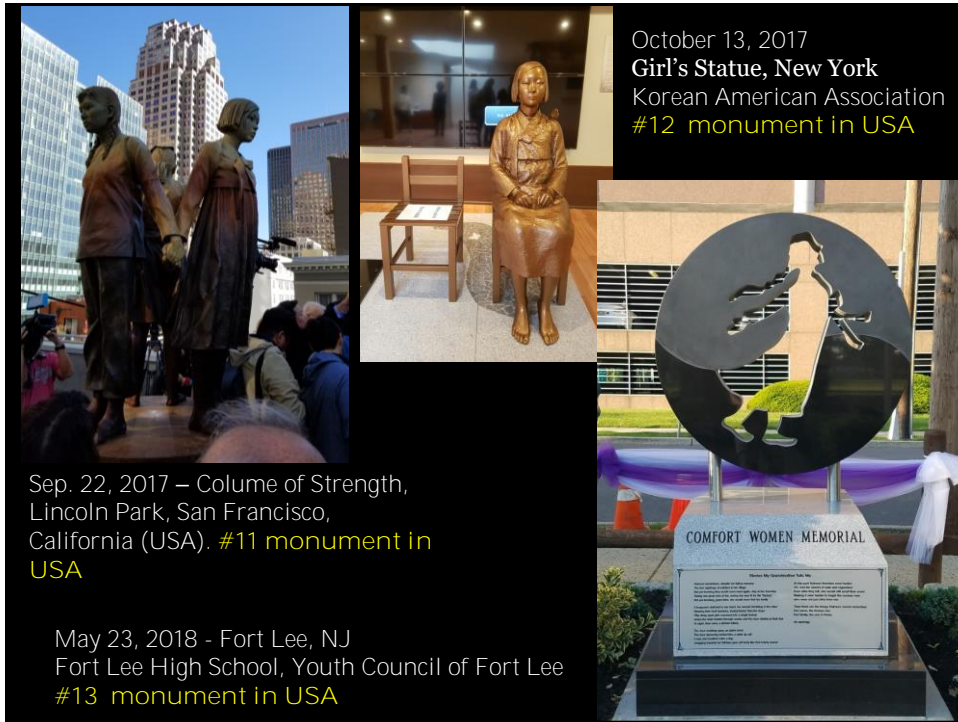


June 28, 2017 - "Young Girl's Statue for Peace," Blackburn Park II, along Blair Circle, Brookhaven, Georgia
#9 monument i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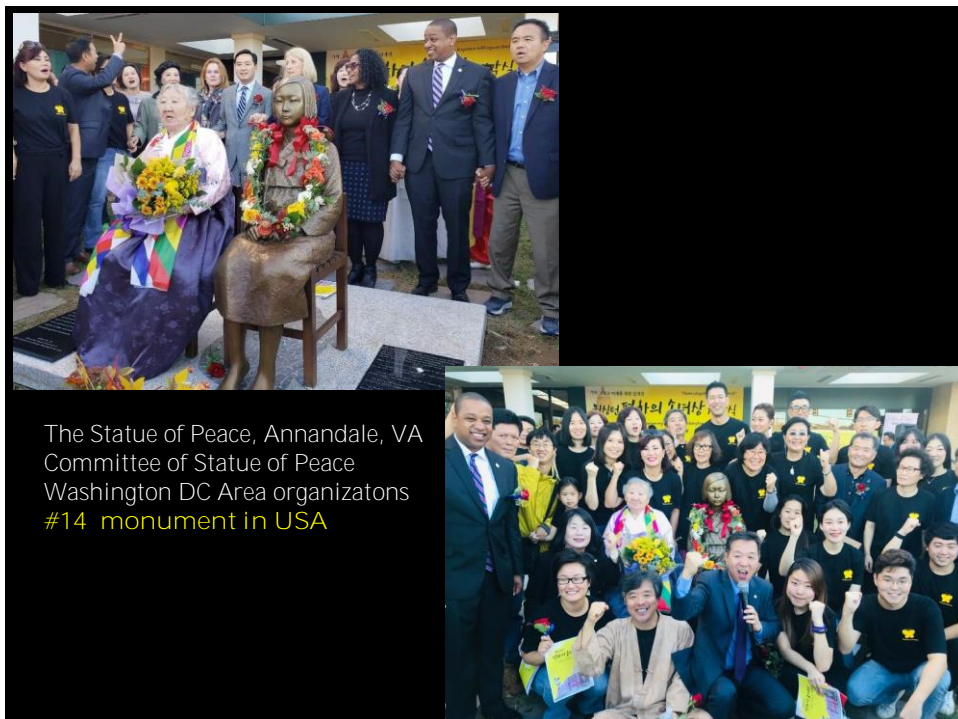


July 19, 2017- Cliffside park, NJ Bergen County
#10 monument in USA

30



31



32

5. Archiving: Research & Education Project

Was there no “forced” recruitment?

(강제 징용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ceived the repor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stated that the forceful abduction of Asian women b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during the war could not be confirmed in any documents.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reported Sunday, Jan. 31, 2016 right after the 2015 agreement.

Responding to the news account, a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spokesman stressed that the forced nature of recruitment and transfer of comfort women, many of whom were Korean, is an undeniable historical fact.” (Yoshimi Yoshiaki)

We need “the archiving project”: Untruthful “Truth” Propaganda

이와 같은 위안부 관련 거짓 사이트를 만드는데 일본 정부가 주력하므로 이에 맞서서 고증 자료로 증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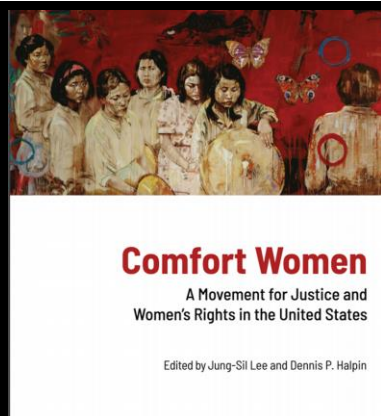
33

Ultimate Goal of the Archive Project

- ❑ In order to make historical truth apparent and visible and to ascertain diverse historical evidence both primary or secondary sources (역사적 진실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 ❑ To create a repository for documents and artifacts related to comfort women from which soft-powered material, memorial, or literary & artistic product will be created and circulated. (재생산 위한 위안부 관련 자료 수집)
- ❑ To realize the justice and give a peace and dignity to grandma, by situating them prominent place of the annals of history and prevent any types of sex crimes.

(할머니들 이야기를 역사에 각인시키고 여성인권 유린 성범죄 예방)

34



축하드립니다. 함께 가요!!
Thank you for
your support!

www.comfort-women.org



35

Symposium and ceremony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ouncil

Saturday, November 14, 2020

People who stood with victims – Australia

Presenter: Vivian Pak

(Former co-chairperson of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1



People who stood with victims | Australia

I. Introduction |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Australia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

1. Phase 1 (2006~2010)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introduction of the Australian Parliament resolution
2. Phase 2 (2016) Establishment of Statue of Peace in Sydney
3. Phase 3 (2017~Present) Making Statue of Peace in Sydney a symbol of human rights and peace

III. Conclusion |

Directions for activism in Australia in the post-victim era

2

I. Introduction |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Australia

- Regionally separated from victims in Asian regions
- Diplomatically an ally of the U.S. and has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Japan → major governmental and political powers heavily influenced by Japan
- Around 3,000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existed in a “comfort station” in New Guinea, an Australian territo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 Australia is a signatory to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we hope it will fulfill its role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icture of Shinzo Abe,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Donald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Malcolm Turnbull, former prime minister of Australia (Source: JIM WATSON/AFP/Getty Images)

3

I.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Australia (cont.)



1. The existence of victim Jan Ruff O'Herne (1923-2019)

- Dutch-Australian victim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women's human rights activist
- In 1944, she suffered severe atrocities as a Japanese military sex slave in the Dutch East Indies (currently Indonesia) for 3 months at the age of 21
- She spread awarenes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rough her ceaseless testimonies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1992
 - International Public Hearing on Japanese War Crimes in Tokyo in December 1992
 -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2000
 - U.S. congressional hearing for the adoption of the U.S. House Resolution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2007

4

- **Inscrip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Australian society**

- The fact that Jan she testified at the U.S. congressional hearing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eld at the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February 15, 2007 was widely known to the Australian society
- She pointed out that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s not just an ethnic conflict about Japan’s occupation of Asia but is an issue of viol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 Jan Ruff O’Herne’s story was introduced in the Australian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ABV TV’s documentary “Australian Story: Forgotten Ones” in 2001 and 2007 (rebroadcasted due to demands from the audience after the U.S. congressional hearing)

I.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Australia (cont.)



“I will continue to fight. The Japanese are waiting for us to die, but I will not die”

Quote from Interview with Australian Story

5

- **Storytelling that continues through generations**

- Supported and stood in solidarity with movie productions by Jan’s grand-daughter, Director Ruby Challenger
- Ruby Challenger, grand-daughter of Jan Ruff O’Herne and a movie director, recounted her grandmother’s story in a short film titled *Daily Bread* in 2018 (received awards in many film festivals)
- Director Ruby is currently preparing a full-length film about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in Indonesia, titled *The Handkerchief*

I.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Australia (cont.)



The short film *Daily Bread*, which cinematized the story of Jan Ruff O’Herne, deals with the story of Dutch prison camps in Indonesia during Japanese occupation in the Second World War.

Image source: Challenger Productions

6

I.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Australia (cont.)

2. Statue of Peace in Sydney and Reverend Bill Crews, father of Sydney streets

- Rev. Bill Crews is a human rights activist who provided a home for the Statue of Peace after learning that the campaign to establish Statue of Peace was unsuccessful. He is a renowned figure in Sydney who dedicated his life for the marginalized.
- He provided full support for the Sydney Statue of Peace despite extreme opposition from the local Japanese-Australian society
- The first to “respond” to the pains of victims in Australia



“The Statue of Peace is a symbol of persecution and abuse of men against women, especially wartime sexual violence.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s an issue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 Rev. Bill Crews’ press conference on August 1, 2016-

7

II |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

Phase 1 (2006-2010)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ampaign to adopt resolution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 Established Friends of ‘Comfort Women’ in Australia
- Held a nation-wide lecture tour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ugust 2006)
-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 Jang Jeom-dol halmoni (accompanied by Yoon, Mee-hyang, then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ouncil), who visited Australia upon the invitation of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lectured at Sydney, Melbourne, Adelaide, and Hobart in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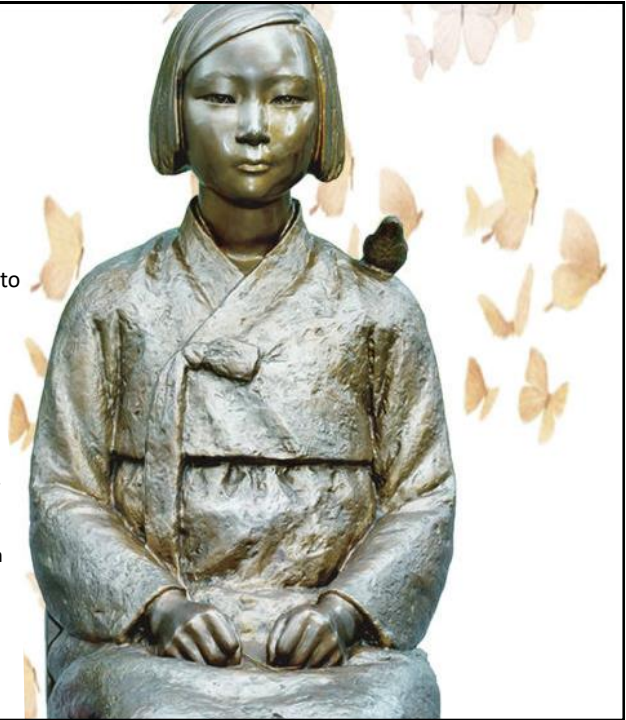
8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

1. Phase 1 (2006-2010)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ampaign to adopt resolution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1.1 Campaign to adopt the "comfort women" resolution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 a. August 2006, first motion for the "comfort women" resolution (rejected)
- b. February 2007, second motion (rejected by only 2 votes)
- c. September 2007, third motion (co-motivated by three parties, rejected by only 1 vote)
- d. August 2008, fourth motion (rejected)
- Petition for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individual meetings with members of parliament and held meetings
- Introduced the resolution four times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between 2007~2008 but had been rejected



9

Past Australian Prime Minister John Howard's statement

- Prime Minister John Howard's statement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On March 12, 2007, Australian Prime Minister John Howard, who visited Japan to sign the declaration on Australia-Japan security cooperation, mentioned **Jan Ruff O'Herne as one of the most well-known survivors**. Regarding Japan's stance that there was no forced mobiliza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oward said, **"There can be no quibbling about what happened"** and clearly stated the use of force in mobilizing women, as reported in The Age, an Australian daily newspaper.



THE AGE

As firm on Japan sex slave war history

PRIME Minister John Howard has set himself on a collision course with his Japanese counterpart, Shinzo Abe, by declaring there should be no "quibbling" over the degree of coercion used to force thousands of women to act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On the eve of their talks in Tokyo today, Mr Howard has made it clear he will not tolerate an attempt by Japan to rewrite history. He is expected to raise the issue with Mr Abe this afternoon.

Mr Abe enraged surviving so-called 'comfort women' two weeks ago when — after the US Congress called on Japan to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sex slave practice — he suggested there wa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or army had coerced women to work in

10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1. Phase 1 (2006-2010)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ampaign to adopt resolution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1.2.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discussed in regional / state parliaments

- a. New South Wales State Government
 - MPs Virginia Judge (Strathfield District) in 2010 and Jodi McKay (current leader of the opposition) in 2016 delivered private member’s statement session and strongly urged the official apology of Japanese Govern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 b. Adopted “comfort women” resolution in Strathfield City Council and Ryde City Council in March 2009



11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1. Phase 1 (2006-2010)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ampaign to adopt resolution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1.3.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ies for the adoption of “comfort women” resolution at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06-2007)

- Jan halmoni’s testimony in the U.S. Congress (February 2007)
- As Australian and the only white European woman to do so, Jan courageously testified her experiences with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doing so, sh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historical truth behin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women’s human rights violations as not just an issue of Asian women but also as a task for all of us to resolve and an issue of viol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12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1. Phase 1 (2006-2010)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ampaign to adopt resolution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1. 4. First Wednesday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Japanese Consulate in Sydney (March 7, 2007)

- Participated in the March for International Women's Day in 2007
- On the 751st Wednesday Demonstration, the first to be held in Sydney, Gil Won-ok halmoni of Korea, Wu Hsiu-mei halmoni of Taiwan, and Jan Ruff O'Herne halmoni of Australia delivered a statement of protest addressed to Shinzo Abe via Hiroshi Manabe, deputy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Sydney



13



Gil Won-ok of Korea, Jan Ruff O'Herne of Australia, and Wu Hsiu-Mei of Taiwan participating in the 1st Wednesday Demonstration in Australia March 7, 2007, in front of the Japanese Consulate in Sydney

14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1. Phase 1 (2006-2010)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ampaign to adopt resolution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1.5 Held International Solidarity Conference “Beyond 2010 for the ‘Comfort Women’ Issue – Dialogue on Justice, Compensation & Education”

- Exchange of conscientious scholars who researc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Australia
- Professor Tessa Morris-Suzuki of ANU
-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ctivists and researchers who have been active in Australia, Taiwan, Japan, New Zealand, Indonesia, etc., and Australian citizens participated to exchange recent activities and research accomplishments. Participants agreed on “2010 Action Plan,” which contains future directions for activism.



15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1. Phase 1 (2006-2010)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ampaign to adopt resolution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1.6. Cultur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 Held War and Women’s Human Rights photo exhibition (2010)
: raised awarenes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Korea, Indonesia, the Philippines, Japan, Taiwan, etc., and of wartime sexual violence around the world
- Held an exhibit dedicated to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lmonis (2010)
: Around 20 artists from Australia, Korea, Japan, Indonesia, etc. participated



16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2. Phase 2 (2016) Establishment of Statue of Peace in Sydney

2.1.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Sydney Statue of Peace Establishment Committee) established

- Demanded annulment of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 Held Wednesday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Japanese Consulate in Sydney (January 6, 2016)
- Held outdoor photo exhibition, comic exhibition (July 2016)



Comic exhibit "Flower that does not fall" (July 2016)

17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2. Phase 2 (2016) Establishment of Statue of Peace in Sydney

2.2.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Sydney Statue of Peace Establishment Committee) established

- Statue of Peace in Sydney established (August 6, 2016)

: The fourth abroad and the first Statue of Peace in Australia (Ashfield, Sydney)

The Korean Council and Seongnam City Government provided support, and Koreans in Sydney and Australians showed interest and helped



18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3. Phase 3 (2017-Present) Making Statue of Peace in Sydney a symbol of human rights and peace

3.1. Sydney Statue of Peace Keepers activities

- Visits to Statue of peace several times a week (Korean-Australian society, locals, overseas visitors, etc.)
-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members voluntarily maintain and manage the statue, fundraise to carry out activities



19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3. Phase 3 (2017-Present) Making Statue of Peace in Sydney a symbol of human rights and peace

3.2. Raising awareness of Sydney Statue of Peace

- Organized various cultural events to raise awareness of the Statue of Peace an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the local society
- Organized cultural events on August 6, the establishment date of Sydney statue of peace, and on the week of August 14,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Held flea market and peace concert (August 2017, 1st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Statue of Peace)



20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 Outdoor photo exhibi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2018)
- Film screening of *Apology* (2017, 2019),
I Can Speak (2017), Short film *Daily Bread* (2019),
My Name is Kim Bok Dong (2019)



21



Screening of *Daily Bread*, a short film directed by Ruby Challenger, grand-daughter of Jan halmoni (August 12, 2019)

22

II. Development of Australian civic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ocused on Sydney)*Cont.*

3. Phase 3 (2017-Present) Making Statue of Peace in Sydney a symbol of human rights and peace

3.3.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ies for women's human rights and peace

- Has been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Women's Day march in Sydney since 2016
- Organized campaigns in collaboration with Australian women's rights, human rights, and peace activism organizations to de-nuclearize and oppose war in the Korean peninsula, sign North Korea-U.S. peace treaty, and ratify U.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Organized peace rally for Korean Peninsula (October and December 2017)
- Participated in 'holding hands for peace' action commemorating 1st anniversary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pril 27, 2019)



Participated in holding hands for peace action (April 27, 2019)

23



Peace rally for Korean Peninsula in Sydney
(December 8, 2017, square in front of U.S. Consulate in Sydney)

24

Conclusion | Directions for activism in Australia in the post-victim era

1. Strengthening networks with Australian scholars, human rights and peace activists who are conscientiou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Organize public lectures, workshops, and academic symposiums
- Need to collect and publicize research materials and articles
- Caroline Norma, a professor at RMIT University, contributed an article “Australia must face up to its role in the lack of justice for ‘Comfort Women’ to the Sydney Morning Herald daily newspaper after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pointing out contradictions and problems of the agreement

- Reexamin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hich took place within Australia’s past jurisdictions
 - : Around 3,000 victims were in around 20 “comfort stations” in New Guinea, which was Australian territo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imperativeness of Australian society to show more interest in and take ac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should be emphasized.
- Pursue continuous lobbying through the Australian Parliament
 - : Reexamine past lobbying activities to adopt a resolution at the Australian Parliament, which failed four times
- Need to build solidarity with Australian human rights and peace organizations, researchers, and journalists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25

Conclusion | Directions for activism in Australia in the post-victim era

2. Empowering activism of Koreans in Australia - activating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training next generation Korean activists

- Expand exchanges with women, human rights, and peace organizations in Australia
- Plan Australian Activists Zoom Meeting with Australian researchers and activists (early December)
- Strengthen networks with Korean/Australian researchers, activists, politicians working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by pursuing a visit to Korea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26

Conclusion | Directions for activism in Australia in the post-victim era

3. Sharing the story of Jan Ruff O'Herne, Australian victim and women's human rights activist

Online memorial service in memory of Jan Ruff O'Herne (August 15, 2020)

- Co-hosted with Melbourne 'Comfort Women' Memorial Task Force
- Jan's family and around 100 activists, researchers, politicians, religious people, artists, and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memorial service via Zoom and YouTube
- Political figures such as Vickie Chapman, Deputy Premier and Attorney-General of South Australia, Trish Doyle, Labor Party Shadow Minister on Women, and Jenny Leong, Green Party MP, showed immense interest and participated in the event
- Memorial service for Jan Ruff O'Herne to be held every year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27

Conclusion | Directions for activism in Australia in the post-victim era

Promoting the designation of Jan Ruff O'Herne Memorial Day (August 2020~Present)

- Liberal Party, Labor Party, and Green Party jointly introduced a resolution at NSW Parliament on August 6 to designate August 19, date of Jan Ruff O'Herne's passing, as Jan Ruff O'Herne Memorial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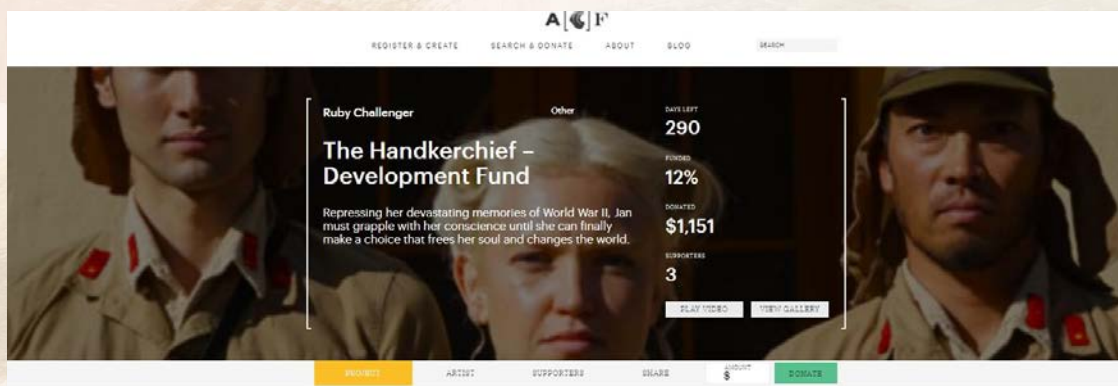


28



Photo of MPs who jointly introduced the resolution to designate "Jan Ruff O'Herne Memorial Day" at NSW state assembly on August 6
 From left, Green Party MP Jenny Leong, Labor Party MP Trish Doyle, Liberal Party MP Victor Dominello
 ©Office of Shadow Minister for Women NSW Trish Doyle MP

29



Support for the production and publicity of *The Handkerchief*, directed by Ruby Challenger, granddaughter of Jan Ruff O'Herne

- Director Ruby Challenger is currently preparing to film *The Handkerchief*, based on the true story of Jan halmoni at a 'comfort station' in Indonesia in the Second World War
- Will collaborate in fundraising and publicity for the film production

Ongoing crowd funding for *The Handkerchief*, Director Ruby Challenger's next film
<https://australianculturalfund.org.au/projects/the-handkerchief-development-fund>

30

Conclusion | Directions for activism in Australia in the post-victim era

4.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Three Sisters Statue of Peace at the Australian War Memorial

March 7, 2007, commemorating the first Wednesday Demonstration in Sydney

- March 7, 2007 is the dat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Gil Won-ok halmoni of Korea, Wu Hsiu-mei halmoni of Taiwan, and Jan Ruff O’Herne halmoni of Australia delivered a statement of protest addressed to Shinzo Abe via Hiroshi Manabe, deputy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Sydney
- It commemorates the historical moment when the three halmonis who have lived as peace and human’s rights activists beyond their lives a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jointly held hands and confidently took action for justice
- Jan halmoni’s handkerchief and the history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exhibited on the Second World War exhibition hall in the Australian War Memorial
- Will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Three Sisters Statue of Peace based on solidarity activities with support groups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31



Jan halmoni’s handkerchief, displayed at the Second World War exhibition hall in Australian War Memorial

32




Australia an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Australia, a shelter and settlement for war refugees
 around the world,
 we raise our voices for a world without victims of war
 and a peaceful world without war.**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33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STAY CONNECTED

sysochu.com
facebook.com/sysochu

instagram.com/sysochu_au
twitter.com/sysochu_au

34

Session II. Our responsibilities in the post-victim era

Moderator: Yang, Hyuna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Legal responsibilities in the post-victim era

Kim, Chang Ro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I. Introduction

- On August 30, 2020, anothe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 from Korea passed away, leaving only 16 victims remaining out of 240 who were register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The average age of survivors is above 90. Few survivors can freely move and express themselves. Although it is very unfortunate, the time left for victims is not long. Thus, we must prepare for the post-victim era in addition to seeking a resolution as much as possible in the victims' lifetime. This preparation should start from a reexamination of the past 30 years of history.
- Focusing on "legal responsibility," this presentation reflects on the 30-year history of efforts to resolv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paints the direction that the post-victim era should move towards. Given that it is difficult to capture numerous scenes spanning 30 years in one presentation, I focus on the big picture and central points that are of particular interest.

II. Raising and establishing "legal responsibility"

- The "legal responsibilit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first raised in an organized form via an open letter to the Japanese Government l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litary Sexual Slavery and signed by 37 women's organizations such as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on October 17, 1990.

- 1. Admit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 women as military "comfort women" 2. Apologize 3. Disclose all aspects of the war crime 4. Erect a

memorial monument for victims 5. Make reparations to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6. Teach the issue through history education so that such crimes would not be repeated

- The open letter above did not put particular emphasis on “legal responsibility” and did not include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 Amid the Japanese Government’s passive response, the Korean Council started strongly raising punishment against perpetrators from 1993. On February 7, 1994, 27 Korean victims filed a complaint to the Tokyo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n Council also submitted a complaint, demanding that the Japanese prosecution authorities officially punish the perpetrators. However, the prosecutor responsible refused to accept the complaint. Thus,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by Japan did not take place.

- “Legal responsibility,” which was added as the seventh in the list of demands finalized by the Korean Council, has been since repeatedly affirmed and concretiz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Re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Comfort Women - an unfinished ordeal*, published in 1994

-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by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Radhika Coomaraswamy, published in 1996

- *An Analysis of the Legal Liability of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mfort Women Stations" Establish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 report by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pecial rapporteur on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Gay J. McDougall in 1998

-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final judgment, announced in 2001

-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ublished in 2005

- Furthermore, “legal responsibility” was especially emphasized in response to Japan’s promotion of “moral responsibility” as a way to actively deny “leg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Asian Women’s Fund, launched on July 19, 1995.

○ The main components of “legal responsibility,” which had been raised and established through the abovementioned process, are described below:

-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includes the planning of the overall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fort stations,” the forced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incarceration, sexual exploitation, abandonment, and concealment, denial, and impunity since 1945.

-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itself is a crime that violated international laws on crimes against humanity and prohibition of slavery.

-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individual perpetrators who specifically committed crimes must receive criminal penalties, and Japan should bear responsibilities at the national level of admitting to the crimes, apologizing, making legal reparations, investigating the truth, erecting memorials, conducting history education, and punishing perpetrators.

III. Reactions to “legal responsibility”

○ Japan’s reaction to the abovementioned trend came in full swing since 1997.

- “Institute of Junior Assembly Members Who Think About the Outlook of Japan and History Education” was formed

-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was formed

- “Japan Conference” was formed

○ Shinzo Abe cabinet’s decision on March 16, 2007: The documents found by the Government up to the Kono Statement on August 3, 1993 “did not directly reveal records of so-called forced mobilization by the military or authorities.”

-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peatedly maintained the abovementioned stance and has included it in the “Response of our country to the comfort women issue” available 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website as of 2020.

- The “so-called forced mobilization” is based on “forced mobilization in the form of authorities breaking into houses and abducting people,” or “force in consultation,” as mentioned by Abe in the National Diet Budget Committee on March 5, 2007.

- Therefore, the Cabinet decision above means the form of “authorities

breaking into houses and abducting people” was not recorded in the documents discover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until August 3, 1993.

- Howeve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itself is a crime, so the argument that no records prove “forced mobilization,” which is only a part of the system, is insignificant.

- Despite this fact, the Japanese Government repeats this argument to cling to the fact that amo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fort stations” and the transfer and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acknowledged in the “Kono Statement,” “mobilization,” at least in the case of Korean victims, is not corroborated by official documents found thus far and is backed up primarily by the testimonies of victims. In doing so, the Japanese Government is hoping to deconstruct the found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its entirety.

- Thus, through repeated arguments, they are hoping to spread the “impression” that “force in consultation cannot be proved ⇒ there was no force ⇒ it is not an issue.”

- This is an evil argument that insults the victims’ testimonies, which had been poured out through past wounds with great difficulties.

○ The Korea-Japan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comfort women” agreement on December 28, 2015: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 This point is also repeatedly arg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s included in the “Response of our country to the comfort women issue” available 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website as of 2020.

- The implement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is an ongoing process. Thus,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not compatible with the modifiers “final and irreversible.”

- The expression “irreversible” had been incorporated in the demands of victims in the first place. It was the “apology” that was demanded to be “irreversible.”

- “Irreversible apology” was raised in the “recommendations to the Japanese Government” adopted in the 12th Asian Solidarity Conference for Resolution of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on June 2, 2014. It was included as one of the actions to be taken on the basis of acknowledging responsibility, in the form of “apologizing in a manner that is clear, official, and cannot be overturned.”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included the expression “cannot be overturned,” or in other words, “irreversible,” to

“prohibit public figures’ comments based on fals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clear and official refutation of comments made by non-public figures.” Such action was presented under the awarenes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expressing “apology and remorse” only to overturn it soon after has been a serious problem. In other words, public officials who refute “apology and remorse” should be removed from their position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officially and clearly refute comments made by non-public figures.

- However, in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irreversible apology” was changed to “irreversible resolution.”

- “Irreversible resolution” was used as an excuse to turn down calls for Abe to directly apologize rather than apologizing via the Foreign Minister, with Abe retorting that “apologizing would violate the agreement,” and to respond to a question on “whether Abe is willing to send a letter of apology to victims” by stating that he “does not have even the slightest intent to do so.” Furthermore, it was used as an excuse to minimize and omit references to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Japanes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extbooks, support activities to interfere with the installment of Statues of Peace around the world or to remove installed Statues of Peace, and to protest against any men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by the Korean Government. Furthermore, it was also used as a weapon to prevent the Park Geun-hye Government from mention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ecuting relevant budgets that had already been planned.

- “Irreversible solution” is not a resolution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but rather a deplorable means to interfere with the resolution and erase the issue itself.

IV. Reconfirming “legal responsibility”

- The incidents surrounding the Berlin Statue of Peace since late September 2020 that progressed through the phases of Installment – Mitte District’s removal order – Injunction application filed to stop the removal order – Suspension of Mitte District’s removal order clearly demonstrate how unfounded Japan’s reactions are.

- Japan, bringing on not only the Japanese Ambassador and Consulate General in Germany but also the Foreign Minister, would have repeatedly

raised the arguments included in “Response of our country to the comfort women issue.” They unilaterally defined the Statue of Peace as “a huge diplomatic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pressured Germany with the 2007 Cabinet decision of “no evidence on forced mobilization,”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on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and the Asian Women’s Fund that eliminated “moral responsibility.” They were able to draw the removal order from the German Government and local district through words that conceal the reality.

- However, the German citizens who faced the reality of the statue as a girl who aims for peace would have perceived the demands to remove it to be unfounded, and as such, Mitte District had to suspend the removal order.
- The incidents surrounding the Berlin statue of peace reaffirmed the history of victims and citizens around the world who established “legal responsibility” as common sens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uous efforts over the past 30 years. It is a valuable case which showed that although the process of calling for peace is difficult, injustice manifests itself and collapses in the process.
- In front of this large common sense, the Japanese Government’s unreasonable arguments are not credible. The more the Japanese Government pushes unreasonable arguments, the less credible they become.

V. Conclusion – the starting point of the post-victim era

-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a valuable history created by victims and citizens throughout every phase of the past 30 years. And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ost-victim era.
- Efforts are needed to continuously reaffirm and realize “legal responsibility”
- Efforts are needed to make the Japanese Government admit their war crimes, apologize irreversibly, make legal reparations to expiate for their war crimes, investigate the truth by disclosing all relevant official documents, conduct history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around the world, and acknowledg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s a crime that should be punished.
- Efforts are needed to make the Korean Government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s legal responsibilities, which Japan itself declared to be

“remaining.”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lay an active role a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victims affected by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as a country that established new values of “women’s human rights and pe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process of questioning legal responsibility on this issue.

- Most importantly, the history of establishing legal responsibilit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d been written by citizens. Even if countries do not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citizens should, as they have been doing so far, continue the history.

- I pay my respects to the halmonis and the Korean Council who have stood at the forefronts and dedicated themselves to the past 30 years of history.

The victim/survivor-centered approach in the post-survivor era: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Nam, Kij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1. On the ‘post-survivor era’

With this year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movement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is article aims to respond to the need for clarification for political responsibility in preparing for the post-victim era. The key to resolution of the issue is shifting from “admitting facts, apologizing, and paying legal reparations” to “investigating the truth, inheriting memory, and educating history.” Therefore, our task is to identify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30 year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nd the tasks left for the post-survivor era. Specifically, the key issues are the movement and politics relevant to the settlement of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This symbolizes a turning point between “the past 30 years” and “upcoming 30 years.”

For a country or an individual, the ultimate purpose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to restore its or one’s original state and the specific means of doing so is through compensation or reparation for damage. While it may be possible to restore a country's lost sovereignty or destroyed economy, it

is essentially impossible to restore an individual's destroyed life to its original state.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things that cannot be restored "unless you turn back the clock," such as loss of life or destruction of traditions, which cannot be substituted for in ways other than financial methods. In addition, reparation is meaningful in a sense that it "realizes" verbal apologies that are often just symbolic.

And this is where political realism can intervene. If political realism is about asking "what can be done" rather than "what is right," and answering such a question with adequate policies, the effort to realize solutions by focusing on attainable goals rather than unachievable ideals is national reparation. Since ancient societies, mankind has restored damaged order through offering land, goods, and sometimes even humans as tribute after a wa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compensation for damages through materialistic means occurred in the name of post-war settlements, and these have been institutionalized as the concept of national compensation.

These efforts attempted to resolve issues in situations where victims did not exist, and thus can be understood as post-survivor efforts. As victim-survivors challenged such approaches to resolution, the victim-centered approach was raised. However, as survivors pass away, the crisis of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s made visible and the issue of victim-centered approach in the post-survivor era is being raised.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realism served as the reason and background for the issue of redress (reparations)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to be treated as a diplomatic issue rather than a human rights issue. This is where human rights and diplomacy have diverged to become a relationship of separation and exclusion, rather than a compatible or complimentary one. Therefore, an antinomic situation where taking a human rights approach poses difficulties to diplomatic solutions and taking a diplomatic approach leads to a violation in human rights has been created. And it is our political responsibility to make this relationship an inseparable, compatible, and complementary one.

2. The issues of political realism's reconciliatory policies

Some analyses and evaluations contend that the German-Israeli reconciliation is a successful case led by political realism. In other words, the

reconciliation that political realism seeks implies the offender's guarantee of the victim's safety and stability, namely the victim's political and financial survival, and when this happens between countries it occurs in the form of provid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ompensation. From this perspective, Germany's conciliatory policy was successful by its pursuit for Israel'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ompensation, which were "realistic goals rather than ideal (武井彩佳, 255)."

Although the reconciliation of Germany and Israel is a result of political realism, it is also true that Germany tried to expand the beneficiaries of its compens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meet the shifting ethical standards of the era (武井彩佳, 253). This is well demonstrated by the political modesty that Germany demonstrated during its process of providing compensation to Israel while the complicated Palestinian refugee issue unfolded in the Middle East.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modesty in conceding the power to interpret compensation to the receiving end, not the providing country was the minimum victim-centered approach that Germany sought while implementing political realist conciliatory policies (武井彩佳, 31-37).

Therefore, the German-Israeli reconciliation is considered as not only a political realist success but also a result of compromising with idealism. E. H. Carr defined political science as a science as well as a philosophy, as it is a study of political reality (what is) as well as a study of political appropriateness (what ought to be). According to Carr, realism often turns into conformism to realism and neutralizes ideas and denies behaviors, making it overly cynical, but realism is needed to correct too much utopianism. This is similar to how idealism is needed to correct the insufficiency of realism.

The conflict between idea and reality in politics leads to the discord between intellectuals and bureaucrats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theory and praxis. Furthermore, this appears in the form of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nd between the political left and right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34-42). The discord between intellectuals who reason intuitively and bureaucrats who respond empirically led to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and conflicts surrounding the agreement

further developed into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nd between the left and right. Resolving this very conflict is the task for us in the post-victim era.

3. What is “victim-centered approach” again?

A victim-centered approach is a term used in crimes that occur in relation to the power dynamics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Park Kyung-sin). Recently,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s interpreted as “the general tendency to proceed judicial proceedings and crime settlements with the victim’s demands and interests at center rather than recklessly seeking for punishment for the offender as such approach may hinder the victim’s recovery and liberation from the crime especially in crimes caused by power relations” (New Jersey Attorney General, 2004 ; Konradi; Koss and Achilles).

If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s “assuming victims as primary customers of the judicial system and designing and implementing perpetrator management strategies considering victims’ safety, rights, and interests primarily,” the absence of primary customers causes the lack of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victim-centered approach (Bumby). However, if we shift our focus to the dissolution of power relations rather than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the victim-centered approach becomes a strategy and a goal that should be pursue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the victim. This is when the victim-centered approach becomes an issue of politic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a matter of legal or moral responsibility. And this is why the victim-centered approach should be interpreted as a political responsibility in the post-victim era.

More specific tasks include organizing and inheriting victims’ memories in the post-victim era. Facing the issue of preserving Holocaust memories in the post-victim era, Nicholas Chare explores the poetics of storytelling in philosophical, visual, and intergenerational testifying efforts (Nicholas Chare, “Holocaust Memory in a Post-Survivor World: Bearing Lasting Witness”). In his preceding research, he suggests a method that can be called “intertextual generative memory.” According to Gigliotti and Earl, “This phrase points to the productive confluence of literature, photography, philosophy, and memorial visits in situ to empower meaningful connections, however minor and particular, in current and future custodians of Holocaust

memory.” (Gigliotti and Earl, Introduction, *A Companion to the Holocaust*)¹

4. What is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again?

According to Iris Marion Young, the victim-centered approach becomes a political responsibility in the post-victim era not because we are all guilty to some extent (Arendt), but because the approach is about the world order and the order is not limited to individuals as it uses political communities as a medium to influence us retroactively or in the future (Young, 147-148). Also, because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s a public and collective act, it becomes our political responsibility in the post-victim era (Young, 165).

This is where Young suggests a model of social connection about responsibility. The responsibility related to injustice does not arise from the fact that individuals live under a common set of rules, but from the fact that we participate in various institutional processes that produce structural injustice (Young, 189). While the legal responsibility model, which includes all acts of assigning legal responsibilities and making ethical decisions including identifying responsible parties for the purposes of sanctions, punishment, compulsory compensation, reparations, etc., is past-oriented by nature,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model is future-oriented. Furthermore, a political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all members of a society who are conscious of the meaning of the moral agent. In this case, moral agents refer to those who are not indifferent to the destiny of others and to the interests that a country or other organized entity may exert upon the people (Young 169-190).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responsibility model and the social connection model proposed by Young is that the social connection model does not separate the perpetrator from the rest. The main purpose of assigning responsibilities is forward-looking. The responsibility is fundamentally shared and can only be waived through collective political action (Young, 189-190). If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s bound only by legal responsibility, the subjects of responsibility are limited to surviving

¹ *A Companion to the Holocaust*, edited by Simone Gigliotti, and Hilary Earl,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2020. *ProQuest Ebook Central*, <http://ebookcentral.proquest.com/lib/snulibrary-ebooks/detail.action?docID=6176560>. Created from snulibrary-ebooks on 2020-11-08 15:50:21.

victims and the responsibility will end at some point; however, if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s a principle that must be realized through social connections, the responsibility becomes a forward-looking task that should be pursued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the victims as long as political communities conscious about social connections persist.

Traditional discussions about moral respons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have suggested a method of returning the obligation for justice restoration to the victim-structure while Young has provided the social connection model to replace the legal responsibility model. This is based on the fact that everyone who has influenced the structural process through their actions is also responsible for the injustice. These discussions serve as the basis for discussing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n the post-victim era.

5. “Conciliatory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victim-centered approach

“Conciliatory international politics” is composed of four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mean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process of resolving and overcoming problems caused by international hostile activities” (Chun Ja-hyun, 2012, 1-29). Historical examples of reconciliation between countries generally followed the following four methods. First, a realist approach that adjusting and sharing national interests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may enable reconciliation. Second, an institutionalist (liberal) approach that cooperation for stable peace leads to reconciliation. Third, a constructivist approach that infiltration of mutual recognition through changes in identities enables reconciliation. Fourth, an approach based on a theory of justice that punishment of the offender, forgiveness of the victim, and restoration can lead to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efforts to reconcile through the first method caused failures such as the “1965 regime” and the “2015 agreement.” The reconciliation efforts using the second method resulted in declarations and statements between the 1990s and 2010s. Namely, they include the 1993 Kono Statement, 1995 Murayama Statement, 1998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2002 DPRK-Japan Joint Declaration, and 2010 Kan Statement (菅談話). Efforts through the third method in Korean-Japanese

relationship are yet to begin but preliminary works are in progress, and the fourth method has a potential problem of identifying offender/offender country and victim/victim country and may have an issue of remissibility.

In order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n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position of “victims” in “conciliatory international politics.” The realist approach of the first method assumes a “country” as the principal agent of action, so the room for victims is small. The institutionalist approach of the second method assumes participation of multiple principal agents of action, enabling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of victims (or victim groups). In the third method of constructivist approach, the victim-centered approach can become a more important value through the process of sharing victims’ identities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fourth method of theory of justice approach, the “victim-centered approach” becomes the core value that must be realized.

This is where the following tasks emerge. The Korean-Japanese reconciliation efforts will only be practical if it plans to overcome the legacy of the first method of realist approach, resume the second method of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create a room for the third method, and ultimately aim for the fourth method of restorative justic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first method, resuming the second method, and trying the third method are preliminary tasks (前段階) to materialize the goal of the fourth method, and all of these methods should be proceeded concurrently at least. Particularly, these steps are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failure of the “2015 agreement.” At the same time, these efforts should be connected to the resumption of the second method and trial of the third method, and we should be able to confirm that these are the ways that can lead to the fourth method of “restorative justice.”

6.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n Korea-Japan relationship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on administration, the “victim-centered approach” became the core principle in diplomacy with Japan. On August 14, President Moon Jae-in delivered a congratulatory remark on the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aying,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solving this issue is the victim-centered

approach,” and that “The government will find an acceptable resolution that the (victimized) grandmothers will be able to find ‘satisfactory,’” reaffirming that victims must be included i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Furthermore, on the next day on August 15, President Moon mentione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n his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remark. The president stated that “Individuals do not exist for the nation, but the nation exists to ensure human life of individuals,” stressing that “We will make sure that protecting the dignity of an individual does not hurt this country.”

In response, an official from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id, “We cannot seem to be able to imagine a possibility of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if it keeps promoting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n the comfort women issue,” demonstrating Japan’s notion of denying the victim-centered approach, and added “Korea should provide specific plans to reach resolution if it believes forced draft and international dialogues are important,” revealing the Japanese government’s stance that it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Yonhap News, 2020.8.16). Obviously, this is based on the Japanese government’s interpretation of the 2015 agreement. Therefore, in order for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o share the notion of “victim-centered approach,” the first step should include shattering the Japanese government’s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7. Review of the “2015 Agreement”: To begin a victim-centered solution

Since the “2015 agreement” was made, there have been three different levels of solutions for the comfort women issue. The first level is to practically confirm the meaning of the existing “2015 agreement.” The second level is to fully determine the settlement of 1 billion yen, of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used some portion of it, provi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third level is to decide whether further actions by either the Korean or Japanese government will be possible based on the 2015 agreement.

What we can confirm in the process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2015 agreement verification TF report is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pursuing a solution that can achieve both a return to the victim-centered approach and diplomatic policies with general foreign relations in consideration. The solution was enabled by the positions that the president and the foreign minister declared previously. In other words, the solution, if it had been realized, would have been somewhere between the position that “the 2015 agreement will not be cancelled or re-negotiated as it is an offici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and that “the 2015 agreement cannot resolve the current comfort women issue.” The Korean government’s stance is that the deal is a “valid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and despite the agreement’s gap between formality and actual content, the gap could have been filled with “Japan’s voluntary and sincere action.”

Mean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rgely supported the stance that the 2015 agreement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n other word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agreement’s content violates the victim-centered approach and the problems of the “Statue of Peace” issue, the “final irreversible solution” issue, and “restriction on condemnation and criticism in the global community” that the comfort women victims opposed during the agreement talks.

And this is where the establishment of the “Women's Human Rights and Peace Foundation” (tentative name) and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for preserving the victims’ memories emerged as practical tasks and solutions.

8. The “2015 agreement” as a starting point for a realistic solution and the conditions for its implementation

The core of the 2015 agreement announced by Japan is that Korea will create a foundation which will be financed by Japan with 1 billion yen and both countries will cooperate to begin projects to restore the honor and dignity of victims and to remedy the damage done to them. Hence, Japan will not be abl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just by financing 1 billion yen to the foundation. In other words, the 2015 deal is an agreement on the process, and its content includes sharing and working together on a roadmap for a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Specifically, the Japanese government's obligation to be fulfilled is not to provide 1 billion yen but to

restore the victims' honor and dignity and to carry out projects to restore the damage it had done.

The "actions" the Korean government expect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re "admitting the truth, sincere apologies, and efforts to prevent recurrence of war crimes." And these are not "additional measures" but "necessary measures"; and they are not additional requests outside the agreement, but necessary actions need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In regard to the "final and irreversible solution" issu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tense of the sentences used in official statements with regard to the issue. In case of the 1965 agreement, it confirms the settlement of the deal, whereas in the 2015 agreement, it confirms that the settlement will be completed. This points out that the 2015 agreement was a deal for future processes. And in this sense, the 2015 agreement symbolizes a roadmap. In other words, it is a confirmation that the situation will be settled someday if the Japanese government "faithfully implements the agreed measures."

Once again, the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are "measures to remedy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amages done to the comfort women victims" and specifically, "to carry out projects to restore the honor and dignity of all comfort women and to heal their emotional and psychological trauma." In that sense, Japan's stance of "no concession, not even a little bit" is a statement that confirms its incomprehens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on the issue as well as the Japanese government's misinterpretation (or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Furthermore, if Japan is refusing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it should take, 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agreement. At the same time, insisting on only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agreement is also an action resulting from arbitrary interpretation (or over-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In conclusion, if Japan does not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he agreement will eventually become invalidated and Japan will have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nullified deal.

9. What would happen to the 2015 agreement in the post-victim era?

First of all, Japan's acknowledgement of the crimes identified in the

agreement, a sincere apology, and the completion of its legal responsibility are the only ways to revive the nullified agreement. Therefore, "Japan is holding the key."

The Suga administration must announce that it will succeed the 2015 agreement following its predecessor, the Abe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that the 1-billion-yen compensation confirmed in the 2015 agreement is an "atonement fund" for war crimes against women, which were acknowledged in the Kono statement. This will reaffirm the fact that the 1-billion-yen fund will be used to restore victims' dignity and for their treatment. And this is where the principle of victim-centered approach in the post-victim era must be realized. That is, to build a "facility for truth investigation, research, education, and preserving memories" in the form of a larchiveum with a portion of the 1 billion yen.

On the premise that such efforts are carried out by Japan and the 2015 agreement has been supplemented and its limitations have been overcome, the "Statue of Peace" may be relocated to the facility mentioned above to continue to become a symbol of the comfort women issue movement.

2020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ouncil movement,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verify the conditions for the beginning of the "post-victim era with the victim-centered approach." Amidst the COVID-19 crisis, the Abe era came to an end in Japan and the Trump era is coming to an end in the U.S. Perhaps, we may be experiencing the beginning of a turning point in world history. "States" are restoring political realism as they are back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politics due to a continued expansion of neoliberalism followed by a stop in globalization, while international morality, which has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is showing signs of resurgence.

Today, we see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begin another 30 years for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through initiating a dialogue between realism and idealism.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to seize this opportunity does not lie only on the government but on the rest of the society.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the post-victim era

Park Jung-Ae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Introduction

I believe the term "post-survivor era" is more accurate than "post-victim era," because the victims' stories that we need to learn continue to linger from the time of the incident,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surviving, dead, or missing.

Regarding today's topic, I would like to question why the "post-survivor era" has become important to us. Thirty years after the emergence of Kim Hak-soon, what was the significance of victim-survivor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truth and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significance of survivors is by no means small as they have been motives for "awareness"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participation" in the movement, and "inspiration" for continuous praxis. In some areas, even the analogy of "sanctuary" has been used to allude to perceptions of them as absolute beings.

The trend of following survivors' words and actions in recognizing and seeking a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based on the "good intention" to console and respect survivors who experienced colonization, war, and sexual violence. However, as those who are responsible did not show sincerity an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mobilized as the cause of political struggle between different factions, survivors were sometimes put at the forefront. Those who wanted to invalidate the movement and justify the era of violence made the survivors' memory their primary target of attack. At this moment, as we near the "post-survivor era," people and forces who argue that they speak for the

victims have also emerged.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extremely concerning that some people say they “know”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before understanding it, or refuse to listen saying they “don’t want to know.” They will likely be swept by the reverse wave of “anti-intellectualism” as intended by factions who want to continue the era of violence.

I am just a woman history researcher in my forties living in South Korea and study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I fight with the feeling of knowing less as I strive to learn more. I still grapple with the desire to run away from the big topic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On the one hand, I have the earnest wish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o be discussed in a more expanded way than the historical image that we are aware of in order to break the links of misogyny and sexual violence that permeate our daily lives. I am also aware that survivors have been relied on and burdened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victimized hist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rewriting of history. As such, I wanted to discuss and think together through several points and find a balance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istory writing that keeps the victims’ perspectives without using victims as excuses.

2. Approaches to the scope of victimization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s has been well know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was implemented for 15 years across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where Japan had engaged in war. The victimizations differ according to the period, region, and political situation. The fact that policy directions and content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were determined not by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but by the “instruction” of the Japanese authorities demonstrates the concealment of the system and the variable nature of the war situation.

Thus, research on the scope of victimization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simultaneously requires individual researchers’ studies and collaborative research by researchers from relevant fields. Researchers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war, movements of troop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fic units and officials. They also need background knowledge on the political situations in Japan, its colonies,

mandated territories, Manchuria area, and occupied territories which had been influenced by Japan's war policies during the war mobilization period as well as the movements of local pro-Japanese factions and "those with Japanese status."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had been in conflict, response, and compromise, is also importa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ointed out that the Japanese authorities'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is a system of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an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ppeared in the context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ing to such critiques.

It is not surprising that document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an be found relatively easily in occupied territories or battlefields of the Second World War when the confrontation between Jap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me blatant. In colonies, Pacific islands, and Manchuria, where Japan had politically dominated before the Second Sino-Japanese War or from the early 20th century, it is difficult to find documents using the search keywords "comfort station" or "comfort women." However, many survivors testified that they had been taken to these regions before the Sino-Japanese War. They consistently recount that they were taken due to abduction or job fraud, were not granted the freedom to go out, and were subject to everyday violence at a place frequented by soldiers and policemen. Before doubting whether these places were brothels or comfort stations and asking them to prove that they were comfort stations, those who ask such questions, and the bystanders should ask themselves why these questions are important.

Although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s been raised as a crime of colonization, war, and misogyny, research on the scope of victimization to investigate the truth still has a long way to go. Only by identifying the patterns and causes of each victimization would the perpetrators apologize and reflect and would the civil society look back on our everyday lives, which are connected across time and space, in relation to historical flows and work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The difficulties and lack of research on the scope of victimization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have been pointed out several times, and several publications on the topic were issued. We should uncover and deconstruct the matrix that surrounds the victims, focusing on our individual research while also working together. To do so, we desperately need to

review existing literature and relevant literature and build a systemic and consistent research plan.'

3. How to conduct research on victimization

I have long thought that it is important to research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Some Japanese researchers who heard my thoughts advised that "it is not important to find wh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Clarifying the structure of violence that underlies the wartime sexual slavery system is important." While I agree with this opinion, I could not stop identifying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I made a list of women who were classified as "barmaid," "special agent," "comfort station worker," and "prostitutes" in Japanese official documents, looked through the names of stations and identifying information of women mentioned in memoirs of soldiers and comfort station managers, and added presume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who were recorded in relevant directories to the list.

The background behind my obsession with making a list of victims was greatly influenced by my experiences with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where I worked for 4 years since 2005. Those who were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or missing (presumed)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were in complicated situations. They felt guilty for not adequately consoling the victims even though they felt sorry, and for the time they sometimes resented the victims. They also felt that the years the victims and families had to suffer under the community's perception of victims as "shameful beings" were unjust. They wanted to register the victims a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with the government to seek consolation for victims, redress for the families, and "reparations." However, unlike forced labor or forced conscription, it was difficult to confirm victimization a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unless the victim had directly recorded or recounted her experiences. Thus, the majority of those who reported were left as "impossible to judge."

I problematized the contradictory and bizarre situations surrounding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where victims tried to conceal their experiences but the community noticed and victimized the victims once again, the family victimized the victims while also suffering, and the perpetrators utilized human trafficking mechanisms of licensed prostitution

at the time, forced mobilization system, and civilians to conceal their interference but the onus of having to prove those who were involved fell on the victims who would otherwise not be able to confirm their victimization. I felt responsible for responding with “impossible to judge” to families who considered registering as “comfort women” victims with the government to be “redress” in the mid and late 2000s and became immersed in making a list of victims.

However,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has been disbanded, families who saw the victims before and after mobilization started passing away, and people who justify their stances with “words” of survivors who cannot speak are emerging. Given such circumstances, I am afraid what meanings would identifying victims have.

Furthermore, to confirm the scope of victimizat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not just the victims/families but more so the mobilizers’ network or mobilizers under the forced mobilization system, and more so the managers of comfort stations, and even more so the military and local consulate policemen/soldiers who selected the managers and the people who provided various documents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transferring “comfort women.” However, under the justification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data on major figures are erased, making it difficult to confirm information based on other people’s investigations or research or to present findings from my investigations.

As temporary research and investigation are dispersed with no organized investigation system and no consensus reached on the fairness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major data are anonymized, results are not disclosed, and data is subject to power. Thus, we need an investigation-research system under the premise of respecting one’s research or investigation that cross-examines each other’s achievements and shares the actions of perpetrators involved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rime. It is important to clear the possibiliti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ut the actions of those involved should not be hidden under the justification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important not just to blame or punish, but to also look back at the people who are involved among us. It is also necessary for us to reconfirm the fact that those who have used others for their advantage, no matter what situation they were put in, should pay

the price.

4. Rewrit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istory together

The concern on the post-survivor era paradoxically shows that we have relied heavily on victims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hile victims were excluded from information and could not negotiate on an equal footing with people around them in the process of being mobilized as “comfort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and abandoned after the war, we still asked victims about their “victimization” and sometimes whether they can “prove” it.

However, the investigation of truth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should be the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who planned and organized such wartime sexual slavery system. Documents must be read critically as they were produced in ways that objectified or concealed victims. The significanc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istory writing lies in not repeatedly perpetuating the power, society, and dynamics that did not allow victims to live their everyday lives with autonomy. The methods and directions for history writing should be found in the stories of the victims. The victims’ words differ based on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deny or repeat certain words, and change meanings within relationships. The victims’ stories can be heard not only through the words of the survivors who stand in front of us but also through critical readings of the memories of acquaintances, traces of space, and materials. The storie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ill continue to resonate with us in the post-survivor era if the pain the victims suffered through and the structures that perpetuate sexual violence continue. History writing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possible when we actively listen to the stories and create new stories together.

Session III.

For another 30 years to come,
future generation discussion

Moderator: Kang, Sung Hyun
Assistant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Kim, Tae-Jung, My Sister's Home

Choi, Na Hyeon, Korea-Vietnam Peace Foundation

Choi, SungYong, Ph.D. student, SungKongHoe University Research of Asia
Culture

Choe, Yerin, Seoul National University

